

의 대화를 이루지 못함이 유감이지만 우리 정부도 동의했던 행사이기에 그 의미를 말하고 성공도 기원해주는 것은 인사라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자유민주주의를 저해하고..." 찬양·고무라니 이 얼마나 비상식적 판단입니까?

(2) 사제단의 금수산 기념공 방문도 그렇습니다. 방문자들에게 의례적인 과정이요, "로마에서는 로마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하라"는 말도 있듯이 북녘의 동포들이 존경하는 인물에게 그들 식대로 "례"를 드리는 것이 인간도리요 상식이라고 단순히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의례적 수사를 써서 '경애하을 김일성 수령님'이라 호칭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구원의 의미인 영생을 빌고 조국통일·평화를 비는 마음으로 방명록에 서명한 것 뿐입니다. 한 사제의 종교적·사회적 행위가 찬양·고무일 수 없으며, 이를 처벌한다면 망자에게 상당한 예를 표하는 우리 전래의 미풍양속과 종교를 처벌하는 비상식적인 처사에 다름 아닐 것입니다.

무엇이 사목자다운 태도인가

(3) 8월 15일 '통일 대축전'에 참여하고 그곳에서 하게 된 연설도 그렇습니다. 나와 전종훈 신부가 통일축전에 참여한 것은 아홉명 사제의 공동의 결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결정은 고의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사제의 직분을 다하기 위하여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고뇌와 갈등의 결단이었습니 다. 축전참여를 거절하고 돌아오려는 우리에게 "신부님들은 돌아가시면 그 만입니다만 우리 조선 천주교회의 처지는 어떻게 됩니까? 남은 양들을 돌보아 주십시오"라고 말하며 눈물짓는 북한 신자를 보며 우리는 무엇이 과연 사목자다운 태도인지 많은 고뇌와 갈등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회주의 체제에서 그나마 명맥을 유지해 가는 북녘의 신자들을 저버릴 수 없다는 고뇌와 양심의 소리 때문에 2명만 축전에 파견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또한 방북사제들의 공동결정에 따라

통일축전에 참가해서 연설을 한 것은 소위 '친북활동'이 아니라 오히려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몫을 해낸 것이라고 자부합니다.

재벌과 권력자들은 자유롭게 넘나들고

나는 통일축전 행사중에 공개적으로 신앙에 입각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첫째, 남북 가톨릭교회의 교류 차원에서 사제단이 방북했고 현재 7명의 사제가 성모승천대축일 미사와 평양 장충성당 건립 10주년 기념미사를 봉헌하고 있고, 이들이 축전을 축하하는 메시지를 보내기 위하여 나와 전종훈 신부를 보냈다는 사실. 둘째, 북측이 먼저 제안하고 남측이 수락한 하나의 대화에 대한 꿈이 무산된 유감을 표명하고 다음해에는 하나의 대화를 이루자는 것. 셋째, 남북 정부가 7.4공동성명 정신과 남북기본합의서를 준수하고 실천할 것. 넷째, 남북당국자의 즉각적인 대화를 촉구하고, 거래의 하나됨을 위한 기도를 2천여 참석자들과 함께 바쳤습니다.

이것이 북을 찬양하고 고무한 것입니까? 마지막으로 당국의 행위가 전근대적이고 반역사적인 처사임을 고발하며 역사를 바로 세워주기를 청합니다. 이 시대의 과제인 통일을 위해서는 남북을 하나로 만드는 민족전체의 공동의 이해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데 특수한 이익집단의 이해관계만 일방적으로 관철되고 일반대중은 배제되고 소외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부 소수 재벌과 권력 집단들은 남북을 자유롭게 넘나들고 이제는 소까지도 넘나들고 유급선까지 오가는데 일반대중, 애국시민단체들은 한발자국도 못 움직이고 움직여도 국가보안법의 칼날을 걸어야 하는 현실은 무엇을 말합니까? 누구는 막대한 달러를 제공하고 특히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기 위해서 경제적으로 엄청난 액수의 달러를 주거나 보장해도 되고 누구는 북녘동포 돕기로 모금하여 보내준 것이 적대국

가에 대한 자금공여가 되어 죄를 뒤집어써야만 합니까?

전근대적인 보안법 지배 사회

지금은 좌·우, 진보와 보수,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넘어서 21세기를 특징지우는 지구화나 '제3의 길'의 지향점을 잘 이해하며 통일정책을 새롭게 세워야 할 때입니다.

이런 역사적인 때에 아직도 국가보안법이 이 나라를 지키고 한반도의 미래를 보장하는 우상으로 자리잡아 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으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야말로 전근대적이요 반역사적인 사회에 다름 아닙니다. 국가보안법으로 이 나라를 수호하려고 하는 한 이 나라 이 민족의 통일의 새 역사는 맞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제의 양심과 인격 가두는 사회는 불행한 사회

이번 사건은 '햇빛 정책'으로 남과 북의 화해와 평화공존의 물꼬를 트려는 김대중 정부의 통일정책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사건이라 생각합니다. 분단 반세기를 살아온 나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은 민족의 화해를 통한 평화통일이 주님의 기쁜 소식을 굳게 믿고 북을 정신을 살아왔습니다. 죽는 날까지 사제일 뿐인 우리는 이 북을화를 위한 증거 외에는 정치적 야심이나 소영웅심으로 돌출행위를 해야 할 아무런 목적도 없습니다.

신앙과 양심의 자유에 따라 남북교류와 협력, 거래의 통일을 위해 실천한 행위가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 나는 고난과 십자가의 선물로 기뻐하고 기꺼이 짊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사제의 인격과 양심적 행위를 감옥에 가두고 심판하는 사회는 참으로 불행한 사회이며, 병든 정부의 자기 증상을 드러내고 것입니다.

정의로운 법과 합당한 적용에 의해 나와 사제단의 활동이 심판받길 고대합니다.



평화와인권

PEACE & HUMAN RIGHTS WEEKLY NEWS

·주소 [561-162]전주시 덕진구 진북2동 1034-1 숲정이성지사회관 ·전화) 0652-276-1253 ·팩스) 274-7486 ·통신D) onespark(천.나.독두) ·E-mail : human@kor.inp.or.kr ·Homepage : http://kor.inp.or.kr/onespark

제 120 호

1998년 11월 2일

발행처 :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발행인 : 문규현 · 김승환
편집인 : 문만식

현장에서 일하고 싶다

익산 만도기계 구속노동자 첫 공판

총파업 등과 관련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된 익산 만도기계 노동자들에 대한 첫 공판이 지난달 29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조병훈 판사) 심리로 열렸다.

법정에 선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파업이 "여기서 물러나면 다 굶어죽는다"는 심정으로 선택한 최후 수단이었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 구속 노동자들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시인했으며 모두 3년형을 구형받았다.

이날 재판을 받은 만도기계 노동자들은 노조위원장 이충언씨 등 모두 7명.

이들 가운데 최선규씨는 경찰병력이 익산공장 정문에 배치돼 노동자와 가족들의 출입을 통제하던 지난 9월 1일, 사수대원으로 공장 안에 있다가 갑자기 전경 대오에 혼자 달려들어 '쇠파이프로 전경에 2주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당시 현장을 목격한 노동자들과 가족들에 따르면 최씨는 공장 안에서 정문을 지켜보던 중 자신의 부인이 전경들과 신랑이 끝에 쓰러지는 것을 본 순간 달려나갔다. 최씨는 도리어 전경들로부터 집단 구타를 당했지만 치료 한번 제대로 받아보지 못하고 옥살이를 하다 이날 법정에서 섰다.

나머지 여섯명의 노동자들의 혐의도 폭력, 업무방해 등이다. 지난해 12월 4일부터 올 5월 1일까지 비디오텍싱, 장기자랑, 족구시합을 하는 등 41회에 걸쳐 회사업무에 방해하고, 9월 3일 경찰관들의 진압(및 체포) 업무를 방

해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이다.

당시 노조위원장이 총파업을 지휘했다는 이유로 구속된 이충언씨 등 일곱명의 노동자들은 그동안 피랍으로 일구어온 회사가 부도사태 이후 오히려 당당하고 무책임한 것에 대해 재판 진행 과정 내내 분노를 표출했다.

만도기계는 자동차 에어컨과 브레이크를 생산하는 국내 최대의 자동차 부품회사다. 만도기계 노사는 지난 2월 23일 "인위적인 감원조치를 하지 않는다"는 고용합의서를 작성한 바 있다. 그러나 8월 10일 회사측은 이를 일방적으로 파기했고, 4천 5백여 조합원 가운데 1천 1백 63명에 대한 정리해고를 통보했다. 이에 상여금 삭감과 임금상습체불로 반일업상태에 놓여있던 만도기계 노동자들이 8월 17일부터 경찰병력이 투입된 9월 3일까지 18일째 전면파업을 벌였다.

선고공판은 11월 13일 오전 9시 30분에 있다.

"영장실질심사 받을 권리 고지 안해 석방"

수사기관 형식적 고지에 제동

수사기관이 피의자와 그 가족에게 영장실질심사를 할 것인지를 묻지 않아 피의자가 구속됐다면 석방해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전주지법 민사합의3부(재판장 박시환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된 박모씨(28)에 대한 구속적부심에서 "경찰이 피의자 박씨에게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을 것인지를 분명히 묻지 않고 영장을 청구한 것은 불법"이라며 "구속된 박씨를 석방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또 "경찰이 박씨의 가족들에게 실질심사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우편으로 물었다지만 우편물 도착일이 영장청구 시점보다 6일이나 늦게 도착한 것은 고지절차가 누락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권리를 피의자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법원이 수사기관에 보정명령(피의자 가족들에게 직접 연락해 신청여부를 재확인하는 제도)을 내린 일은 있지만 구속적부심에서 이를 이유로 피의자를 석방하기는 처음이다.

따라서 이번 결정은 수사기관이 구속영장 청구단계에서 피의자와 가족들에게 영장실질심사 고지의무를 형식적으로 해온 관행에 제동을 건 것으로 평가된다.

현행 형사소송법 규정에는 구속대상인 피의자는 본인 뿐 아니라 가족들도 영장실질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검찰은 지난 6·7월 경찰을 상대로 한 '사건실무규칙 교육'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 피의자의 가족들에게 전화연락이 안될 경우에는 서면통지만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지시했다. 또 실질심사 신청 여부에 대해서는 굳이 가족의 학답까지 받을 필요는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결국 경찰이 피의자의 가족들에게 서면통지만 보낼 경우 구속이 이미 집행된 뒤에야 가족들에게 소식이 전달돼 실질심사 기회를 잃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누구나 마음놓고 길을 권리 시민 보행권, 기본적 권리로 받아들여져야

“사람은 누구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속에서 길을 권리가 있다.”

이 지역에서 보행권에 대한 최초의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녹색교통시민연대(전북시민운동연합 외 5개 단체) 주최로 지난달 28일 전주 시청 회의실에서 열린 <보행권 조례 제정 운동 및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토론회>는 보행권의 개념부터 보행환경 개선운동의 전망까지 두루 점검해 보는 진지한 자리였다.

“전주도 자동차 중심에 보행환경이 매우 열악한 도시”라며 전주에 온 소감으로 운을 댄 박은호 녹색교통운동 정책실장은 “보행환경개선운동의 과제와 전망”이라는 제목의 주제발표에서 “보행권 문제는 일반의 무시와는 달리 ‘살의 질’, 나아가 ‘생존권’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박실장은 또 “보행환경개선은 대중교통으로 자연스럽게 관심을 이전시켜 도시교통문제가 ‘밝은 빛’을 가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실장은 “보행환경 개선에 대한 행정과 시민의 책무를 사회적으로 공식화한다는 것이 조례제정이 갖는 의의 가운데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입법, 계획수립, 시행, 모니터, 평가의 전과정에서 시민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에서 보행권에 대한 법적 논의가 전혀 없었던 가운데 이날 토론회에서는 보행권의 헌법적 근거를 찾으려는 시도가 주목을 끌었다. 「보행자 권리와 보행환경」이라는 제목의 주제 발표에서 김승환(전북대 법대) 교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 제1문 등 보행권을 인정할 헌법적 근거는 다양하다”며 “보행권은 행정법적 의미의 도로의 자유이용권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헌법적 의미의 기본권”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유일하게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보행권 확

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조례」를 제정했으나 보행자의 보행권을 효과적으로 보장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장 큰 이유는 이 조례가 보행자의 보행권을 확보하기 위한 제제조항이나 강제조항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김교수는 따라서 “국회가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말하고, “이 법을 토대로 도로교통법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중 보행권의 보장에 미흡하거나 위헌적인 소지가 있는 조항들을 수정하거나 제거해야 하고, 필요한 조항들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많은 사람들이 쉽게 지나치는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보행권’ 문제도 제기됐다. 특히 방청객으로 참가한 한 시각장애인은 “장애인에게도 행복추구권이 있다”며 “조례에 반영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토론사로 나온 이환주 전주시 도시개발국장은 “지금까지 차량의 주행성에만 관심을 가졌지 보행권을 생각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며 “앞으로 도로를 낼 경우 보행자도 도로를 먼저 확보하고 다음에 자동차 도로를 만들고 나서야 차도를 확보하겠다는 것을 시의 가장 큰 교통정책과제로 삼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 행사와 동정 】

- ▶ **현대자동차(봉동 공장) 제3차 공판(증인신문)**
이동희, 유기준, 구자영 / 11월 3일 오후 1시 / 전주지법 1호 법정
- ▶ **자주·혁신대오 사건(국가보안법 제7조 등 위반 혐의) 선고 공판**
주영식 외 8명 / 11월 4일 선고(오전 9:30 광주교법 제1항소부)
- ▶ **문규현 신부·강희남 목사 제2차 공판**
11. 6(금) 오후 2시·4시 / 서울지법 419호 대법정
- ▶ **'98 민중대회 노동자전야제**
11. 7(토) 오후 8시 / 서울 여의도 한강둔치
- ▶ **생존권 사수! 제벌해체! IMF 반대! '98 민중대회**
11. 8(일) 오후 2시 / 서울 여의도 한강둔치

그러나 이국장은 전주시가 9월 중순부터 시행하고 있는 이른바 ‘기초환경 4대질서 확립’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혀 인권으로서 보행권을 주장한 발제자들과 인식차이를 드러냈다. ‘기초환경 4대질서 확립’이란 △주정차 위반 △불법적처치물 △노점상 △불법광고물 등 네 가지를 단속한다는 전주시 정책이다.

[알림] 인권에 관련된 정보를 알려주십시오.

오늘도 인권의 제약없는 실천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여러 단체와 개인 여러분께 연대의 인사를 드립니다. 계획하고 계신 사업, 현장소식, 구속자들의 상황, 재판소식 등 인권에 관련된 정보를 전 북평화와인권연대에 전화나 팩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정보의 공유는 각 단체 및 개인들 간의 연대의식을 높이고 국내외 지역의 인권현실을 개선하는 데 힘이 될 것입니다.

※ **재정이 매우 어렵습니다. 후원금을 보내주십시오. 주간 평화적인 권은 여러분의 후원금을 받아 발행합니다.**

구독문의: 0652) 76 - 1253
후원계좌 · 예금주 문규현
국민은행 512-21-0065-982
우체국 402297-0062450
전북은행 535-21-0304454

<요약> 익산 만도기계 최후진술 요약 “가족 생계 위한 최후수단이였다”

▶ 이충언(모두진술) : 모회사인 한라중공업의 방만하고 부실한 경영 결과로 만도기계가 흑자부도를 냈다. 책임은 노동자에게 전가됐다. 임금도 400%나 체불돼 있어 노동자들은 힘들게 생활해왔다.

이번 파업은 한 가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저항이었다. 정부는 날치기 통과된 정리해고법을 남발해 국민의 다수인 노동자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

▶ 육종근(최후진술, 이하 같음) : 만도기계는 노동자들의 피와 땀으로 이익을 남겨온 회사다.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흑자부도’를 내기도 경영진들은 전혀 책임지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너무 답답하고 억울하다.

우리 노동자들은 아이들 다니던 학원, 유치원도 다 그만두게 하고 절박한 생활을 해왔다. 여기서 물러나면 다 굶어죽는다는 심정에서 최후 수단으로 선택한 파업이었다. 아직도 체불임금이 남아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섰다면 사용자들도 똑같이 처벌받아야 한다. 사용자들도 처벌해달라.

▶ 정병욱 : 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여러 회사에 다녔다. 다니던 회사들마다 노동자들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일이 많았고 그걸 많이 봐왔다. 그 뒤 만도에 입사해서는 노동자들에게 폭력이 가해지는 일이 없는 것을 보고 놀랐다. 노동자의 권익도 어느 정도 보호되고 있었다. 그 이유가 노동조합이 있기 때문이란 걸 알고 노조에 가입해 알해왔다.

평화적 파업에 여러 차례 참여해왔고 그때마다 노사가 성실히 교섭에 임해 타결이 되곤 했다.

그러나 이번 파업은 경우가 다르다. 안전장치도 없는 기계에 손가락이 잘리고, 일주일 계속되는 철야로 과로사해 죽은 노동자도 있다. 기계에 머리가 끼어 죽는 일도 있었다. 이렇게 일

해온 선배 노동자들을 길거리로 내모는 것을 볼 수가 없어 노동조합 간부로서 파업에 참여한 것이다.

9월 1일 사건으로 최선규 동지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처사죄를 적용한 것에 대해 할 말이 있다. 당시 평화적 농성이었다. 정문 출입도 가능한 상태였다. 자동차 부품을 실은 트럭이 오가기도 했다. 그런데 갑자기 경찰이 들어닥친 것이다. 이 소식에 놀라 갑자기 달려온 가족들이 경찰들에게 폭행당했다. 이를 보고 어떤 가정이 말리러 나가지 않겠는가. 다친 전경에 대해서는 미안하고 뭐라 할 말이 없으나 척추가 골절당하고 갈비뼈가 부러진 조합원 가족들, 전투화에 채여 정강이뼈가 시퍼렇게 멍든 어린이들은 어떻게 할 건가. 특수공무집행방해처사죄는 처벌로 끝나도 피해가족들 한은 어떻게 치료할 건지 의문이 든다.

9월 3일 경찰병력 투입에 놀라 유산한 임신부도 있다고 들었다. 공권력이라는 것에 회의감을 느낀다.

▶ 이승엽 : 파업하면 무조건 다 불법인가. 고용조정 관련 사안은 중요한 근로조건의 하나로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지 않는가. 묻고 싶다.

정부가 소위 공권력을 투입하면서 들이댄 논리는 “만도기계가 파업하면 현대자동차가 영향을 받고 이는 곧 경제위기로 이어진다”는 것이었다. 이는 “동네수퍼가 문닫고 휴가를 떠나면 주민이 불편을 겪기 때문에 휴가를 가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나 같다. 그렇다면 노동자의 소리는 누가 들어준다는 것인가.

▶ 이장호 : 노숙자가 들어가고 있다. 우리도 노숙자가 되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노동력을 팔아 임금을 받아야 한다. 이런 처지에서 정리해고라는 무서운 칼날에 주저앉을 수 없어서 노동자라

면 하지 않을 수 없는 최후의 발악을 한 것이다. 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었는지 재판부는 깊게 생각해달라.

▶ 신동진 : 이 재판정에서 있는 것이 안타깝다. 노동자들이 만든 IMF가 아니라 이 나라에서 군림하는 정치권과 자본가가 만든 IMF 극복을 위해서 지금 당장이라도 땀흘리며 일해야 하는데 여기 이렇게 서 있다.

파업하면서 정부와 사용자에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았다. 일하게 해 달라고 했고, 쫓아내지만 말라고 요구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84년 4월에 경기도 안양에 있는 만도기계에 입사했다. 그때만 해도 만도기계 공장은 그 것 하나 뿐이었다. 만도를 지금까지 발전시킨 것은 노동자의 땀과 손가락과 목숨이었다. 그런데, 기업에서 노동자의 경영참가를 불허하고 자기네끼리 경영해 부도가 나자 노동자를 해고했다. 그 경우 우리 행동은 무엇이겠는가. 내가 구치소에 있을 때 다섯 살 난 아들이 면회와 “아빠, 내 친구는 유치원 갔어. 아빠, 빨리 나와서 산에 놀러 가자” ... 우리 요구는 가정을 지키기 위한 요구였다.

국민의 정부도 믿을 수 없고 의지할 수 없고 경찰력도 믿고 의지할 수 없었다. 정리해고에 맞서 조금 서투른 면에서, 그리고 생존 사수과정에서 경찰과 대처해 불미스러운 일이 있기도 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방어적이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한 최소한의 발악이었다. 다시 현장에 들어가고 싶다. 노동자 단결에 지장없게 해달라.

【안내】 국가인권기구 공주위 홈페이지

http://www.jinbo.net
/~freedom/hurights

국가인권기구에 관한 각종 자료들이 모여 있습니다.

마듯한 손길이 필요한 이웃을 함께 돌보는 여운을 형성하자

김현우(전북여성운동연합 사무국장)

일반적인 사회적 인식과는 달리 실태 조사 결과 실직자 중 여성가장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우리 지역의 경우도 여성실직자 중 40% 가까이 여성가장이라는 통계가 나오고 있다. 더구나 이들의 소득은 기본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소득이기 때문에 점점 극빈으로 전락할 가능성을 매우 높게 지니고 있다.

여성의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권리의 보호와 증진은 지속가능한 사회 경제적 개발의 기본이다. 무역자유화는 가장 가난한 사람들과 공식부문에서 제외된 주변계층 사람들을 더욱 취약하게 한다. 특히 가난한 여성들은 많은 불이익을 당하여 어떤 새로운 기회도 이용할 수 없는 처지가 되고 있다.

우리단체에서는 실직여성가장겨울나기사업으로 도움이 필요한 여성들에게 직접적으로 쌀과 연료를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다. 처음 시작할 때는 그다지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막상 지원범위를 홍보하고 신청자들을 상담하고 접수를 시작하면서 다양한 처지들로 인한 어려움이 발생했다. 언론과 방송매체를 통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층들은 그래도 다행이었다. 하루라도 일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대다수의 여성가장들은 신청하러 오는 시간조차도 낼 수 없으며, 정부나 민간차원의 지원대책에 관한 정보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어려운 여성들을 찾아 현장으로 가기로 하고 현장에서 수백명을 상담하면서 많은 고통과 혼란으로 괴로웠다.

그들의 고통과 어려운생 활이 정말이지 나중에는 지긋지긋(?)하기까지 했다.

또한 이들의 이런 삶들이 그 어느 곳에서도 제대로 조사되고 있지 않으며 대책 또한 수립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놀랍고도 분노스러웠다.

저소득 실직여성가장들의 경우 학력

하루를 사느라고 자신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호소할 여유조차 없이 살아가고 있는 저소득 실직여성가장들의 생활을 체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도 낮고 나이도 많으며 아무런 기능도 갖고 있지 못해 이들이 하는 일은 대부분 일용직이다. 그러나 이러한 일자 리조차 줄어들고 있어 일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임금 또한 낮아지고, 노동감도는 높아지고 인격적인 대우도 나빠지고 있어 더 힘들다고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들은 그야말로 가진 것은 몸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의 건강상태는 보통사람들 이라면 병원에 장기 입원을 하고 있어야 할 정도로 악화되어 있었지만 일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병든 몸으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

수많은 여성가장들이 비공식영역에서 생존을 위한 처절한 삶을 견뎌내고 있음에도 그들의 일자리를 달라는 소리 없는 외침을 외면하고 여성이란 이유만으로 일할 권리를 박탈하고 사지로 몰아가고 있다. 생계보조자라는 인식으로 말이다. 저소득여성가장들의 실직은 남성가장들의 실직과 같은 문제를 안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대책은 물론 재취업의 기회도 없다. 이들은 빈곤으로부터의 탈출기회를 차단당한 채 빈곤을 세습해나가고 있다

쉬지않고 일만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저소득 실직여성가장들의 삶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사실이 오늘의 경제위기를 만들지 않았을까? 그들은 경제, 정치, 사회, 복지 등의 전문가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

죽지못해 하루하루를 전쟁처럼 버티며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국가와 사회는 어떤 존재이고, 또한 이웃은 무엇인가?

정말 그렇게 어려운 사람이 많아! 정말 굶는 아이들이 있어! 설마, 바빠서 밥을 못먹는 것이지 쌀이 없어서 못먹는 것은 아닐테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리고개 이야기를 듣고 라면 끓여먹지 왜 굶어! 라고 의아해 하면서 되묻는 아이들의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다. 하루를 사느라고 자신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호소할 여유조차 없이 살아가고 있는 저소득 실직여성가장들의 생활을 체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올바르게 실태를 파악하지 않고 경험하지 않은 삶들에 대한 속단과 편견은 이 실업의 시대에 엄청난 살인무기가 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총, 칼보다 더한 무기가 되어 저소득실직여성가장들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여성실직가장들의 처지는 그의 학력이나 기능, 나이 여하를 불문하고 그렇게 많은 차이를 드러내지 않고 같은 처지가 되고 있다. 한 부분에서의 소외는 모든 소외를 가져오고 있었다. 우리 사회는 지금 실업문제의 완충역할을 여성에게 요구하고 노동으로부터 퇴장시키고 주변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여성소외는 역사의 후퇴이다.

IMF 이후 경제위기로 인한 가족해체 위기가 확대되고 편부모가정이 늘어나고 있다. 그동안 우리 사회의 최후의 보루로 간주되어 왔던 가정까지 사회 안전망의 구실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정서적 불안감을 완화시키기 위한 지원대책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평화와인권

PEACE & HUMAN RIGHTS WEEKLY NEWS

제 121 호
1998년 11월 10일
발행처 :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발행인 : 문규현 · 김승환
편집인 : 문만식

·주소 [561-162]전주시 덕진구 진북2동 1034-1 숭정이성지사회관 ·전화) 0652-276-1253 ·팩스) 274-7486
·통신D) onespark(전.나.녹두) ·E-mail : human@kor.inp.or.kr ·Homepage : http://kor.inp.or.kr/onespark

“민중연대 새 희망을!” '98 민중대회 서울 여의도에서 열려

민주노총, 전교조, 빈민연대 등 60개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한 '생존권 사수·재벌해체·IMF반대 민중대회'가 4만여명이 모인 가운데 8일 오후 1시 서울 여의도 한강둔치에서 열렸다.

이날 대회에서 이창복 '고용·실업대책과 재벌개혁 및 IMF 대응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는 "오늘 민중대회를 계기로 노동자, 농민, 빈민을 비롯한 각계 민중세력이 똘똘 뭉쳐 민중이 승리하는 세상을 만들자"고 밝혔다.

이어 이갑용 민주노총 위원장은 "김대중 정권은 노사정위를 정리하고 관철과 IMF식 구조조정을 위한 탄압기구로 전락시켰다"며 "민주노총 60만 조합원이 민중연대 투쟁으로 세상을 바꾸어 나가자"고 강조했다.

이날 대회에서 참가자들은 결의문을 채택하고 '10대 요구'를 발표했다. 10대 요구는 △경제파탄 재벌총수·정치인·관료 처벌, 부정축재 재산 환수 △부당한 IMF협약을 철폐와 외채당감 △정리하고 중단과 주40시간 노동제 실시 △고용세 도입, 군비축소로 모든 실업자에게 실업수당 지급 △무주택

자·철거민 주거권, 노점상 합법화, 장애인 생존권 보장 △방송개혁, 언론 개혁, 공정정보 실현 △노동조합법 개정으로 교원노조 법제화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실시 △무분별한 민영화·해외매각 중지 △국가보안법 철폐 및 양심수 전원석방, 민족민주열사 명예 회복특별법 제정 등이다.

민중대회 참석자들은 본대회가 끝난 뒤 여의도 전경련회관까지 행진해 마무리 집회를 갖고 대회를 마쳤다.

이에 앞서 7일 저녁에 열린 전야제는 매년 치러지던 '노동자대회' 내용으로 진행됐다. 노동자대회를 따로 갖지 않게 됨에 따라 대부분의 민주노총 소속 산업별 연맹들은 8일 여의도 곳곳에서 민중대회에 앞서 연맹별로 사전대회를 가졌다. 금속산업연맹은 11시부터 전국금속노동자결의대회를 열고, 택시 월급제 실현을 위해 11월 11일 총파업을 앞두고 있는 민주택시연맹은 12시부터 총파업 출정식을 가졌다.

민중대회 공동대회위원장들은 각 정당과 국무총리실을 방문해 '민중 10대 요구안'을 전달할 계획이다.

한편 민주노총이 노동자대회를 열지 않고 민중대회에 참여하기로 결정하기에 앞서 민주노총 내에서는 "대량 정리하고 등으로 집중적인 탄압을 받고 있는 노동자들의 요구를 부각시키기 위해 예년처럼 노동자대회를 열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출돼 논란을 빚기도 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대회 참가자 가운데 14명을 대회가 끝난 뒤 연행해 선

별 구속하겠다고 밝혔다.

현대자동차 3차 공판 회사측 증인들, 증언 번복

지난 3일 전주지법 1호법정에서 형사 3단독부 심리로 현대자동차 전주지부 조합원 류기준씨 외 6명에 대한 3차 공판이 증인신문으로 열렸다. 이날 공판에는 관리지원 박완식(43)·김중철(49)씨가 증인으로 나섰다.

박완식씨는 특히 "조합원인 구자영씨가 자신의 목살을 잡고 목에 칼을 들이대며 죽이겠다고 위협했다"던 진술을 바꿔 "같이라는 느낌이 드는 쇠붙이를 들이댄 사람이 누구였는지는 몰랐다"고 말해 객관적인 증거없이 주관에만 의존해 조합원들을 고소했음을 드러냈다.

구자영씨 등 7명은 업무방해 이외에도 지난 7월 총파업 당시 회사 관리지원인 박완식·김중철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지난 9월 25일 긴급체포영장이 발부돼 수배를 받아오던 현대자동차 전주지부 대의원 김만석(29)씨와 김재식(30)씨가 구속됐다.

이들은 지난 2일 오후 원주경찰서에 자진출두해 조사를 받아왔으며 4일 오후 4시 전주지법 5호 법정에서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 뒤 구속돼 현재 전주교도소에 수감돼 있다.

망도기계 보석으로 석방

망도기계 파업 당시 구속수감된 익산 지부 이충언 지부장 외 6명이 5일 오후 금보석으로 모두 석방됐다.

지난 11월 6일로 예정됐던 을 단편 일부 김희남 목사 2차 재판이 연기됐습니다. 불확는 재판부가 추후에 결정·통보하게 됩니다. 결정되는 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인혁당, 유신정권이 조작”

진상규명·명예회복 위해 대책위 발족

‘인민혁명당(인혁당)’ 사건으로 죽음을 당한 8명의 명예회복작업이 추진되고 있다.

‘인혁당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대책위원회’(공동대표 이돈명·문정현)가 9일 발족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대책위에는 홍근수 목사, 김승오·김승훈 신부, 현기영 민족문화작가회의 자유실천위원회 위원장, 최영도 민변 회장 등 각계 인사 100여명이 참여한다.

대책위는 앞으로 당시의 공판기록을 검토, 인혁당사건 재심청구 등 법률적 대응을 하고 문화예술계 관계자와 함께 사건관련 연극·영화 공연도 추진할 예정이다. 대책위는 또 인혁당 희생자들의 사형이 집행된 옛 서대문형무소 자리에 추모비 건립을 추진하는 한편 백서 발간 등을 통해 진상규명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인혁당 사건은 긴급조치 4호가 선포됐던 지난 74년 4월 당시 중앙정보부(현 국가안전기획부)가 민청학련사건을 일으키고 배후조종한 혐의로 이수병·도예중씨 등 8명을 구속했다고 발표하면서 세상에 알려졌으며 이들은 이듬해 4월 9일 대법원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지 20시간도 안돼 사형이 집행됐다.

당시 이 사건 관계자 23명은 국가보안법, 반공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비상보통군법회의와 비상고등군법회의, 대법원 등 3심을 거치는 동안 법정진술과 가족들의 증언을 통해 중앙정보부의 고문에 의해 사건이 조작됐다고 결론 주장했다.

특히 외국인 조지 오글 목사와 제이스 시노트 신부는 공공연히 “수사기관의 고문 때문에 사건이 조작됐다”고 주장해 추방당했고, 사형수 8명의 몸에 남은 고문흔적을 없애기 위해 가족들의 저지에도 불구하고 당국에 의해 사체가 강제 화장돼 ‘인혁당 사건은 유신정권의 조작’이라는 의혹이 제기

됐었다. 그 뒤로도 관계자 등언 등을 통해 사건이 조작됐음이 하나하나 드러났으며 대표적인 ‘사법살인’(司法殺人)으로 꼽혔다. 제네비에 본부를 둔 국제법학자협회는 대법원에서 사형이 선고되자 “사법사상 암흑의 날”이라고 선포하는 등 국제적으로도 큰 논란을 불렀다.

‘전북대 혁신대오’ 이적단체 무죄확인

광주고법, 나머지는 1심대로

주영식씨 외 8명에 대한 국가보안법 제7조 등 위반 사건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의 결정이 유지됐다. 이에 따라 1심 판결과 마찬가지로 ‘혁신대오’ 이적단체 규정은 조작임이 확인됐다.

광주고법 제1항소부는 지난 4일 오전 선고 공판에서 1심 판결의 증거사실을 모두 인정해 유무죄에 대한 결정은 1심대로 하고 다만 양형에 있어 엄성복씨에 대한 1심의 징역3년 집행유예 4년 형량을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으로 낮추어 선고했다.

1심 결정 직후 검찰과 피고인 양측 모두 1심 결정에 불복해 항소한 바 있다. 이번 항소심 결정에 대해 피고와

변호인측은 대법원에 상고를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통신비밀보호법 보완해야

수사기관의 도청과 감청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부산울산지역 공안조작사건 전국대책위원회’가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방향을 제시했다.

9일 오전 참여연대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연 대책위는 최근 정부가 법무부를 비롯한 5개 부처 명의로 발표한 대국민발표문(통신비밀법 개정 방안)에 대해 반대하고, △무차별적·장기적 감청으로 취득된 자료를 법정에서 증거자료로 채택하지 못하도록 명시할 것을 제안했다.

대책위는 또 △허가된 감청이라도 국제인권기준에 비추어 범죄사실 외의 일체의 내용들은 피해자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채택하지 말고 소멸시킬 것 △감청영장 발부에 대한 심리요건을 엄격히 규제하고 실질적 심의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 △불법으로 이루어진 감청에 대한 구제수단을 명시할 것 등을 개정안에 포함시키라고 요구했다.

*** 재정이 매우 어렵습니다. 후원금을 보내주시고, 주간 평화적인 권은 여러분의 후원금을 받아 발행합니다.**
구독문의: 0652) 76 - 1253
후원계좌 · 예금주 문규현
국민은행 512-21-0065-982
우체국 402297-0062450
전북은행 535-21-0304454

【 행사와 동정 】

- ▶ **실업자 겨울나기 사랑의 바자회**
11. 13(금)~15(일) / 전주 율호관(구 해성중고 체육관)
천주교정의구현전주교구사제단 / 문의: 0652) 276-1253 · 011-689-7486
- ▶ **익산 만도기계 노동자(이충인 지부장 외 6명) 선고공판**
11. 13(금) 오전 9시 30분 / 전주지법 군산지원 201호
- ▶ **제3회 인권영화제-전주 기자회견**
11. 18(수) 오전 10시 / 가톨릭센터 1층 회의실
- ▶ **자주·혁신대오(김천옥 외 2명) 선고공판**
11. 19(목) 전주지법 1호 법정

오사카 노동자들 금요일 집회 참석

“미군부대, 양국 민중에 불행의 근원”

군산 미군기지 앞에서 매주 금요일 12시에서 1시까지 진행되는 ‘군산미군기지 우리찾기’ 금요일집회가 벌써 43번째에 이르고 있다.

시민모임의 금요일집회 참가자의 층이 시민모임 참가단체 뿐 아니라 학생과 노동조합 등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는 가운데 43차 금요일집회는 특별히 일본 오사카에서 온 노동자들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제43차 금요일집회에 참석한 일본 오사카 노동자를 대표해서 하야시 마사키씨는 “일본민중과 한국민중에게 미군의 존재는 불행의 근원”이라고 밝힌 뒤 “일본 오끼나와에서는 모든 주민과 주지사까지 하나가 되어 미군기지 철수운동을 펼치고 있고 오사카, 교토, 동경 등 다른 지역의 노동·시민사회단체도 이와 연대해 같이 힘차게 싸우고 있다”면서 “한국 민중의 미군기지 철수싸움을 지지하며 앞으로 일본의 민중과 함께 연대해서 대응한다면 더욱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해 많은 박수를 받았다.

한편 이날 시민모임은 전국주한미군노동조합 군산지부(지부장 한기홍)가 지난 3일 보내온 공문에 대한 답신을 보내 “그간 약 1년간 40여 차례의 매주 금요일집회는 주한미군측의 잦은 범죄와 지역주민의 피해로 야기된 것이었고, 지속적인 집회를 통해 주민보호차원의 철책공사와 교통사고 및 각종 주한미군범죄 피해자들이 미군측의 사과를 받아내는 등의 성과도 있었다”면서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 개정이 이뤄지기까지 시민모임은 계속해서 싸울 수밖에 없고 이것은 주한미군노동조합의 이익을 위해서이기도 하니 이해를 바라며 다만 조합에서 언급하고 있는 피해에 대해서는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주한미군측과 한국 경찰에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전국주한미군노동조합군산지부에서는 “시민모임의 금요일집회 관계로 업무상

또는 중식관계로 자유로이 기지를 출입할 수 없어 불편을 겪고 있으니 다른 방법으로 항의표시를 해줄 것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98년 11월 3일 시민모임에 보낸 바 있다.

시민모임은 군산미공군기지 부대장과 군산 경찰서장에게도 “금요일집회 시간인 12시에서부터 1시까지 미공군측에서 정문을 봉쇄하는 까닭으로 기지의 한국인 노동자들이 통행에 불편이 있는 듯하니 이들에게 인도적인 차원에서 통행을 허락하도록 협조바란다”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했다.

한국은 미군 범죄천국?

미군범죄수사·재판행사 2.6%

올들어 지난 7월까지 형사범죄를 저지른 주한미군 302명중 단 8명만이 우리나라 사법당국에서 수사나 재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9일 법무부가 국회 법사위에 제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지난 1~7월 미군 302명이 모두 273건의 형사범죄를 저질렀으며 이중 8명(2.6%)이 저지른 6건의 범죄에 대해서만 형사재판 관할권을 행사했다.

8명중 기소 또는 약식기소를 당해 재판을 받은 미군은 6명이었고, 2명은 현재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이는 지난 96년 578명중 23명(4%), 97년 577명중 35명(6.1%)에 대해 형사재판 관할권을 행사한 것에 비해서도 대폭 감소한 것이다.

현행 한미행정협정(SOFA)에 따르면 미군이나 미군속, 또는 그들의 20세 미만 가족, 20세 이상 가족 가운데 생활비의 2분의 1을 보조받는 자에 대해서는 미군측이 수사를 하도록 돼 있으며 확정판결 이전에 우리측이 미군의 신병을 넘겨주도록 요구할 경우 미군은 ‘호의적으로 고려’(Sympathetic

Consideration)토록 돼 있다.

한편 올해 들어 지난 7월까지 미군 범죄는 도로교통법 위반 151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63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40건, 절도 11건, 기타 8건 등 모두 273건이 발생했다.

“야망을 넘어 인권의 세계로”

제3회 인권영화제, 12월 5일부터 9일까지 전북대 합동강당103호에서

제3회 인권영화제가 전주에서 열린다. 전북대학교 총학생회와 전북지역 인권·영화단체가 공동주관하는 ‘제3회 인권영화제-전주’는 오는 12월 5일부터 9일까지 5일간 전북대학교 합동강당 103호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지난 96년을 시작으로 올해로 벌써 세 번째를 맞이하는 ‘인권영화제’는 전국 10여개 도시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전주에서는 서울과 동시에 시작된다.

제3회 인권영화제에서 선보이게 될 영화들은 전세계에서 벌어지는 인권유린의 실상을 잘 담아낸 작품들로 이번에는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IMF·신자유주의로 고통받는 민중들의 모습이 담긴 영화들이 선보이게 된다.

제3회 인권영화제는 1·2회 때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기본권 중의 하나인 ‘표현의 자유’를 위한 투쟁의 일환으로 사전심의를 거부한다. 또한 전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유린의 실상을 대중에게 생생하게 보여줌으로써 대중이 ‘인권’을 배우고 ‘인권’을 느끼는 교육의 장이 되고자 모든 사람들에게 무료로 상영된다.

상업적인 영화만이 범람하고 다양한 장르와 정신을 지닌 영화를 만나기 어려운 우리 현실에서 ‘인권영화제’는 세계 곳곳에 숨어 있는 “인간을 위한 영성”을 발굴하고 그것을 대중에게 보여줌으로써 우리의 건전한 영상문화 형성과 더불어 대중에 대한 ‘인권교육’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권위 독립기관으로, 권한 대폭 늘려

법간단체, 독자적 인권위원회법안 공개

인권법 제정방향에 대한 당·정·민 간단체간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독자적인 인권위원회 법안을 제출, 본격적인 인권법 제정운동에 나서기로 했다.

'인권법 제정 및 국가인권기구 설치 민간단체 공동추진위원회'(공동 집행위원장 박노현, 박원순)는 6일 '인권위원회법'의 올바른 제정방향을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 '인권위원회법'(안)을 제시하고 민간단체들의 입장을 밝혔다.

"인권 범위 축소 불가"

공추위가 법안의 명칭을 '인권법'이 아닌 '인권위원회법'으로 한 것은 '인권의 내용을 법으로 열거해 규정할 경우 인권의 범위를 축소하는 결과를 낳고, 이후 변화하는 인권개념의 형성을 제한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공추위는 "법무부 안이 인권침해행위와 차별행위를 구분함으로써 차별행위가 인권침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다"며 "인권위원회는 모든 인권문제를 관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법무부 시안에서는 빠졌던 사상과 성적지향, 병력(病歷), 행형기록 등도 차별금지사유에 포함시키으로써, 정치적 신념이나 사면·복권의 기록, 동성애자, 에이즈 환자 등의 사유에 의한 차별행위를 제재할 수 있도록 했다.

강력한 권한 부여해야

공추위는 인권위원회를 독립적 지위를 갖는 국가기관으로 하고, 위원의 임명은 대통령이 하되 국회의 청문절차를 거치도록 해, 강력한 위상을 부여하고 있다. 또 인권위원회에 출석요구·자료제출요구·현지조사권을 부여하면서, 조사권 보장을 위해 자료제출 불응시 압수·수색, 출석요구 불응시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또 인권침해 행위와 관련해서 인권위원회

가 구제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으며,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개인이나 사적시설에는 형벌을 부과하고 국가기관에 대해서는 그 기관의 장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해 위원회의 의결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법안 발표에 이어진 토론회에서 법무부 과묵군 인권과장은 종전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으나, 이전과 달리 "이사회를 두지 않는 법인 형태를 수용할 수 있다"는 다소 변화된 의사를 내비쳤다.

한편, 김대중대통령이 언급한 유엔권고안(파리원칙)에 대해 대한변협 차지훈 변호사는 "인권기구에 법인격을 부여해야 한다는 파리원칙은 인권위에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뜻이지 꼭 법인 형태로 만들어야 한다는 내용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차변호사는 법무부의 '이사회 없는 법인'안에 대해서도 "이사회가 없다고 해도 감독기관의 구속을 받기는 마찬가지이므로 독립성 보장은 불가능하다"며 법무부가 법인만을 고집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엘네스티 서한 "법무부안 반대"

이에 앞서 국제엘네스티는 지난달 23일 김대중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법무부의 시안이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안을 촉구했다. 파에르 사네 사무총장 명의의 이 서한은 "법무부 안에 의해 구성될 인권위는 독립성과 조사권이 불충분하다며 인권위원 임명이 정부에 의해 효과적으로 통제될 뿐 아니라 시정조치를 강제할 수 있는 충분한 권한도 갖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사면위는 특히 '법무부 시안이 채택된다면 빈약한 국가인권기구를 설립하게 되는 중대한 위험에 직면할 뿐 아니라 귀하의 인권개선프로그램에 대한 의지와 진실성마저 의심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주주민카드 입법추진

행자부, 이번 국회에서 입법추진

예산부족으로 보류됐던 전자주민카드 사업이 오는 2000년 12월 1일부터 부분시행된다. 이에 따라 사업 전면 백지화 기대는 사실상 무산됐다.

행정자치부는 지난달 13일, 전자주민카드 사업을 오는 200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의원입법으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법에는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돼 있다.

또 당초 2000년 3월 31일까지 전면시행기로 했던 것은 2년을 연기, 2002년 3월 31일까지 주민카드 발급을 마치기로 했다.

[알림] 인권영화제의 후원회원이 되어 주십시오

인권영화제는 기업과 정부의 후원을 받지 않고 시민의 후원만으로 이뤄지는 영화제입니다. 올해는 19개국에서 온 26편의 작품이 모든 시민에게 무료로 공개됩니다.

이러한 비영리영화제의 성사를 가능케 하는 것은 오직 여러분의 후원뿐입니다. 인권영화제의 후원회원이 되어 주십시오

※ 입금하신 후 반드시 영화제 집행위 사무실에 전화주십시오.

※ 연락처 : 276-1253

※ 개인후원 : 1만원 이상
단체후원 : 5만원 이상
특별후원 : 10만원 이상

※ 후원계좌

전북은행 (김봉술)
518-22-0309219



평화와인권

PEACE & HUMAN RIGHTS WEEKLY NEWS

제 122 호

1998년 11월 17일

발행처 :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발행인 : 문규현 · 김승환

편집인 : 문만식

· 주소 [561-162]전주시 덕진구 진북2동 1034-1 숲정이성지사회관 · 전화) 0652-276-1253 · 팩스) 274-7486
· 통신ID) onespark(천.나.독.두) · E-mail : human@kor.inp.or.kr · Homepage : http://kor.inp.or.kr/onespark

부당하고 맞선 힘겨운 싸움

기아특수강 해고자들 50일 넘게 농성투쟁

군산 기아특수강(재산보전관리인 전선기) 해고노동자들이 50일이 넘게 정리하고 철회 투쟁을 벌이고 있다.

기아특수강(주)은 군산시 소룡동 국가산업단지 내에 위치해 있다. 20여명의 농성 노동자들은 회사 정문 맞은편 공터에서 17일 현재 농성투쟁 50일째를 맞았다.

공터에 천막을 설치한 지난달 중순 이후 회사 정문에는 농성자들의 동향을 감시하기 위한 카메라가 이들과 방문자들을 온종일 녹화하고 있다. 지난 주에는 회사측 민원을 접수한 시청공무원이 농성장을 확인하고 돌아갔다.

회사측은 지난 5일 '부동산 출입금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내 해고자 가족을 포함한 농성자 36명의 회사출입을 완전히 봉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정문 관리실 안에 있는 화장실 사용도 막고 있다. 최근 새로 고용된 10여명의 경비들이 이들의 회사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민주노조 썩자르기'

정리하고 철회 및 구속자 석방을 위한 기아특수강 대책위원회(위원장 김상배·36·구속중)가 중심이 된 농성자들의 요구는 첫째 부당한 정리해고를 철회하라는 것이다. 회사는 정리해

고 대상자들을 선정하면서 98년 상반기부터의 인사사고(45%), 근무태만, 99년 정년퇴직 예정자 등을 기준으로 세웠다. 그러나 40%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정계 항목만은 유독 95년부터를 적용 기점으로 잡았다. 농성자들이 퇴진을 요구하고 있는 현 이장석 위원장과 당시 선거운동과정에서 맞섰던 17명이 회사측으로부터 '사내 기강문란'을 이유로 '경고'를 받은 해다. 농성중인 해고노동자들은 대부분 이때 경고를 받았다.

'추석대학살'

둘째는 회사측과 함께 노조가 고소고발해 구속기소된 권태균씨 등 여섯명 석방과 불구속기소된 해고자 열 네명에 대한 고소고발 취하다. 농성투쟁 13일째 되던 지난달 12일 농성 장소를 회사 본관 노무과에서 노조사무실로 옮긴 노동자와 가족들은 12일 동안의 추석연휴 끝에 출근한 노조위원장과 정리하고 수용과 관련해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다. 추석연휴 전날인 9월 30일 정리하고 통보서를 받아든 노동자들과 가족들은 이날까지 회사측의 공장 농성장 봉쇄, 식사 반입 금지, 용역 경비들과 벌어진 여러 차례의 몸싸움 등을 겪었다. 구속된 김상배 대

책위원장을 대신해 농성을 이끌고 있는 교섭위원 김기덕(40)씨 등 농성 노동자들에 따르면 "11일 새벽 노조사무실에서 수십 명의 과한이 농성자에게 발각돼 달아나는 사건을 겪은 뒤 농성자와 가족들은 극도의 흥분과 불안감으로 뜬눈으로 날을 썼다"고 한다. 김기덕씨는 "(노조 부위원장 신원삼(40)씨가 다리 화상을 입은 사건은) 유발된 사건이었으며 우리는 밀려들었다"고 말했다(평화와인권118호 참조). 그러나 "정리하고 철회 투쟁과는 무관하다"며 냉정을 지키는 모습이었다.

"정리하고 미끼 상여금 강탈"

기아특수강(주)은 철강 1차 소재인 탄소강, 공구강, 자동차 부품 및 기차바퀴를 독점 생산하는 업체다. 96년 매출액이 3207억원에 달했으나 군산 특수강 공장에 1조원이 넘는 설비투자 비용 부담 가중으로 기아자동차와 금융비용 부담 가중으로 기아자동차를 비롯한 기아그룹 부실화의 주범으로 꼽혀왔다.

기아특수강은 회사측과 노동조합측이 협의를 거쳐 지난달 29일 정리해고자 103명과 명예퇴직신청자 47명 등 모두 150명의 인원을 감축했다. 또 지난해 말 맺은 고용안정협약은 700%가 넘는 상여금을 반납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조합원들이 이에 반발해 지난 7월 소액민사소송을 내자 회사측은 '상여금 반납 동의서'를 만들어 조합원들로부터 해고를 무기로 한 반강제적 서명을 받아냈다. 동의서에 서명하면 절대 정리해고되지 않게 하겠다는 일회용 약속도 잊지 않았다.

한편 현재 법정관리 신청중인 기아특수강은 지난달 30일 부동산 및 사업부문 해외매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회사정리계획안'을 법원에 냈다.

기아특수강 부당해고 철회 투쟁기금 마련 일일호프
■ 때: 11. 18(수) 오후 2시~12시 ■ 곳: 군산 황신해벤드 호프
■ 문의: 011-683-2981

[자료] 보석 허가 청구서

“문규현 신부 잠입탈출죄 적용은 억지”

[편집자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지난 9월 구속됐다 지난달 20일 보석으로 석방된 문규현 신부에 대한 보석 허가 신청서를 요약해 실는다.

위 피고인은 국가보안법위반(탈출, 찬양고무 등)의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바, 다음과 같이 보석을 청구하니 청구취지와 같이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구이유

- 1. 공소사실의 요지 (생략)
- 2. 공소사실에 대한 법리적 검토

탈출이란 국어사전에서 “몸을 빠져 나옴”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민중 엡센스 국어사전 1974년 판). 법률을 해석하면서 문리해석이 기본이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빠져” 나온다는 것은 억지로 못나가게 하는데 굳이 나온다는 뜻은 초등학생들에게 물어보아도 알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통일부, 안기부에서 열심히 북한에 가서 사목 활동을 하고 정부의 햇볕정책과 보조를 맞추어 북한을 변화시키는 데 일조를 해달라고 하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공판과정에서 관련 공무원들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여실히 밝힐 예정입니다. 그 구체적인 사정은 제쳐두고 이렇게 정부에서 승인하고 북한에 간 것이 과연 “탈출”이 되는가 의문입니다. 그런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탈출”이란 누구인가에(?) 의하여 금지되어 있다는 것을 넘어서서 물리적으로 가지 말라고 막고 있는데 억지로 이를 뿌리치고 나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가지 말라고 하였는데 억지로 이를 어기고 갔습니까? 아니면 정부 당국자 중 누구라도 김포공항, 북경공항에서 갈 수 없다고 제지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거꾸로 정부당국에서는 “열심히

북한에 가서 우리 부처와 관련된 이런 일을 저런 일을 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하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 역시 공판과정에서 증인 신문을 통하여 여실히 밝혀질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출국시 통일부에 제출한 각서에 기재된 내용 중 통일축전에 참가하지 않았다는 조건을 어겼고 당초부터 어길 생각이었다는 것이 탈출죄 적용의 전제가 되는 것 같은데 사제의 입장에서 어렵게 썩든 신앙의 씨이 무참히 잘릴 수도 있다는 긴박한 상황에서 사제단 전체회의에서 진지하게 논의하여 2명만 통일축전에 참가하기로 결정하였던 것이므로 이러한 전제는 억지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외에 찬양고무죄에 해당한다는 행위는 모두 국가보안법이 위헌, 무효의 법률이라는 것을 차치하고라도 범죄행위를 구성할 수조차 없습니다. 즉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무엇을 찬양하고, 누구의 어떤 행위나 의사를 고무하였다는 것인지 불분명하나 일응 “북한공산집단의 반국가적 활동”을 찬양, 고무하였다고 일부 공소사실에 기재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찬양고무의 상대가 “북한공산집단” 또는 “그 소속원”이라는 것인데 찬양이란 어떤 행위를 한 주체가 아닌 제3자에게 하는 것이므로 그 자체로서 성립될 수 없습니다. 한편 고무죄에는 해당될 수도 있는 듯 하기도 합니다. “북한공산집단”이 반국가 활동을 더욱 신나게 할 수 있도록 고무시켰다는 의미로 말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공소사실 4항의 통일축전 참가 연설을 살펴보면 고취시키기는커녕 북한의 통일정책을 준엄하게 비판하여 반국가활동을 위축시켰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운집한 북한 주민들이 열광하는 분위기에서 북한의 경색된 통일정책을 비판하였던 것입니다. 이는 공소장에도 기재된 연설문의 내용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

습니다. 연설의 서두에서 통일에 대한 당위성과 비원을 이야기하고는 “동시에 저는 마음 한편의 슬픔과 아쉬움도 큼니다.....새로운 통일의 국면을 맞는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실재임은 무산되었습니다. 저는 남과 북, 북과 남의 당국자들이 왜 남북의 화해를 갈망하는 민중들의 열망을 우선하지 않는가 원망스럽습니다. 99년 20세기 마지막 해에는 반드시 공동개척과 통일을 실현토록 간절히 소망합니다”라고 남한과 북한 모두를 비판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북한의 통일행사에서 열광하는 군중을 앞에 두고 북한만을 비판한다면 예외에 어긋날 뿐 아니라 올바른 비판으로 평가받을 수도 없는 것이고 오히려 이렇게 남북 당국자들을 모두 비판함으로써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피고인의 통일축전 참가와 연설내용이 이 사건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데 공소장 기재 내용에 의하더라도 찬양은 물론 고무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통일축전 참가와 연설내용이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면 이를 전제로 한 탈출죄 역시 성립될 수 없음은 더 이상 살필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출국 전에 통일부에서 이런 저런 일을 하지 말라고 하였다 하는 데 북한에 갔던 남한 사람들 중에 누가 금수산에 안 갈 수 있었고 누가 방명록에 서명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는 마치 다른 종교에서 집전하는 종교행사에 참가하는 하되 그 의식을 따르지 말라는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물론 관용과 사랑의 정신으로 의식을 강요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을 광신자 집단으로 매도하고 있는 역대 정부에서 그러한 기대를 하였던 것이 한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이렇게 기념관에 참배하거나 방명록에 서명하는 것은 의례적인 일로 그 내용을 가지고 문제삼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핵심은 통일축전에서 연설 내용이고 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나머지 행위들도 “고무”라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오히려 “고무”가 아닌 “비판”이었

음은 위에서 설명한 대로입니다.

3. 결론

사제단이 방북하여 오랜 세월 신앙의 황무지에서 어렵게 썩든 신앙의 씨이 남북한 정치인들의 이해관계에 의하여 무참히 잘릴 수 없다는 심각한 고뇌에 따라 북한의 요청에 응하기로 하였고 통일축전에서도 당당히 남과 북을 모두 질책하고 진정으로 사랑의 복음을 설파한 것이 죄가 될 수 있습니까? (종략)

그리고 피고인은 과거 방북사건으로 옥고를 치른 일도 있으나 스스로 사제로서 올바른 길을 걸었다고 하느님 앞에 부끄럽음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제이고 정의구현사제단의 공동대표로 도주할 우려도 없고 사실 관계는 이미 모두 밝혀졌을 뿐 아니라 관련된 모든 자료는 피고인 스스로 안기부에 제출하였다는 것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증거인멸의 가능성도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무기 대등의 원칙에 따라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심리를 받고 법률과 양심에 따른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청구취지와 같이 보석을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략)

1998. 9. 23
피고인의 변호인 변호사 이덕우
서울지방법원 제22형사부 귀중

만도기계 노조파괴 나서

노조간부 구속 이어 징계위 회부

만도기계가 최근 정리해고 투쟁으로 노조간부들이 구속되어 있는 가운데 이들에 대한 징계위원회 회부 통보를 보내 노동자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 지난 9월 3일 정리해고 철회투쟁을 벌이던 만도기계 8개 공장에 공권력

투입으로 노동조합 간부들이 거의 구속된 상태에서 사측이 이들을 포함한 78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고 통보해 왔다. 이날은 노동조합 대의원 선거의 입후보 신청을 받는 첫날이었다.

이에 만도기계 노동조합은 “사측이 일방적으로 고용합의서를 파기하고 대규모 정리해고와 경찰력 투입으로 노조 간부를 전원 구속한 것도 모자라 징계위에 회부한 것은 노동조합 자체를 파괴하려는 파렴치한 음모”라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청했다.

더구나 “대의원 선거 입후보 신청을 받는 첫날 징계위 회부를 통보한 것은 노동조합의 조직력이 다시 복원되는 것을 막아보겠다는 속셈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며 “정작 징계를 받을 사람들은 부실경영의 주범인 경영진”이라고 분노했다.

또한 회사가 일방적으로 징계위원회를 소집한 것에 대해 노조는 “단협 제 25조(징계위원회 구성) 1항에 의하면 ‘조합원에 대한 징계위원회는 노사 각 5인씩으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어 노사 각각 징계위원회 위원을 구성한 뒤 전체 또는 노사협의 창구를 통하여 징계위원회 개척 일정을 결정해야 됨에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뒤 통보한 것은 노사대등의 원칙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조측은 이를 “단협위반”으로 규정하고 징계위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한편 계속되는 노조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사측은 현재 이렇다할 해명 한마디 없이 세 번째 징계위원회를 11월 19일로 일방적으로 정해 통보한 상태다.

[행사와 동정]

- ▶ 전북대 혁신대오(김진옥 외 2명) 선고공판 11. 19(목) 오전 9시 30분 / 전주지법
- ▶ 현대자동차 전주지부 제4차 공판 (증인신문) 12. 1(화) 오후 3시 / 전주지법 1호 법정
- ▶ 제3회 인권영화제-전주 시사회 및 기자간담회 11. 19(목) 오후 2시 / 가톨릭센터 1층
- ▶ 제3회 인권영화제-전주 개막식 12. 5(토) 오후 5시 / 전북대학교 합동강당 103호

익산 만도기계 실형 선고

총과업 등과 관련해 업무방해, 폭력,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만도기계 익산지부 노동자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총과업과 정리해고 철회 투쟁을 이끈 이충언 지부장(38)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사수대원 최선규씨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육종근씨 등 다른 5명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삼석씨 연행조사

출소 후 출소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김삼석(인권운동사랑방) 씨가 13일 연행돼 경찰의 조사를 받고 하루 만에 나왔다. 김씨는 93년 ‘남매간첩단 사건’으로 구속돼 4년간 복역했으며 출소 후 줄곧 보안관찰법 철폐 운동에 앞장서왔다. 같은 날 오전에는 이해정씨가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 재정이 매우 어렵습니다. 후원금을 보내주시고, 주간 **평화와인권**은 여러분의 후원금을 받아 발행합니다.

구독문의: 0652) 76 - 1253
후원계좌 · 예금주 문규현
국민은행 512-21-0065-982
우체국 402297-0062450
전북은행 535-21-0304454

인권
주평

최악의 사법살인, 인혁당

문정현 (문선 호통동성당 주임선부)

75년 4월 8일 오전 10시, 인혁당 하재완, 서도원, 도례중, 송상진, 이수병, 김영원, 우홍선, 여정남 8명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 날이다. 사형! 4월 9일, 선고 14시간만에 서대문 구치소에서 사형이 집행되었다. 아침 8시 음압동성당에 유숙 중 가족으로부터 이 사실을 알았다. 기독교 방송에 문의하여 사실로 확인되었다. 곧바로 구치소에 달려가니 가족 2명이 이미 와 있었다.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전투경찰에 에워싸인 가운데 땅을 둥글며 하늘에 소리를 지르며 절규하였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진 날이다.

인혁당이란 실체도 없던 이름이다. 맹목적 이념으로 국민이 거북하게 하여 등을 돌리게 하기 위한 허상일 뿐이다. 지금도 다를 바 없지만 당시의 언론은 분별없는 껌대기들이었다. 사법정의에 반하는 무효의 선고였다. 전격적 처형은 재심청구권마저 박탈하는 '폭거'였다. 사법사상 '암흑의 날'이었다. 당시 국제법학자회의가 그렇게 선포하였다. 사법사상 '야만적 살인행위'였다. 사법사상 '가장 수치스러운 날'이었다. 박정희도 살아 생전에, 집권 중 '가장 큰 실책'이었다고 장관들 앞에서 고백했다고 전 대통령 윤보선 선생이 그렇게 전했다. 그렇다. 우리 나라 역사의 큰 오점이었다.

긴장했던 피고인은 두들겨 맞아 탈장이 되고 기어다녔다. 실신 상태에서 손가락을 풀어가 지문을 찍었다. 사실대로 말하면 "아직도 덜 맞았나? 두고 보자!" 헌병에게 둘러 싸여 있는 공포의 재판이었다. '재판은 완전히 비공개였다. 가족 한 사람밖에 방청할 수 없었다. 그나마 한 사람씩 들어가서 피고인들의 진술이 흘러나왔다. 공소장도 주지 않았다. 고문 조작은 물론 법정진술까지도 "아니오"가 "예"로 변조되었다. 가족은 연행되어 사형이 집행되기까지 단 한번도 접견할 수가 없었다. 시신을 벽제 화장터에 끌고

사형! 선고 14시간만에 서대문 구치소에서 사형이 집행되었다. 땅을 둥글며 하늘에 소리를 지르며 절규하였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진 날이다.

가 태워버렸다. 가족들은 시신마저 볼 수 없었다. 천신만고 끝에 빼앗은 시신은 고문상처 투성이었다. 그 사진도 찍어 놓았다.

진실이 번질까 짐소 봉쇄하였다. 감리교 오글 목사, 천주교 시노트 신부, 외국인 선교사들이 추방되었다. 기일이 되어 추모제도 지낼 수 없었다. 묘비만 세우면 말뚝을 뽑듯 없애버렸다. 사상적 사건만 있으면 부인들을 붙잡아 두들겨 팼다. 동네 아이들은 빨갱이 새끼라고 자식을 전봇대에 묶어 놓고 사형시키는 시늉을 하였다. 학교에 가면 도시락에 개미를 넣어 밥조차 먹을 수 없게 하였다. 가족을 돌보다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투옥되었다. 나도 그 중 한 사람이다.

유신정권은 왜 이렇게까지 무리할 수 밖에 없었던가? 세계적 정치 판도는 냉전의식이 흔들리던 시기였다. 국내 정치는 소요의 연속이었다. 70년 1월 노동청이 위협적으로 반박하여 잠을 재웠지만 한국노총이 들고일어났다. 70년 9월 김지하 시인의 오적이 정권을 감타했다. 노동자 전태일이 분신했다. 71년 박정희가 당선되고 부정선거 항의 대모가 맹렬했다. 결국 72년 10월 12일 국회를 해산하고 10월 유신이 발표되었다. 73년 김대중이 피납되고 이어서 개헌청원이 전개되었다. 긴급조치들이 발동되었지만 상시적 항의가 잇달았다.

냉전구조해소가 한국 정부에 충격이었고, 중미수교는 더 큰 것이었다. 거기에 국내 불안은 정권을 더욱 불안하게 하였다. 그래서 지도적 핵심 인물들을 거세하고 공작적 기획들을 세워 참혹한 사태가 벌어졌다. 이에 따라 광장한 희생이 불가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발전은 이룩하지 못했다. 아마도 이른바 인혁당 인사들이 살아있었다면 민주화와 통일은 앞당겨졌으리라!

사건발생 24년만에, 처형 23년만에 이 억울한 사건이 되살아난다. 지난 11월 9일 서울 명동 카톨릭회관에서 인혁당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대책위원회(인혁당 대책위)가 발족되었다. 기독교회관에서 4.9제를 지내고 나와 장영달 의원을 대표로 하여 발족을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아 천주교 인권위원회를 통하여 다시 발족을 하고 이준병 변호사와 나를 상임 공동대표로 하여 이번에 새로 꾸려진 것이다. 두 차례에 걸쳐 집행위원회를 열어 사업계획도 수립되었다.

인혁당 사건 관련 '인혁당 이야기' 발간, '인혁당 희생자 8인의 진실' 다큐멘터리영상물 제작, 인혁당 사건의 진실을 담은 연극 '4월 9일' 제작, 기일에 맞춰 매년 명동이나 서대문 형무소에서 추모제 봉행, 서대문 형무소 터 추모비 건립 추진, 재심 청구를 포함한 다각적인 법률적 대응,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대 정부 교섭 활동, 각계 각종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선언 운동 조직 및 신문에 광고 게재, 이런 활동이 시작될 것이다.

인혁당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명예를 회복시키는 일에는 각계 각층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가톨릭에서 의외로 광주 대교구 윤공희 대주교, 마산교구 박정일 주교도 이 일에 호응하여 가입하고 재정적 도움도 주었다. 사상적 왜곡이 풀려 이념의 콤플렉스인 매카시즘을 깨 부숴야 한다.



평화와인권

PEACE & HUMAN RIGHTS WEEKLY NEWS

제 123 호

1998년 11월 24일

발행처 :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발행인 : 문규현 · 김승환

편집인 : 문만식

·주소 [561-162]전주시 덕진구 진북2동 1034-1 숲정이성지사회관 ·전화) 0652-276-1253 ·팩스) 274-7486
·통신D) onespark(천.나.녹두) ·E-mail : human@kor.inp.or.kr ·Homepage : http://kor.inp.or.kr/onespark

택시파업에 사장단 백기

전주 7개 회사, 수입금 전액관리제 수용

택시노동자들의 11일 동안의 연대파업에 사업주들이 백기를 들었다.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북지역본부(전북본부·위원장 정광식) 산하 7개 택시노조와 관련회사측은 21일 △수입금 전액관리제와 월급제 수용 △12월 11일부터 31일까지 노사교섭 종료 등을 요지로 합의서를 채택했다.

그러나, 월급제 수용에 따른 임금수준은 △별도교섭을 통해 지역실정에 맞도록 협의 결정하기로 해 구체적인 월급수준은 명시하지 않았다. 민택노련은 예초 평균 운송수입금 가운데 50%를 월급으로 책정할 것을 요구했다.

민주택시연맹은 지난 11일부터 세 가지 요구사항을 내걸고 전국적으로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 바 있다. 노동자들은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준수 △월급제 정부지침 수용 △사납금제 폐지 △평균 운송수입금의 50%를 월급으로 책정할 것 등 다섯 가지 요구를 제시했다.

택시노동자들은 유례없이 11일 동안의 장기파업을 하고 전주지역만도 백제교통 등 7개 노조 1천여명의 노동자들이 총파업에 참가했다. 7개 사업장 택시 490대 가운데 400대 이상이 회사 안에 주차됐다.

이러한 위력에는 그동안 쌓일대로 쌓인 택시노동자들의 분노가 있었다. 택시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가 94년 8월 입법된 지 4년 4개월, 97년 9월 1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시행된 지 무려 1년 3개월, 98년 8월 5일 정부

(건설교통부)의 월급제 시행지침 시달에 이르는 기간 동안 참고 또 참아온 나날이었다.

그 동안 택시업계는 만성적인 불법경쟁이 심각한 문제로 제기돼 왔다. 전북본부에 따르면 택시업계에는 △전액관리제 위반 △택시요금인상을 빚자한 사납금 인상 △지입제, 도급제, 차고지박 경영 등 불법변태경영 △부가

가치세 경감분 착복 △사납금 미달 공제 등 각종 임금 갈취 행위 △오폐수 방류와 같은 환경오염행위 등이 저질러져 왔다.

반면 택시기사들은 하루 10시간이 넘게 일하면서 한달 수입은 50~60만원 정도를 넘기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과속 등 무리한 운행을 할 수 밖에 없었다고 택시노동자들은 말하고 있다.

한편 완전월급제를 위한 10여년의 투쟁 동안 지난 86년 이후 올해까지 전국적으로 14명의 택시기사가 월급제 시행을 요구하며 분신했고 이 가운데 13명이 사망했다.

[인권간행물]

불법도청 '합법'감청

'영남위원회'구속자 인권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대책모임
2000월 / 문의: 02-723-4255

얼마전 울산과 부산에서 일어난 '영남위원회' 사건을 통해서 한 개인의 생활이 수사기관에 의해서 3년씩이나 지속적으로 비디오카메라로 녹화되고 전화도청 당한 사실이 밝혀져 국민들을 분노케 하였다. 이 사건이 계기가 되어 '도청·감청 남용저지'를 위한 운동이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도청·감청의 피해사태와 대책을 논한 작은 책이 나왔다.

93년 우리나라에서 제정된 통신비밀보호법은 그 명칭에서 보면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그 운용은 정반대로 개인의 생활을 정부나 수사당국이 합법적으로 감찰할 수 있도록 절차를 법제화한 것에 다름아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이 제정된 이래 '합법적' 감청의 수치가 급증하고 있고, 반대로 기각되는 영장의 횟수 또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감청의 대상 또한 공무원을 비롯 일반 형사범까지 범위를 넓히고 있어 사 권의주의의 극치를 볼 수 있다.

이 책은 이러한 것을 막기 위해 시민사회단체가 전자통신에 의한 개인·사회의 감시기능을 국가·정부가 독점하게 됨으로써 빚어지는 비인간적·초헌법적 범죄에 대해 경계를 늦추지 말 것을 당부하면서 구체적 행동을 제안하고 있다.

'시와 노래의 밤' 열 돌 맞아

민가협, 양심수 고난·희망과 한 길 걸어

세계인권선언 50주년을 맞는 오는 12월, 인권에 관련한 다채로운 행사가 줄을 잇고 있다. 양심수 석방을 위해 최전선에서 일해온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가 해마다 열어온 '양심수를 위한 시와 노래의 밤'이 오는 12월 12일 저녁 6시 서울 한양대 올림픽 체육관에서 열릴 예정이다.

89년 12월에 시작해 올해로 벌써, 10주년을 맞이하는 '시와 노래의 밤'은 10년째 '개근'한 정태춘을 비롯해 김창완, 안치환, 자우림, 꽃다지, 문성근 등 다양한 가수과 배우들이 자선으로 여는 인권콘서트이다.

아직 감옥에 405명(98. 10. 21 현재)의 양심수가 남아있지만 '시와 노래의 밤' 10년은 승리의 10년이기도 하다. 45년 세계 최장기수 김선명을 비롯하여 많은 양심수들이 이들의 땅과 눈물로 석방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민가협 상임의장 김정숙씨는 "인류가 기념해야 할 세계인권선언 50주년을 맞는 올 12월은 우리 인권의 최대 첨예지인 국가보안법 50주년이기도 해 아직 이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현실에서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일이 선인50주년을 맞는 우리의 임무일 것"이라면서 "다시는 이땅에 양심수가 없기를, 다시는 양심수를 위한 공연을 준비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며 10주년 공연을 준비하는 소감을 밝혔다.

올해는 특별히 부대행사로 인기만화가 박재홍, 최정현(반쪽이), 정훈이(씨네21) 등이 반쪽이는 기지와 해학으로 인간의 존엄을 표현한 '인권만화전'과 90년부터 98년까지 양심수 자녀들이 그린 '그림전'이 준비되었다.

또한 10년을 맞이까지 '시와 노래의 밤'에서 함께 울고 웃었던 지난 사람들, 고 문익환 목사, 고 김남주 시인, 고 김광석 등이 불렀던 시와 노래를 영상으로 만나는 시간도 준비돼 있다.

"언론 주인은 나"

전주시민회, 5회 언론학교

전주시민회(공동대표 송기도·이광철) 주최의 제5회 언론학교가 열린다. '참언론 실천의 한미당'을 부제로 총 6개 강좌가 11월 24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저녁 7시에 원불교 전북교구청 강의실에서 진행된다.

전주시민회는 지금의 언론을 '거대 자본에 예속돼 기득권층의 이해를 대변하고 있는데다 시청률 경쟁과 과당 판매경쟁에 매달려왔다'고 평가한다. 또한 "심지어 언론인 자신들의 이해타산에 맞춰 언론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있다"고 말한다.

따라서 언론학교가 추구하는 것은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제대로 일깨워 줄 '언론 수용자운동'이다.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언론 소비자 입장이 아니라 언론의 담당한 주인으로서 권한과 책임을 행사하는 것이다.

24일 첫 강의 '안보상업주의를 해부한다'(강준만)에 이어 27일에는 '방송 현장에서 보는 언론운동'(정길화), 12월 1일 '일본대중문화가 물려온다'(김지룡), 4일 '모니터, 나도 할수 있다'(김윤화), 8일 '작은 언론 만들기'(장호순), 11일 '한국언론의 현황과 수용자운동'(김주언)을 마지막 강의로 제5회 언론학교가 마감된다.

전주시민회는 한편 '한국언론 오보 50선 전시회'도 전북교구청에서 진행하고 있다.

'인권대회' 열려

'열사 명예회복, 의문사 진상규명, 양심수 문제 해결,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인권대회'가 21일 오후 2시 서울 국민회의 당사 앞에서 펼쳐졌다.

21일 현재 18일째 '열사·의문사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는 유가협, 정치수배해제를 요구하는 조계사 농성자와 그 가족들, 양심수 군문제 해결을 위한 모임(양군모) 회원 등 300여명이 이날 인권대회에 끝까지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준법서약제 폐지 △한총련 이적규정 철폐 등도 요구했다.

[알림] 인권에 관련된 정보를 알려주십시오.

오늘도 인권의 제약없는 실천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여러 단체와 개인 여러분께 연대의 인사를 드립니다. 전북평화와인권연대는 지역의 인권상황을 모아 각 단체 및 인권현실에 관심있는 개인들과 공유하고자 주간 <평화와 인권>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계획하고 계신 사업, 현장소식, 구속자들의 상황, 재판소식 등 인권에 관련된 정보를 전북평화와인권연대에 전화나 팩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정보의 공유는 각 단체 및 개인들간의 연대의식을 높이고 국내외 지역의 인권현실을 개선하는 데 힘이 될 것입니다.

모든 영화 무료상영

여러분의 후원으로 인권영화제는 만들어집니다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후원 계좌>
전북은행 518-22-0309219
(예금주: 김봉술)
입금하신 후 전화주세요.

인권영화제-전주 조직위원회
T. (0652) 276-1253

실직자 지원 조례(안) '천밤'

세정부담 이유 토의회에서 미료(未了) 처리

민간단체가 청원하고 지방자치단체에게 저소득자 및 실업자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조례(안)이 전북도의 제2회 도의회 의회상임위원회에 빛을 못보고 있다.

'저소득자 및 실업자에 대한 생활지원조례'(안)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각종 지원을 해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은 △고용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사람 포괄 △소득을 기준으로 한 주민기본생활 수준 설정 △노인과 장애인에 의료비 보조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조례가 처리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전북도는 업무·재정상 어려움 가중, 기초생활보장법이 국회에 상정돼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도의회 또한 이 조례가 제정될 경우 막대한 예산을 도비만으로 지원해야 하며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기초생활보장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조례자체가 무용지물이 되거나 상위법에 배치될 수도 있다는 판단으로 미료(未了) 처리했다.

그러나 경제적인 이유로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일업대책 전북도민운동본부의 한 관계자는 "전북도가 새만금사업 등에는 천문화적인 돈을 쏟아부으면서도 당장 겨울나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직자를 돕자는 데는 매정하다"면서 "사회복지와 실직자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 투자하는 것은 도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시민모임은 지난 20일 낮 군산시 옥구군 미공군기지 앞에서 가진 제45차 금요집회에서 성명서를 채택해 "클린턴 정부는 불명등한 한미행정협정 개정에 즉각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시민모임은 성명서에서 "한미행정협정은 미국의 이익을 위해 한국과 한국민의 권리를 짓밟는 내용으로 가득차 있다"며 "한국민의 의식이 날로 성장해가는 시대상황에 걸맞게 한미행정협정은 시민의 인권과 민족의 주권, 지역 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이밖에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기지 임대료 지불 △공여지에 대한 지역주민의 재산권 보장 △환경 소음피해 해결 △주한 미군범죄 근절 등도 요구했다.

중고생 인권선언 제정

차별거부·결사의 자유 등 천명

세계인권선언일 50주년을 맞는 오는 12월 10일에 맞춰 '학생인권선언'을 제정·선포하겠다고 교육부가 밝힌 가운데 중고등학생들 스스로 '학생인권선언'을 만들어 발표했다.

지난 3일 학생의 날을 맞아 하이텔과 나무누리에서 활동중인 컴퓨터통신모임 '중고등학생복지회'(학복회)가 발표

한 '중고등학생 인권 선언서'는 그 자체가 우리나라 학생인권현실에 대한 하나의 고발처럼 들린다. '학생인권선언'이 만들어진다는데 정작 당사자인 학생들은 제의된 제 행정관료들과 교사(때로는 학부모)들만으로 선언이 준비되고 있기 때문이다.

모두 13개 조항으로 돼 있는 선언은 △나이·성별·성적 등에 의한 차별 거부 △신체적·정신적 폭력으로부터의 자유 △표현·행동·결사의 자유 △페쇄적인 환경에서 평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 △자치활동의 권리 △매체접근과 문화활동의 자유 △원하지 않는 노동을 거부할 권리 △노동현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을 권리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12조에서 "학교, 가정, 국가를 비롯한 사회는 위 권리들을 보장하며 합당한 여건과 환경을 조성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편 컴퓨터통신상에 게재된 학생들의 글 가운데는 "학교에서 '학생의 날'을 맞이해 불온문서를 배포하는 불순한 무리들을 조심하라"는 내용의 방송을 내보냈다"는 고발도 담겨 있었다.

※ 제정이 매우 어렵습니다. 후원금을 보내주시고, 주간 평화와 인권은 여러분의 후원금을 받아 발행합니다.

구독문의: 0652) 76 - 1253
후원계좌 · 예금주 문규현
국민은행 512-21-0065-982
우체국 402297-0062450
전북은행 535-21-0304454

【 행사와 동정 】

- ▶ 세계성폭력추방기간 및 '98 여성폭력추방의 날 기념식·성폭력예방시요센타 5주년 기념 학술발표회
11. 25(수) 오전 10시~오후 3시 / 전주시청강당 / 0652-283-9647
- ▶ 현대자동차 전주지부 제4차 공판 (중인신문)
12. 1(화) 오후 3시 / 전주지법 1호 법정
- ▶ 서준식씨(인권운동사랑방 대표) 국가보안법 등 위반혐의 공판
12. 1(화) 오전 11시 / 서울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
- ▶ 제3회 인권영화제-전주 개막식
12. 5(토) 오후 5시 / 전북대학교 합동강당 103호

제3회 인권영화제-전주 주요 상영작 소개

"아판을 넘어 인권의 세계로"

작한마음으로 준비한 착한 영화제, 제3회 인권영화제가 전주 시민들을 찾아온다. 오는 12월 5일부터 9일까지 5일간, 전북대합동강당 103호에서 열릴 '제3회 인권영화제-전주'에서는 총 26편의 영화가 시민들에게 무료로 상영된다.

세계인권선언 50주년을 맞는 올해에는 더욱 풍부한 주제의 인권영화를 만나게 된다. 특히 제3회 인권영화제에는 전세계 민중들에게 공통적으로 고통을 주고 있는 '신자유주의에 도전하는 민중들'이라는 특별기획전이 마련되어 있다.

'레드헌트'를 필미로 한 당국의 탄압 등 지난 1·2회 인권영화제가 걸어온 길은 그야말로 한편의 '인권영화'였다. 사실상의 검열인 사전심의를 거부하고 인간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획득하기 위한 투쟁으로서, 세계 도처의 인권현장으로 초대하는 인권교육의 장으로서, 인권영화제는 인권탄압이 없는 그날까지 여러분을 찾아갈 것이라고 말한다.

■ 매도날드 명신당하다

1997/페니 암스트롱 감독/ 52분 /다큐/ 영국
다국적 기업 매도날드가 2사람의 시민운동가에게 소송을 제기한다. 영국재판사상 일대 파문을 일으킨 이 사건은 다국적 기업에 대한 총체적 공격이다. 재판장편은 켄 로치 감독이 재현했다.

■ 폭경편대

97/ 벤 힐만 감독 / 7분 / 애니메이션 뮤지컬 / 미국
원자폭탄을 만들기 위해 힘쓴 세계 여러나라들의 숨겨진 이야기가 애니메이션으로 되살아난다

■ 한국인 B.C급 전병의 기록

97 / 야스키 모토하시 / 62분 / 다큐 / 일본
2차 대전 중 철도건설과 같은 부역의 감독자들 중 많은 이들이 일본인에게 고용된 한국인이었다. 이들은 일본전범과 똑같은 비난을 받으면서도 한국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일본 정부로부터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다. 한국의 B,C급 전범들도 결국 일본 제국주의의 희생자라고 말하는 일본의 젊은 감독의 문제의식에 거품이 없다.

■ 십자가를 진 아이들

96/ 타라스 포포프·블라디미르 쿨킨 감독 /53분 /다큐 / 카자흐스탄
카자흐스탄의 한 소년원에서 억압적인 규칙으로 교정당하는 아이들. 이들은 먹을 것을 훔친 단순한 절도범일 뿐이

었다. 소년수들의 창백하고 지들린 생활속에서 감독은 예수의 고난을 본다. 많은 국제영화제 수상작

■ 제9범안 찬반투표

94년/ 72분 / 다큐 / 미국
1992년 미국 오레곤 주의 동성애자 차별 입법 투쟁동안에 일어났던 일들을 담아내고 있다 /1995년 선댄스 영화제 인기상, 95년 베를린 국제영화제 최우수 게이 영화상, 95년 버 국제 영화제 인기상

■ 칠레전투

1976~78년/ 287분 / 다큐
1973년 9월 11일, 세계 역사상 최초로 민주적 선거를 통해 완성된 칠레 사회주의 민중연합정부의 살바도르 아옌데는 반동적 쿠데타 세력 피노체트에 의해 살해된다. 칠레전투는 이 과정에서 완성된 라틴아메리카의 해방과 독립, 투쟁과 진보운동의 기록이다. /76년 칸느 감독상

■ 가난한 자들의 모임 : 민중의 힘

태국/97년/30분/다큐
"가난한 자들의 모임"을 결성한 태국의 농민들은 IMF로 대 표되는 초국적 자본과 맞선 싸움을 전개한다

■ 우리 친구 월드뱅크

미국/ 97년/ 90분/ 다큐
아프리카의 우간다 역시 세계은행과 IMF의 지배체제 아래 놓여 있는 개발도상국이다. 영화는 5백만달러 지원을 놓고 벌인 우간다와 세계은행과의 14개월 동안의 협상과정을 냉정하게 쫓고 있다. /해외 영화제 다수 수상

■ 자본의 위기를 노동의 희망으로, 1998 전진!!

한국/98년 / 40분 /노동자뉴스제작단/ 다큐
98년 상반기 노동자들의 투쟁중 현대자동차, 만도기계, 동아엔지니어링 등 구체적인 투쟁사례들 속에서 IMF이후 절망속에 있는 노동자들에게 희망을 얘기한다.

■ 치아파스(개약작)

캐나다/ 98년 / 93분 / 다큐
94년 1월 1일, 사파스티타 원주민이 봉기하여 남부 멕시코의 5개 도시와 500개 농장을 점령했다. 그들은 인터넷을 통해 그들의 메시지를 전세계로 띄워보내기 시작했다. 그들이 인터넷에 올리는 성명서들은 멕시코 정부에 도전했고 전세계 자본주의를 질책한다. 치아파스 원주민들은 너무나 가난해서 생존을 위해 세상을 바꿀 수밖에 없는 것이다.



평화와인권

PEACE & HUMAN RIGHTS WEEKLY NEWS

제 124 호

1998년 12월 1일

발행처 :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발행인 : 문규현·김승환

편집인 : 문만식

·주소 [561-162]전주시 덕진구 진북2동 1034-1 순정이성지사서관 ·전화) 0652-276-1253 ·팩스) 274-7486
·통신ID) onespark(전.나.독투) ·E-mail : human@kor.inp.or.kr ·Homepage : http://kor.inp.or.kr/onespark

국보법, 50년이면 충분하다

'국가보안법' 제정 50년, 폐지운동 50년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지 만 50년이 됐다.

이에 따라 분단 유지와 인권탄압에 철저히 이용돼 온 국가보안법에 대한 규탄과 폐지 운동이 계속되고 있다.

민중의 기본권 보장과 양심수 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와 양심수 전원석방과 국가보안법 철폐-세계인권선언 지지 100만인 서명운동 추진본부(상임대표 홍근수·오세철·진관)는 11월 28일 오후 6시 서울 명동성당에서 '민중의 기본권 보장과 양심수 전원 석방,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1차 투쟁대회'를 열었다. 대회 참석자들은 국가보안법과 준법서약제 폐지, 정치수배 해제와 양심수 전원 석방, '창살없는 감옥'인 보안관찰법 폐지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에 앞서 이날 오후 2시 서울구치소 앞에서는 민가협 회원 100여명이 결의 대회를 열어 양심수 전원석방과 국가보안법 철폐를 요구했다.

한편 이날 하루 동안 전국 각 교도소 양심수들과 명동성당 한총련농성단(단장 정선)은 국가보안법 폐지하는 단식 투쟁을 벌였다.

이와는 별도로 한국인권단체협의회, 민주와진보를위한지식인연대, 참여연대 등 인권·사회단체들은 12월 1일 국가보안법 제정 50년을 맞아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국제연대 집회를 연다.

안법 폐지를 위한 국제연대 집회를 연다.

이날 집회를 주관한 민변, 민가협, 인권운동사랑방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인도, 중국, 인도네시아 등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나라의 각종 단체들과 홍콩, 호주 등의 인권단체들을 비롯해 재외 한인 동포단체나 양심수 후원회 조직 등이 각국 수도의 주요 장소나 한국대사관 앞에서 집회를 준비했다. 또 이들을 포함한 각종 단체들이 한국의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로 했다.

이날 집회에서는 전통적인 장례의식에 따라 국가보안법 장례식이 진행됐다. 장례식은 국가보안법 50년 역사를 마감하고 그 피해자들의 한을 푸는 의식으로 마련됐다. 장례행렬은 여의도 공원문화마당에서 KBS방송국, 한나라당, 국민회의를 거쳐 장기신용은행까지 이어진다.

민변 등은 "이날 캠페인은 캐나다의 회의 후원을 받고 있으며, 오는 2천년 초반까지 캠페인이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를 주관한 인권운동사랑방은 "지난 50년 동안 국가보안법은 국가안보라는 미명으로 독재정권을 지키고 수많은 민주인사들을 탄압하고 민주화 요구를 말살하는 수단으로 악용

돼 왔다"며 "우리 사회 최고의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없애는 것이야말로 반인권과 반민주, 반통일의 구태로 얼룩진 20세기의 오욕을 씻고 새로운 민주인권시대를 맞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가보안법은 여수·순천사건 진압 이후인 1948년 12월 1일 제정돼 반공·분단이데올로기를 법률적으로 표현해 왔다. 제정 당시 국회 내 국가보안법 제정반대론자들 중 주동인물들은 이후 소위 '국회프락치사건'으로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됐다.

인권선언50주년행사 다채

민가협, 인선협 등 전주지역 인권관련 단체들은 12월 10일 오전 '세계인권선언 50주년 기념식 및 기자회견'을 갖고 <세계인권선언지지 전북지역 200인 선언>을 발표하기로 했다.

200인 선언은 △양심수 조건없는 전원석방 △준법서약제도 즉각 철폐 △정부와 독립적으로 국가인권기구 설치 △국가보안법 즉각 철폐 △제반 민중생존권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12월 5일부터 9일까지 전주에서 96, 97년도에 이어 세 번째 인권영화제가 개최된다.

인권영화제 조직위원회는 5일 오후 3시 전북대 합동강당에서 한민족이면서도 남한과 북한 어느 나라에도 입국할 수 없는 재일교포3세들의 문제를 다룬 작품 '입국금지'를 첫 작품으로 5시 개막식을 갖는다.

이밖에 인권의 정치 화성연합(전)이 주최하는 '여성, 환경, 교육 캠페인'과 인선협 주최의 '인권선언50주년 기념예배'도 이 주간에 열릴 예정이다.

추대합니다! 모든 작품 무료상영

제3회 '인권영화제-전주'

■때: 12.5(토) 오후 3시~9(수) ■곳: 전북대 합동강당 103호

명동성당, 농성단 강제철거 ‘민주화 성지’ 명성 흔들

명동성당에서 농성중이던 전국건설일용직노조 천막 등이 강제철거되고 농성중이던 노동자들이 노상농성에 들어갔다.

11월 27일 오전 11시 30분경 명동성당 평신도들의 모임인 사목협의회가 3시간여 동안 남녀 신자 50여명을 동원해 성당 안에서 농성중이던 천막 6동 가운데 만도기계 노조 천막 1동만을 남긴 채 5동을 강제철거했다.

명동성당에서 천막농성을 하던 만도기계 노조, 조흥시스템 노조, 한총련, 전국건설일용직노조연맹, 새날을 여는 실업자 연맹, 민중의 기본권 보장과 양심수 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 등 6개 농성단은 28일 명동성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성당측은 농성장 강제폭력철거를 사과하고 원상회복시키라"고 요구했다. 또 "명동성당측은 더 이상 대다수 신도들의 뜻을 왜곡하지 말고 농성자들을 내몰지 말라"고 촉구했다.

농성단은 기자회견에서 "철거에 가담한 사람들이 순수한 평신도들 뿐만 아니라 전문 철거용역원들도 가담했다는 증거가 있다"며 철거에 동원된 사람 중에는 "우리가 치우면 될 것 아니냐는 농성자들의 항의에 '용역비를 빨리 받아서 가야 한다'고 말한 사람도 있다"고 주장했다. 농성단은 또한 "철거 과정에서 면도칼을 소지한 철거원에 의해 몇 사람이 부상을 당했다"고 보고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철거에 대해 성당측이 합의를 파기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9월 명동성당이 강제철거 방침을 밝히자 민주노총은 천막별로 일정을 잡아서 자진철거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고 성당측도 그 뜻을 받아들인 상태였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은 명동성당에서 항의집회를 열고, 김지영 신부와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지영 신부는 "난감한 상황"이라며 "하지만 시위문화도 이제 바뀌어야 하

는 것은 사실 아니냐"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철거사태가 벌어지기까지 농성자들의 태도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도 있다. 장기간의 농성이 진행되면서 농성자 가운데 일부가 술판을 벌이는 등 농성태도가 문란했던 점이 여러차례 비판을 받았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화의 성지'로 불렸던 명동성당이 이미 자진철거 의사를 밝힌 이들을 강제로 내몬 것은 명동성당의 명성에 먹칠을 한 결과가 됐다.

울산동구청장 보석촉구

- '동창회' 사건 구속
- 정리해고 반대 공약한 구청장

심원구 울산시장과 차수범(자민련)·이규정(국민회의) 의원 등 울산지역 광역 및 기초단체장과 국회의원, 시·구의원 등 정·관계 및 시민·노동·종교단체 대표 100여명이 '동창회' 사건과 관련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창현 울산 동구청장의 보석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 청장의 부인 이영순(36)씨는 27일 오후 심 시장 등이 연대서명한 탄원서를 재판부인 부산지법 형사3부(재판장 신동기 부장판사)에 제출했다. 탄원서에는 한나라당 김태호·권기술 의원 등도 서명했다.

이들은 탄원서를 통해 "김청장은 도의원 재임 때부터 울산광역시 승격과 지역교육발전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왔다"며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는 만큼 구정을 수행하면서 재판관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심 시장 등은 또 "김청장이 지난 7월 구속된 뒤 장기간에 걸친 행정공백으로 20만 동구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재판부의 선처를 호소했다.

'동창회' 사건은 지난 7월 22일과 23일 부산지방경찰청 보안과가 울산·부산지역 노조지도부와 사회단체 활동가 등을 국가보안법 혐의로 연행한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이들이 "지난 89년 주체사상을 조직이념으로 하는 지하 청년혁명조직을 결성한 후 92년 북한의 대남 선전·선동기구인 한국민족민주전선(한민전)의 직접적인 지도를 받은 '영남지역위원회'로 재편, 이를 '동창회'로 위장하고 남한의 사회주의화를 목표로 하는 이적활동을 전개해 왔다"고 주장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경찰은 또 이들의 활동내용으로 △한민전 명의의 각종 이적문건을 통한 사상 무장 △김정일 보위투쟁행사로 북한동포돕기운동 전개 △노동자 집회·시위시 배후지도 등을 기록했다.

그러나 이 사건은 국가보안법의 무리한 적용에 따른 조작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

사건 직후 국제엠네스티(AI)는 피에르 쎄네(Pierre Sane) 사무총장의 이름으로 김대중 대통령에게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성명서를 발표해 "노조의 과업과 시위를 천북활동과 연계시키려는 시도는 과거 독재정권이 반체제인사들을 제거하기 위해 흔히 사용하던 수법"이라며 "즉각 비폭력적 정치활동과 노조활동으로 인해 구금된 활동가들과 노조지도부를 석방하라"고 요구했다. '북한동포돕기를 김정일 보위투쟁 행사로 조작한 사건 규탄 시민대책위원회'와 '동구 주민 대책위원회(준)'도 "전국적으로 일어났던 노동자 투쟁을 울산의 몇몇 사회단체 인사가 지도했다고 하는 것은 얼토당토않다"며 경찰 주장을 비판했다. 한편 김창현 동구청장은 동구청장 선거시 공공연히 정리해고 반대를 주장했었다.

*** 재정이 매우 어렵습니다. 후원금을 보내주시고, 주간 평화약인 권은 여러분의 후원금을 받아 발행합니다.**

구독문의: 0652) 76 - 1253
후원계좌 · 예금주 문규현
국민은행 512-21-0065-982
우체국 402297-0062450
전북은행 535-21-0304454

성폭력피해자 권리현장 선포 여성단체연합, '성폭력피해자 권리현장' 선포

성폭력 추방운동에 앞장서 온 여성단체들이 세계 성폭력 추방주간을 맞아 '성폭력피해자 권리현장'을 제정해 발표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11월 25일부터 12월 10일까지를 '98 여성폭력 추방기간'으로 선포하고 각 참가단체별로 각종 행사를 벌였다. 이 가운데 전주에서는 성폭력예방치료센터(소장·박상희)가 25일 전주시청강당에서 성폭력피해자권리현장 선포식을 가졌다.

권리현장은 "모든 성폭력피해자들은 나이, 직업, 성별, 학력, 경제력, 성정체성, 신체적·정신적 능력, 종교 등과 상관없이 자신의 피해를 인정받고 존중·지지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피해의 상처를 극복해나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공받고 배려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했다.

권리현장은 피해자의 권리를 ▲수사, 재판과정에서 권리 ▲진료과정에서의 권리 ▲일상적 권리 등으로 나눠 구체적으로 명문화했다. 수사, 재판과정에서 권리 항목 가운데 △직업, 나이, 이전 성경험, 피해자의 상황, 가해자와의 관계와 상관없이 피해자로 인정받고 대우받을 권리 △사건과 관련된 질문만 받을 권리 △이전 성경험에 대한 질문을 받지 않을 권리 등을 규정하고, 진료과정에서 권리 항목에서는 △병원에서 검사받는 동안 친절하고 세심한 배려를 받을 권리 △모든 검사과정, 서류, 절차 등에 관해 쉬운 말로 설명들을 권리, 끝으로 일상적 권리 항목은 △성관계가 아닌 폭력의 피해자로 대우받을 권리 △어떠한 상황 이든 피해에 대한 책임을 추궁당하지 않을 권리 △가족이나 친구 등 주변인으로부터 정서적으로 지지받을 권리 등을 포함하고 있다.

세계 성폭력 추방주간은 1981년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독재에 항거하다 살해당한 세 자매를 기리며 라틴아메리카의 여성들이 "여성폭력추방의 날"을

11월 25일로 정해 기념행사를 가져온 것이 계기가 됐다.

한국에서는 1991년 한국여성단체연합의 '성폭력추방주간' 선포와 기념식이 열렸고, 1993년 성폭력특별법이 제정되고 1998년 가정폭력방지법이 제정·시행됐다.

"새만금, 환경제앙 자초"

전북시민환경연구소(소장·김익수)가 새만금 지역 생태계 파괴가 우려된다고 '새만금 간척사업'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11월 24일 오후 전북대학교 합동강당 103호실에서 열린 '전북시민환경연구소 1998 심포지움'에서 홍재상 인하대 해양학과 교수 등 발제자들은 서해안 갯벌이 생태계와 환경에 미치는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생태계 파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물론 완공 후 예상되는 수질오염과 기상변화 등 환경변화에 대한 대책이 거의 없는 상태"라며 강

【 행사와 동정 】

▶ 세계인권선언 50주년 기념주간 행사

- ☞ 인권 행동의 날(계단던지기 및 색띠뒀기) / 12.4(금) 오후 1-5시 / 전북대 앞
- ☞ 여성, 환경, 교육 캠페인 / 12.4(금)-10(목) / 전북대 및 시내
- ☞ 제3회 인권영화제-전주 / 12.5(토)-9(수) / 전북대 합동강당 103
- ☞ 양심수 면회 / 12.7(월)-14(월) / 전주·군산교도소
- ☞ 세계인권선언 50주년 기념식 및 기자회견 / 12.10(목) 오전 10:30 / 가톨릭센터 3층 회의실
- ☞ 김대중 정권 1년 인권정책 평가 좌담회 / 12.10(목) 오후 5시 / 가톨릭센터 3층 회의실
- ☞ 군산 - 인권영화제 / 12.11(금)-13(일) / 군산한겨레문화센터
- ☞ 세계인권선언50주년 기념연합예배 / 12.13(일) 오후3시 / 중부교회

▶ '제3회 인권영화제 - 전주' 개막식

12. 5(토) 오후 5시 / 전북대학교 합동강당 103호

▶ 박노해 강연회

12. 11(금) 오후 7:30 / 전주 서학동성당

한 우려를 나타냈다.

종합토론에서 전북시민환경연구소 조두연 변호사는 "새만금 간척사업의 환경적, 경제적인 문제점을 재검토하여 사업을 전면 백지화하거나 축소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조두연 변호사는 사업시행 주체인 농림부 장관에게 "지역주민 및 환경단체 등과 공동대책위를 구성해 시민급 간척사업 타당성 검토와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실시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공유수면매립 면허 및 실시계획의 인가자인 해양수산부장관에게는 "새만금 간척사업이 환경을 파괴하여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새만금 간척사업 추진 여부에 대한 결론이 날 때까지 공유수면매립법 제22조에 의해 방조제 공사를 일단 중단하는 등의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새만금 간척사업은 모두 33Km의 방조제를 쌓아 여의도의 140배나 되는 1억 2천만 평의 토지를 확보하고 담수호와 천단 영농단지를 조성한다는 목표로 진행중이다.

그러나 현재 오염된 호수만 남은 시화지구(시화호) 개발은 대규모 간척이 당초의 목적을 달성하지도 못한 물론 생태계까지 파괴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산 교훈을 주고 있다.

도청과 프라이버시에 관한 헌법적 문제

김승환 (전북평화인권연대 공동대표·전북대 법대 교수)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의 도청을 허용하고 있다. 다만, 그 용어를 도청이라 하지 않고, 감청이라고 부르고 있다. 현행 법상의 감청에는 법관의 사전영장이 필요한 일반영장과 그것이 필요하지 않은 긴급감청이 있다.

법 제5조는 형법상의 내란죄와 외환죄를 비롯하여 약 150개의 범죄를 대상으로 일반감청을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검사가 감청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허가요건을 충족하는 사유 등의 청구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청구이유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법원은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청을 허가하는데, 이 허가서에는 통신제한조치의 종류·그 목적·대상·범위 및 기간을 특정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감청의 기간은 원칙적으로 3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법 제6조 제4항 ~ 제6항).

일반감청과 함께 통신비밀보호법은 긴급감청을 규정하고 있다. 즉, 일반감청이 요구하는 절차를 거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없이 감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청을 집행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즉시 감청을 중지하여야 한다(법 제8조 제1항).

그러나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몇 가지 분명한 특색 또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도청’이라는 용어와는 달리 ‘감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행법이 규정하는 감청은 통화의 당사자가 자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의 명백히 위헌적인 조항들 또는 위헌이 될 가능성이 많은 조항들은 국민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있다.

신의 통화를 누군가가 가로채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도청이다. 다만 그것이 법이 인정하는 도청이나 아니면 법이 인정하지 않는 도청이나라는 차이점이 있을 뿐이다. 그런 점에서 보면 정확하게 도청이라는 용어를 선택하는 것이 타당하다.

둘째, 현행법은 장래의 범죄에 대한 수사수단으로서의 도청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형사소송법상의 수사개념에 장래의 범죄에 대한 수사가 포섭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만약 이것이 허용되는 것으로 본다면, 형사소송법상의 수사개념을 완전히 재정의할 필요가 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195조는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장래의 범죄를 대상으로 하는 수사를 예상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셋째, 현행법상의 도청은 헌법이 규정하는 영장주의에 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도청은 그 비밀채분성, (특정성이 아닌) 일반성, 영장제시의 결여로 특징지워지는데, 이 가운데 어느 것도 영장주의에 포섭되지 않기 때문이다. 도청을 허가하는 영장은 영장주의가 요구하는 공개성, 특정성, 영장제시의 요구 모두를 깨뜨린다. 만약 도청영장을 허용한다면, 그것은 헌법상의 영장주의의 확대인지 아니면 전통적인 영장주의와는 별개의 영장주의

를 법률 차원에서 인정하는 것인지가 해명되어야 한다.

넷째, 미국이나 일본에서의 도청의 허용성 여부에 대한 논의에는 공통점이 있다. 그것은 특히 조직범죄, 국가안보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등에 대한 증거의 확보를 위하여 최후의 수단으로서 도청이 허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이고, 그러한 논의는 아직도 종결되지 않은 채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 현행법상의 도청대상범죄는 약 150종으로 지나치게 광범위하다. 더구나 국가보안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등의 경우에는 그 법률이 규정하는 모든 범죄를 도청대상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기본권제한의 광범성은, 도청의 허용성 여부에 대한 논란은 별개로 하더라도, 헌법상의 기본권제한의 과잉금지의 원칙(비례의 원칙)을 명백히 침해하고 있다.

다섯째, 설사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적법하게 행해진 도청이라 하더라도, 그 목적을 달성한 후에는 반드시 도청을 당한 당사자에게 그 내용이 고지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이에 관한 조항이 전혀 없다. 다만 법 제11조가 “① 누구든지 제6조 내지 제10조, 제14조에 규정된 통신제한조치 등으로 취득한 내용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는 경우 외에는 이를 다른 기관 또는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할 수 없다. ② 통신제한조치의 허가과정이나 허가여부·허가내용 등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할 수 없으며, 그 비밀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불과하다.

결과적으로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의 명백히 위헌적인 조항들 또는 위헌이 될 가능성이 많은 조항들은 국민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있다. 국민의 나만의 세계, 나만의 공간, 나만의 통신이 과도하게 노출되어 있다.

평화와인권

PEACE & HUMAN RIGHTS WEEKLY NEWS

제 125 호

1998년 12월 8일

발행처: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발행인: 문규현·김승환

편집인: 문만식

· 주소) [561-162]전주시 덕진구 진북2동 1034-1 숲정이성지사회관 · 전화) 0652-276-1253 · 팩스) 274-7486
· 통신ID) onspark(천.나.녹두) · E-mail : human@kor.inp.or.kr · Homepage : http://kor.inp.or.kr/onspark

자살조작 의혹

전주교도소 제조사 사망사건 의혹 수두룩

전주교도소 제조사 의문사와 관련해 교도소측이 사건을 조작하려 한다는 의혹이 강하게 일고 있다. 이와 함께 사건 은폐를 위해 교도소측이 유서를 대필하는 방식으로 조작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21일 전주교도소는 전날인 20일 오후 11시 20분경 기결사 독방에 수감중이던 배재문씨(39)가 화장실 쇠창살에 내의를 찢어만든 끈을 연결해 목을 맨 것을 순시중인 교도관이 발견하고 병원으로 긴급후송했으나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교도소측은 숨진 배씨가 형이 확정돼 복역하던 중 평소 가족이 면회오지 않고 추가건으로 재판받는 것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자살한 것 같다는 보고서를 검찰에 냈다.

유서와 평소 필적 한눈에 달라

그러나 유족들은 교도소측이 공개한 배씨의 유서가 배씨의 평소 필적과 전혀 다르다며 유서조작 의혹을 강력히 제기하고 있다. 또 배씨 사인에 대해서는 신경안정제 투약에 따른 쇼크사 의혹을 제기했다. 유족들은 12월 1일 기자회견을 통해 “교도소측이 배씨의 유서라며 공개한 편지 두통이 배씨의 필적과 전혀 다른데다 초등학교를 중퇴한 배씨의 글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

도로 문장구성이 매끄럽다”고 주장했다.

유족들은 이같은 의혹의 증거로 배씨가 수감중인 지난 94년 전 부인 신모씨(32)에게 남긴 배씨의 친필 메모와 92년 친형에게 보낸 편지를 공개했다.

유족들은 “배씨 사망 직후 교도소측이 ‘유서가 없다’고 주장했다가 뒤늦게 두통을 공개했으며 검찰이 ‘유서가 네통’이라고 확인한 뒤에도 여전히 나머지 두 통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공개를 촉구했다.

사망추정시간 “사라진 하루”

사망시각에 대한 교도관의 진술과 전주 예수병원에서 사체를 최초로 검안한 의사가 말하는 사망추정시간의 불일치도 이 사건의 조작의혹을 부채질한다. 교도소측은 배씨를 응급조치한 다음 전주예수병원으로 옮겼다고 검찰에 보고했다. 또한 이후 이를 취재한 기자와 가족에게도 배씨가 맥박이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사체를 최초로 검안한 의사는 현장에서 “숨진 지 이미 오래됐다”고 말했다. 그 근거로 동공반사가 없고 동공이 모두 풀린 상태인 점, 손가락 두 개가 들어갈 만큼 항문이 벌어져 있고, 맥박은 없고 체온은 싸늘했다는 점 등을 들었다. 또 부검 당시 배씨의 위는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로 가득차 있었다. 정상적인 상태라면 식사 후 1시간도 채 안돼 사망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교도소 저녁식사 시간은 오후 5시에서 6시 사이이다.

배씨의 형 재준(53세)씨에 따르면 21일 새벽 전주교도소 관계자가 전화통화에서 자신에게 “19일 재판 때 소란을 피워 안정제를 주고 위로도 했는데 그날 그렇게 됐다(자살했다)”고 말했다고 한다. 사망시각이 교도소측의 공식 발표보다 하루 앞선 19일 오후였다 는 의혹을 갖게 하는 대목이다. 또 진정제 투약 사실을 최초로 시인한 부분이기도 하다.

진정제 투약 사실 은폐 의혹

김승환(전북대 법대) 교수가 22일 전주 예수병원에서 전주교도소 보안계장을 만난 자리에서 ‘약물을 얼마나 투여했느냐’고 묻자 약물을 투여한 사실을 시인했으며 ‘누가 투여했느냐’는 물음에는 ‘의사자격을 가지고 있는 의무과정의 처방전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전주교도소측은 신경안정제 투약 사실을 공식적으로 부인하고 있다.

이밖에 △법정소란을 일으키면 교도관행상 징벌방에 수용하게 되고 이 경우 역시 교도관행상 두 손에 수갑을 채우고 다리부분에 쇠사슬을 채우게 돼 있는데 이 상태에서 목에 자살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 △사체를 물로 깨끗이 닦아낸 듯 사타구니 부위가 붙어있는 점 △자살에 이용했다는 찢어진 내의에 목을 매기 위해 지은 매듭이 없는 점 △교도소측이 4일 현재 정당한 이유없이 배씨가 발견된 독방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점 등도 이 사건 의혹을 가중시키고 있다.

형 재준씨는 “동생이 2면에 이어져-기

「평화와인권」 창간4주년 기념 좌담회
“전북지역 인권실태를 진단한다”
▶ 12.10(목) ▶ 곳: 전주 가톨릭센터 3층 학익실

“레드헌트 상영 그 뜻으로”

군산, 지난해 이어 11일부터 사흘간 인권영화제

지난해 제2회 인권영화제 기간 동안 전국에서 유일하게 '레드헌트'를 상영해 화제를 모았던 군산 인권영화제가 오는 11일 오후 개막작 '레지스탕스'를 비롯해 사흘 동안 모두 17편의 영화를 상영한다.

전주, 서울과 마찬가지로 군산에서도 다큐멘터리의 고전이라 일컬어지는 '철레전투'와 '철레, 지울 수 없는 기억'이 상영작에 포함되며, <신자유주의에 도전하는 민중들>이라는 제목으로 특별기획전이 마련됐다.

이 기획전에는 '우리 친구 세계은행' (12일), '치아파스' (12일), '인도네시아, 한판 싸움' (12일), 'IMF 한국, 그 1년의 기록 - 실지노숙자' (12일), '자본의 위기를 노동의 희망으로 - 전진 98' (12일), '가난한 자들의 모임' 등 모두 여섯 개 작품이 상영일정에 올랐다.

제3회 인권영화제-군산 조직위원회 (위원장 문정현·전병호)가 주최하는 이 영화제는 11일부터 13일까지 사흘 동안 군산 한겨레 문화센터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0654-465-5715)

전주, 5일부터 9일까지

전북대학교 합동강당에서

세계인권선언 50주년을 기념해 '야만을 넘어 인권의 시대로'를 주제로 내건 제3회 인권영화제 전주 행사가 지난 5일 전북대학교 합동강당에서 개막식과 함께 개막작을 상영하고 5일 동안의 상영 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영화제에서는 상영 첫날인 5일 멕시코 민중투쟁을 다룬 개막작 '치아파스'를 비롯해 모두 20개국 28편의 '인권' 영화가 상영되며 모두 국내에서 처음 공개되는 작품들이다. 전주에서는 8일 저녁 '22일간의 고백'의 감독 김태일씨를 초청해 관객과의 자유로운 대담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96년 1회와 지난해 2회 때와 마찬가지로 '인권교육 및 사전심의 거부와 검열 철폐'를 핵심 정신으로 삼고 있는 인권영화제는 올해에도 모든 시민에게 무료로 모든 영화를 공

개한다. 제3회 인권영화제-전주 행사는 9일 오후 'IMF 한국, 그 1년의 기록 - 실지노숙자'를 폐막작으로 상영할 예정이다.

[> 1면에서 이어짐 <]

죽기 직전인 16일에도 가족이 동생을 면회했지만 죽으리라는 기미는 전혀 볼수 없었다"며 "교도소 안에 있으면서도 자기 몸 수술해 달라고 여러차례 요구할만큼 삶에 대한 욕구가 강했다"고 밝혔다.

배씨는 지난 19일 전주지법에서 재판을 받던중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재판을 거부하다 퇴장당한 바 있으며 지난 9월 17일부터 독방에 수용돼 왔다.

배씨는 필로폰을 흡입하다 적발돼 항정신성 의약품 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됐으며 2년6월의 징역형을 확정받고 수감중이었다.

한편 사건에 대한 의혹이 수그러들지 않자 법무부 교정국은 3일 보도자료를 내 "언론이 유가족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보도해 사실이 왜곡될 우려가 있다"면서 "유서의 필체는 옆으로 누어 쓰는 독특한 필체로 배씨가 사망전 작성한 사건경합청구서 등과 비교해볼 때 육안으로 확연히 판단될 정도로 동일하다"며 유서조작의혹을 강력 부인했다. 교정국은 또 "신경안정제를 투약한 사실도 없다"며 전주교도소의 공식 입장을 옹호했다.

※ 한때 동안 후원해주신 독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그 뜻을 믿거름삼아 주간 「평화와인권」은 지역과 국내의 인권향상을 위해 더욱 힘쓰겠습니다.
구독문의: 0652)276 - 1253
후원계좌 · 예금주 문규현
국민은행 512-21-0065-982
우체국 402297-0062450
전북은행 535-21-0304454

제3회 인권영화제 - 군산 상영일정표

▲ 12월 11일(금)
오후 4시 한국인 B,C급 전범의 기록 / 십자가를 진 아이들 / 맥도날드 망신당하다 / 7시 10분 개막식 / 7시 30분 레지스탕스(개막작)

▲ 12월 12일(토)
오전 11시 전투지대 / 12시 30분 입국금지 / 오후 4시 우리 친구 세계은행 / 치아파스 / 7시 20분 인도네시아 : 한판 싸움 / 8시 IMF 한국, 그 1년의 기록-실지노숙자 / 9시 자본의 위기를 노동의 희망으로-전진 98

▲ 12월 13일(일)
오전 11시 철레전투 / 4시 한낮의 별 / 미카르도 미리엄 그리고 페델 / 7시 20분 가난한 자들의 모임 / 5월 광장 어머니들 / 9시 철레, 지울 수 없는 기억

“긴급감청제도 폐지해야”

민변,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의견서 국회·각 당 제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회장 최영도)은 2일 최근 정치권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통신비밀보호법의 개정과 관련 의견을 작성해 국회의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각 당 정책위로 보냈다.

민변은 의견서를 통해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감청제도가 남용됨으로써 국민의 헌법상 보장된 통신의 비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영장주의 등이 침해될 소지가 있다며 의견서 제출 이유를 밝혔다.

민변은 이 의견서에서 특히 '긴급감청제도(법 제8조의 통신제한조치에 관한 긴급처분)'을 폐지할 것을 제안했다. 긴급감청제도는 일단 감청부터 실시하고 48시간 내에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는 제도다. 그러나 이 제도는 수사기관의 수사편의에 기여할 뿐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무상 감청단계에서 결정적 단서가 포착되면 이에 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감청하다 혐의가 드러나지 않아도 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흐지부지하는 경우, 그리고 이에 처음부터 영장을 염두에 두지 않고 감청을 하는 경우 등 이 제도를 수사기관이 남용할 가능성은 크기 때문이다.

최근 국민회의가 내놓은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은 △48시간에서 24시간으로 긴급감청 허용시간 축소 △긴급감청에 들어간 경우 '지체없이' 법원의 허가를 청구할 것 △감청대상 범죄의 제한 △불법감청 및 도청에 대한 처벌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지난달 9일 「영남위원회」 구속자 인권을 위한 시민사회단체대책모임과 「부산울산지역 공안조사전 전국대책위원회」도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안에 대해 "정부가 국민의 사생활침해를 막고 인권을 보호하겠다고하면서도 감청영장 발부를 근본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장치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조차 없다"고 비판한 바 있다.

긴급감청제도는 법리적으로도 헌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즉, 체포, 구속에 대하여는 사전영장주의의 예외에 대한 헌법적 근거가 있으나 압수, 수색의 경우에는 헌법상 사전영장주의의 예외가 없다는 점에서 긴급감청제도 자체에 대한 헌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이밖에도 감청대상 범죄와 감청사유 등을 한정하지 않고 있다. 민변은 의견서에서 감청대상 범죄를 △국가안보관련 범죄, 조지 및 강력 범죄, 마약관련 범죄에 한정하고 △현재 예비, 음모단계에서부터 가능하도록 한 규정을 개정해 범죄를 실행했거나 또는 실행했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 감청사유를 한정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감청허가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고,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도록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밖에도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감청영장발부 적부심사제도를 신설해야 한다는 것이 민변의 의

전이다.

“신자유주의 반대” 사회운동체 결성

‘사회진보연대’ 창립총회 마쳐

사회진보를 위한 민주연대(사회진보연대)가 4일 결성됐다.

사회진보연대는 '한국적 신자유주의 연대'가 김대중 정부와 이에 협력하는 시민운동으로 형성돼 있다고 보고, '사회진보연대'는 민주적이고 민중적인 한국사회 구조개혁의 전망과 풀뿌리 연대를 목표로하는 민주적, 계급적 사회운동노선을 지향한다"고 밝혔다.

사회진보연대는 1994년 각계 진보적 지식인들의 자발적 연대적 사회운동체로 출범한 '민주와 진보를 위한 지식인연대(준)'가 '그러나 멈추지 않는 진보 - 사회인연합'과 통합해 이날 결성식을 갖게 됐다.

'사회진보를 위한 민주연대'의 창립에는 교수, 변호사, 사회단체 대표 등 사회각계 인사 40여명을 포함하여 진보적인 지식인, 노동, 사회운동가, 사회인 등 200여명의 발기인들이 참여했다.

【 행사와 동정 】

▶ 세계인권선언 50주년 기념주간 행사

- ☞ 세계인권선언 50주년 기념식 및 기자회견 / 12. 10(목) 오전 10:30 / 가톨릭센터 3층 회의실
- ☞ 김대중 정권 1년 인권정책 평가 좌담회 / 12. 10(목) 오후 5시 / 가톨릭센터 3층 회의실
- ☞ 군산 - 인권영화제 / 12. 11(금)-13(일) / 군산한겨레문화센터
- ☞ 세계인권선언50주년 기념연합예배 / 12. 13(일) 오후 3시 / 중부교회

▶ 농가부채 해결과 추곡수매가 인상을 위한 '98 전북농민대회

- ☞ 12. 9(수) 오후 1시 / 전주 코아백화점 앞 / 문의:0652-231-9659

▶ 양심수출 위한 시와 노래의 밤

- ☞ 12. 12(토) 오후 6시 / 장충체육관

▶ 환경운동연합 정기운영위원회의 및 송년의 밤

- ☞ 12. 12(토) 오후 4시 / 전북대학교 후생관 녹지원 2층 / 문의:0652-286-7977

“국가인권위 독립성 보장해야”

국제앰네스티 김대통령에 공개서한 보내

4일 국제앰네스티가 김대중 대통령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법무부 수정안이 여전히 인권위원회의 독립성과 조사권 등을 보장하고 있지 못하다는 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국가인권위원회를 국제 인권기준에 맞추어 설립할 것을 촉구했다. 국제앰네스티의 이번 공개서한은 지난 10월 23일 김대중 대통령과 박상천 법무부장관에게 보낸 공개서한에 이어 두 번째로 전달된 것이다.

국가보안법 철폐 달걀 시위

세계인권선언 50주년을 맞아 4일 전북대학교 앞에서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달걀 시위가 벌어졌다.

전북평화와인권연대가 주최한 이날 행사에서 50여 참가자들은 ‘국가보안법 철폐’ 등을 적은 대형입간판에 △정치 사상의 자유 보장 △국가인권위 완전 독립설치와 조사권 인정 △실업반대 △여성노동권 보장 등 구호를 외친 뒤 달걀을 던졌다.

이날 행사에는 청소년의 인권 보장과 반민중적 환경정책 중지를 요구하는 대학생들의 퍼포먼스도 선보여 관객들의 호응을 받았다.

신정연휴 축소 “중단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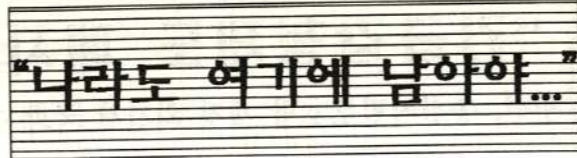
정부가 내년부터 신정연휴를 줄여 1월 1일 하루만 쉬도록 할 방침을 마련한 것에 대해 노동계 반발이 거세다.

노동계는 장시간 노동을 줄여야 하는 마당에 오히려 휴일을 줄여 더 장시간 노동체제로 가려나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총(위원장 박인상)은 성명을 내고 노동자에게 일방적 고통을 주는 신정연휴 축소방침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도 “주휴일 등을 포함한 전체 휴일은 91일로 다른 나라의 120~140일보다 훨씬 적다”며 “법정휴일을 줄이는 것은 근로시간단축을 통한 고용안정, 삶의 질 확보라는 시대적 요구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민족민주열사들의 아름다운 삶이 담겨있는
1999년 열사력 판매
‘이제 살아남은 우리가 나설 때입니다’
 - 용도: 탁상용(크기: 14cm×16cm) / - 가격: 5천원
 - 제작: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 문의: 02-742-3180(우편판매)



전북 출신 양심수 이화춘씨 준법서약 거부하며 대전교도소 4년째 수감중

지난 8월 15일 양심수 일부 석방 당시 석방되지 않은 양심수들이 있다. 그 가운데 현대 대전교도소에 수감중인 전북출신 농민운동가 이화춘(41세)씨가 있다. 그는 전북지역 출신으로서는 유일하게 지금도 옥살이를 하고 있다. 그가 지금도 옥중에 있는 이유는 간단하다. 준법서약을 써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준법서약을 쓰지 않은 이유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같은 사건으로 수감중이던 사노맹과 구국전위 사건 관련자들이 모두 준법서약을 쓰고 나간 뒤 “나라도 우리 활동이 정당했음을 증언하겠다”는 마음으로 감옥문을 나서지 않았다. 30년, 40년씩 전향을 거부하고 있는 장기수들을 뒤로 하고 나간다는 것도 역시 마음에 걸렸다.

이화춘씨를 읽어낸 국가보안법 조항들은 이적표현을 취득·소지, 반국가단체구성원과 회합, 금품수수, 목적수행 위한 잠입, 반국가단체구성원과 통신연락, 국가기밀누설, 반국가단체가입 등이다.

실제 사건 공소장과 판결문은 다음과 같은 문장들로 가득하다. 숙부를 만난 것은 반국가단체구성원과 회합, 생활비를 받은 것은 금품수수, 그를 만나러 출국한 것은 목적수행을 위한 잠입, 전화통화는 반국가단체구성원과 통신연락, 고국의 농민운동소식을 전한 것은 국가기밀누설... 이런 식이다.

구속되기 수년 전 사노맹에 가입했던 경력은 그가 안기부에 끌려간 구실이 됐다. 그러나 그를 간첩으로 만든 것은 오히려 그가 운동을 일타라하고 난 뒤의 일들이었다. 그를 철저히 읽어낸 것은 이번에는 제일동포 숙부를 만나 고국의 정세를 토론하고 역시 그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점이였다. 궁핍한 생활을 위한 보조금이었다는 주장은 통하지 않았다.

그는 현재 7년의 형기 가운데 4년을 마쳤다. 지난해 ‘양심수를 위한 시와 노래의 밤’ 행사에서 아버와 푸른 풀밭에서 뛰어놀고 싶은 염원을 담은 그림을 선보였던 아들 두배(당시 5살)는 벌써 아홉살이 됐다.

부인 이순덕씨는 그렇게도 가족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가 너무나 아속하다. 이번 성탄 때도 그가 석방될 것 같지는 않다. 그는 그대로 우직함을 버리지 않고 있지만 마음의 고통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전북지역의 양심수이면서도 이 지역에 수감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그와 그 가족의 아픔은 쉽게 잊혀지고 있다.



평화와인권

PEACE & HUMAN RIGHTS WEEKLY NEWS

제126호(특별호: 8면 발행)

1998년 12월 15일

발행처: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발행인: 문규현·김승환

편집인: 문만식

· 주소) [561-162]전주시 덕진구 진북2동 1034-1 숲정이성지사회관 · 전화) 0652-276-1253 · 팩스) 274-7486
· 통신ID) onespark(천.나.녹두) · E-mail : human@kor.inp.or.kr · Homepage : http://kor.inp.or.kr/onespark

생존권 담보한 인권유린

동암복지관 구타·성폭행 등 다반사

장애인을 보호하고 혜택을 준다는 명목으로 국가의 돈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도 관리 사회복지관이 저항능력이 없는 장애자를 상대로 구타·성폭행 등 심각한 인권유린을 일삼아온 일이 밝혀져 사람들을 경악하게 하고 있다.

문제의 복지관은 전주시 효자동에 위치한 동암복지관(이사장 양복규)이다. 90년 설립된 동암복지관은 전국에서 시설 등의 면에서 뛰어난 곳으로 인정받아 매년 3억 8천만원 가량의 국비지원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 3일 전주시의회 사회문화위원회 이재천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폭로한 것을 시작으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다.

조사된 내용에 의하면 동암복지관의 동암재활원 원생 허금미(26·정신지체장애 1급)씨는 재활원 직원 양규돈(36)씨와 박세훈(44)씨 두 명에게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당했고, 재활원생 백정숙씨는 시설직원의 아이를 출산했으며 이 아이는 영아원에 보내지기도 했다. 이외에도 감사장에 나온 원생들의 입을 통해 나온 이야기만 6건이나 된다.

또 저녁시간에 상습적으로 구타가 일어나고 있는데, 동암재활고등학교의 김경택(3년)씨는 시설과 처우문제로 데모를 준비하다가 원장실에서 한문선

생에게 구타당해 갈비뼈와 고막이 상했으며 당시 동료 재활원생 정우성씨의 카드로 기독교병원에서 6주간 치료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식단 또한 보관용·전시용일 뿐이고 실제 식단은 김치, 오뎅, 단무지 등이다. 직원들은 낮시간에 이사장 개인의 농장에서 작업하거나 학교 시설, 정원 가꾸기 등 공사 때마다 불려가 강제노역을 하고 있다. 또한 직원들이 대체로 이사장의 친인척이나 아는 사람으로 고용되어 있고 여교사는 결혼을 하게 되면 퇴직을 강요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엘리베이터가 있는데도 휠체어 장애인 사용하게 하고 다른 장애인들은 계단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청소를 이유로 2층 화장실은 폐쇄된 상태이다.

차량은 직원들의 작업이나 외출에만 이용되고 원생들은 콜택시를 이용하여 시내에 가거나 병원에 간다.

축탁의사 수당으로 130만원이 지급되거나 최근까지 이사장의 며느리가 축탁의사로 있었으며 진료하는 일은 거의 없었고 영양사가 소화제 등을 관리한다고 한다.

재활원 2층에 케익장식을 만드는 작업장이 있는데 월 임금은 7만원 정도이고 하루 결근하면 오히려 2만원씩을

물어야 한다. 국비 지원으로 지은 수영장은 재활원의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었으나 현재 일반인(월 3만6천원)들을 상대로 돈벌이를 하고 있고 이용자의 대부분이 일반인이다. 장애인들은 ‘보증인’이 있어야 회원권이 발급되어 거의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체육관은 거의 폐쇄된 채로 방치되어 있다.

이에 대해 동암재활원 교감 김규순씨는 행정감사에서 “일부 맞는 부분도 있으나 사실무근도 많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한편, 전주 시의회는 행정감사 이후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감사반을 구성했으며 오는 19일 의회에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재천 의원은 “얼마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암지마 사건이 있는 지 얼마 되지 않아 재활기관으로 전국적으로 이름있는 동암재활원이란 곳에서조차 이렇게 심각한 인권유린 행위가 있었다는 점에 분노한다”며 “비단 이곳 뿐 아니라 다른 곳도 꼼꼼대로 훑어있을 것이란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이번 동암재활원 사건에 대해 ‘조사특별위원회’를 발족해 보다 확실하고 광범위한 조사로 사회복지시설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권선언50돌 기념식 가져

세계인권선언 50돌을 환영하는 기념행사가 개최됐다.

전주가톨릭센터에서 열린 이날 기념식에는 문정현 신부·신삼석 목사 등 50여명의 각계 인사가 참석했고 강희남 목사 등 13명의 [→ 2면에 이어짐]

‘금요집회 1년’ - 제50회
 때: 12월 18일(금) 낮 12시, 곳: 군산 대공군기지 앞.

경찰이 피의자 가족수사 의혹

'조직폭력배' 진술 받으려 구타 등 가혹행위 의혹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피의자들을 심하게 구타해 일부 피의자들에게 폭력 조직 가입 혐의를 씌웠다는 의혹이 가족들로부터 제기됐다.

피의자가족들은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에 구속된 피의자 가운데 5-6명이 경찰수사과정에서 심하게 구타당하는 등 가혹행위를 당했고 억지자백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했다.

피의자가족들은 지난 7일 전주 북부경찰서 경찰관들을 폭행 혐의로 고소하면서 "양일동씨 등이 경찰청 강력수사대에 긴급체포돼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몽둥이와 발길질로 심한 구타를 당했다"며 가혹행위 증거물로 가족이 지난달 27일 전주 북부경찰서 유치장에서 연행된 지 5일만에 찍은 양일동씨의 신체 사진 7장을 제출했다. 이 사진에는 정강이와 허벅지, 팔 등 여러 신체 부위에 빨갛게 부어오른 흔적이 남아있다.

피의자 양일동(21세)씨의 아버지 양재환씨에 따르면 양씨와 같은 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풀려난 사람으로부터 "일동이 형이 경찰청 형사들한테 너무 많이 맞아서 죽을 줄 알았다. 너무 불쌍하고 억울하다. '아니오'라고 진술하면 눈뜨고 못 볼 정도로 두들겨 패고 진술을 강제로 받아냈다"는 진화를 받았다.

피의자가족들은 진정서를 통해 "지난달 28일 강력수사대장이 피의자 가족에게 '제발 맞았다는 말을 하지 말고 사진도 공개하지 말아달라. 그렇지 않으면 손해보게 된 것이다'라고 무마하려 했지만 경찰을 고소하게 됐다"고 말해 경찰측에서도 구타 사실을 시인했음을 밝혔다. 가족들은 "이번 사건은 경찰의 건수 위주 수사에 따른 결과"라며 가혹행위 경찰관들을 처벌해 줄 것을 요청했다.

양일동씨 가족들은 또 "양일동은 조직폭력배가 아니고 모범적인 청년이다"는 내용의 서명 120인치를 친척과

이웃 주민들로부터 받아놓고 있다. 가족들은 또 피의자 가운데 일부는 긴급체포 당시 여관으로 끌려가 폭행당했으며 경찰서 화장실에서 팬티만 입힌 채 심한 구타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구속된 피의자 13명은 지난달 24일 전북경찰청 강력수사대에 의해 구속됐으며 남원에 '신흥잠미파'라는 신흥 폭력조직을 결성하고 가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전북경찰은 지난 10월 15일부터 11월말까지를 '조직폭력배 집중소탕기간'으로 잡고 집중 단속해 1,518명을 검거하고 534명을 구속했으며 나머지 984명은 불구속입건한 바 있다.

"IMF 이후 환경정책 퇴보"

환경련, '전북 환경7대뉴스' 선정 새만금 간척사업 반대운동 제1위

전북환경운동연합(상임대표 전봉호)이 올해의 전북지역 7대 환경뉴스를 선정해 발표했다.

첫 번째 뉴스는 '새만금 간척사업과 백지화 운동 확산'이 선정됐다. 그동안 새만금 간척사업이 전북 발전의 청사진으로 관과 주요 언론에 의해 일반적으로 홍보돼 온 만큼 '전북지역 사회인사 100인 선언'을 비롯한 백지화 운동은 더욱 의미가 큰 것으로 꼽혔다.

제2위는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미지정과 용담댐 환경기초시설 설치 불투명으로 인한 상수원 수질관리 정책 실종'이 뽑혔다. 3위는 '전주시의 녹색도시 건설 정책 추진에 그린벨트 해제가 들어있다는 사실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전주시의 그린벨트 해제가 현

재 전주시가 다른 한편에서 주장하고 있는 녹색도시 건설과는 상호모순된다'고 보고 있다.

빠뜨릴 수 없는 뉴스 가운데 하나가 'IMF를 빌미로 한 환경정책의 퇴보'다. 환경운동연합은 'IMF 극복과 일자리 마련을 명목으로 각종 개발사업이 무계획적이고 환경과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특히 환경오염물질 관리 및 지도단속 등 환경정책은 상대적으로 덜 고려되고 있다'며 IMF 이후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엘니뇨·라니냐 등 기상이변이 전북지역에도 큰 피해를 입힌 점 △쓰레기 정책 부재로 인한 지자체와 지역주민과의 갈등 심화 등도 7대 뉴스에 선정됐다.

한편 전북 환경단체로는 김제 소재 (주)옥정산업 생수공장 건설을 막아낸 주민대책위가 선정됐다.

[→ 1면에서 이어짐] 세계인권선언 50돌 축하메시지가 담긴 15분짜리 비디오가 상영돼 시선을 끌기도 했다.

이에 앞서 전북지역 각계 민주인사 200인이 서명한 '세계인권선언 지지 200인 선언'을 채택했다. 선언문은 "세계인권선언과 우리 현실 사이의 거리는 멀다"고 지적하고 "세계인권선언 50돌을 맞아 정부가 화려한 말잔치 속에서가 아니라 진정으로 인권탄압국의 오명을 벗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 한때 동안 무원매주신 독자에게 러블리 감사드립니다. 그 뜻을 밑거름삼아 주간 「평화와인권」은 지역과 국내의 인권향상을 위해 더욱 힘쓰겠습니다..

구독문의: 0652)276 - 1253
후원계좌 · 예금주 문규현
국민은행 512-21-0065-982
우체국 402297-0062450
전북은행 535-21-0304454

기아특수강 구속자 첫 재판

'김김' 등 검찰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

정리해고에 항의하다 구속된 6명의 기아특수강 노동자에 대한 첫재판이 지난 12월 11일 오후 2시 반에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이뤄졌다.

업무방해, 폭력행위, 화염병사용 등으로 기소된 이들 6명의 노동자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1시간 반 가량 진행된 이날 재판에서 이들은 하나같이 사측의 정리해고에 대해 분개했고 검찰의 신문에서 조목조목 항변했다. 이들은 "갑자기 날아온 정리해고통보서를 받고 그 사유를 알려고 사무실을 항의방문한 과정에서 모든 일이 이뤄졌다" 진술했다.

또 노조위원장을 감금했다는 검사 신문에 대해 "노동조합측이 조합원에게 이렇다할 설명하나 없이 사측과 정리해고를 합의했다"며 배경을 설명한 노동자들은 "해명을 들으려 노조위원장 집에 찾아갔으며 위원장 스스로 운전해 농성장까지 왔을 때 농성자 10명과 사측 사람 60명이 있었고, 이런 상황에서 해고된 노동자들이 위원장에게 항의하자 위원장 스스로 의무실에 들어가버린 것"이라며 공소장에 기재된 위원장 감금 혐의를 부인했다.

처음부터 쇠파이프를 사용했다는 검사 신문에 대해서도 "10월 11일 밤 사측에서 폭력배를 등장시키기 전까지는 준비하지도 않았고, 가족들이 밤을 가지고 들어오려 하는 것을 폭력배들이 위협하며 못들어오게 하는 것을 보고 위협을 느껴 농성장을 지켜야겠다는 생각에 그 이후 쇠파이프를 준비한 것"이라고 말했다.

10월 12일 오전에 일어난 화재에 대해서는 "노조간부 20여명이 농성 노동자들을 끌어내려고 오자 이를 막으려고 신나통을 가져와 불을 붙였으나 던지는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 내려놓았는데 신나통이 프라스틱 파티병이어서 순식간에 녹으면서 평 티저 노조간부가 부상을 입게 된 것"이라며 "이 모든 사건은 갑자기 정리해고 통보를

받은 상황에서 그 이유를 알고자 했으나 이마지 불성실하게 대했던 노조와 사측의 무책임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 재판은 1월 15일 오후 3시 반에 사건 당시 화상(요치 10일)을 입은 신현천씨(기아특수강 노조간부)에 대한 증인신문이 있을 예정이다.

기아특수강 구속노동자들은 회사의 정리해고 방침이 부당함과 어용집행부 퇴진을 요구하며 해고 철회 농성을 벌이다 지난 10월 구속된 바 있다.

[주소: 군산시 군산우체국 사서함 10호(우573-600), 김학익(274), 김상배(377), 권태균(501), 김정기(132), 조남열(235), 권영(166)]

"독점자본 강화하는 구조조정 반대"

노동계, 정부·재계 합의안 반대

12월 7일 정부와 재계가 합의한 빅딜안에 대해 노동·사회운동계에서 분명한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나왔다.

사회진보를 위한 민주연대(대표 김진권)는 7일 성명을 내 "구조조정과 5대 그룹 빅딜이 오히려 독점재벌체제를 유지·강화하고 있다"며 "정리해고와 임금삭감, 세금을 엄청나게 인상하는 대신 재벌총수와 가족들의 사적자산을 환수해 4백만이 넘는 실직자와 생활고에 허덕이고 있는 민중의 생존을 위한

【 행사와 동정 】

▶ 현대자동차 전주지부 해고노동자 투쟁기금 마련을 위한 일일주점

- 12.16(수) 오후 3시 - 12시 / 전북대학교 제2학생회관(2층)
- 주최: 현대자동차노동조합 전주지부 해고자, 무급휴직자 원상회복투쟁위원회, 전북대학교 총학생회 / 문의: 0652-260-5090

사회보장정책을 확대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위원장 이갑용)도 성명을 통해 "정부와 재계가 추진하는 민간부문 구조조정이 경제파탄의 책임이 있는 독점재벌을 다시 살찌우고 관련산업 노동자들의 고용과 생존권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이 반민중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규탄했다. 민주노총 또한 "기업의 인수·합병과 빅딜과정에서 부채탕감, 출자전환, 각종 세금면제, 그리고 독점규제와 공정거래법상 예외인정 등은 수습조원이 넘는 국민세금이 특별로 제공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는 한편 "노동조합의 참여를 봉쇄한 일방적인 인수·합병과 빅딜추진에 수습만 노동자들의 고용과 생존권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12월 7일 김대중대통령이 주재한 정·재계 간담회 합의는 사실상 재벌들의 경제파탄 책임을 면죄해주고 주력업종 중심으로 재벌체제를 재편하겠다는 것으로 그동안 노동계와 사회운동계가 주장해 온 재벌개혁 방향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사제단, 양심수 집단면회

전주교구 사제단이 장기수들을 집단 면회했다. 전주교정의구현전주교구사제단(대표 김진화 신부) 소속 김봉술 신부 등 다섯명은 14일 오후 전주교도소에 수감중인 손성모(69세·무기수)씨 등 4명의 장기수들을 면회했다. 김봉술 신부(오수전주교회)는 "인권선언이 50년을 맞았지만 그 그늘에서 고통받고 있는 양심수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며 "김대중정부는 비전향장기수를 비롯한 모든 양심수를 조건없이 석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평화와인권> 창간 4주년 기념 좌담 / 김대중정권 1년, 전북지역 인권현실을 진단하다

지역 인권운동단체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사회: 문민지(평화의인권 편집인)
좌담자:
김승환(전북대 법대 교수)
박민수(민중사)
윤찬영(전주대 사회복지학 교수)
소문이(민주노동 전북 교섭국장)
때: 98년 12월 10일(목) 오후 5시
곳: 전주 가톨릭센터

사회자: 김대중 정권이 들어선지 10개월이 지났습니다. 이 기간은 한 정부를 평가하기에 적절한 시기라 생각합니다.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세계 인권선언 50주년을 맞았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텐데요. 김승환교수 말씀부터 들겠습니다.

김승환: 지금으로부터 50년전 1·2차 세계대전을 겪은 인류가 인간이 얼마나 약해질 수 있고 비참해질 수 있는지 경험하면서 다시는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 만든 것이 세계인권선언입니다. 선언은 인간은 존엄한 존재라는 것을 확인하고 그 존엄한 존재가 자신의 존엄성을 전개해 나가는 데 필요한 권리들을 전문과 본문 30개조로 명시했습니다. 전문에서는 인권의 존엄을 부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저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저항정신을 분명히 담고 있고, 지금와서 판단해 보면 당시로 봐서 상당히 앞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현행 헌법에서도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인권들이 당시에 선언했다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얘기해 본다면 우리 헌법에는 아직까지 생명권이 인권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생명권을 중요한 인권으로 규정하고 있고 우리가 계속해서 중병을 앓고 있는 사상의 자유 문제도 거기에선 당연한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또 혼인의 자유를 말하면서 놀랍게도 우리 민법이 90년 1월 13일에 들어온 이혼시 부부재산 분할

청구권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각도에서 본다면 50년전의 선언치고는 무척 선진적인 인권선언이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아직까지 국민들 대다수는 세계 인권선언이 무엇이고 그리고 거기에 구체화되어 있는 인권이 무엇이나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특히 의미가 있는 것은 50년전의 선언된 내용조차 헌법에 제대로 담지 못하고 있고 또 헌법에 있는 인권조차 실현되지 못하고 있고 우리 현실 관행상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볼 때 세계인권선언 50주년을 맞아 선언이 제기하고 있는 정신과 내용과 가치를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권은 계속해서 사치로 간주돼

사회자: 세계인권선언이 50주년이 되었지만 그 안에 내포된 주의주장들이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무시되고 실현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좌담회 내용에서 공안부분은 박민수 변호사, 사회복지부분은 윤찬영, 노동인권 분야는 소문이, 일반인권 부분은 김승환교수께서 말씀하시겠습니까. 먼저 IMF이후 우리의 사회복지 인권부분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윤찬영교수께서 말씀해주시죠.

윤찬영: 역사적으로 본다면 우리나라는 아직 사회복지인권을 논할 수준에 이르지 않았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시민사회 형성이라든지 자본주의 형성과정에서 서구 역사의 과정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상당히 파행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권 또한 우리가 싸워서 쟁취했다기보다 국가의 법에 의해서 주어진 형태로 존재했기 때문에 인권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권리 실현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자유권이나 참정권이 그렇습니다. 최근의 조선일보에 의해

서 벌어지고 있는 사상논쟁이라든지 국가보안법의 존재 등 우리는 아직도 자유권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정권 또한 금권정치 수준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가진자라든지 가진자를 이용해서 정치에 나서는 길 외에는 우리의 참정권이라는 것은 투표를 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미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경제수준에 비해 전통적으로 인권의 기본이라고 하는 자유권이나 참정권은 그렇게 발달하지 못했다는 것, 따라서 사회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필요성은 그동안 구조적으로 계속 발생되어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말하는 것은 참 사치스러운 것으로 보여졌던 것이 우리 최근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아이엠에프 구제금융을 받게 되면서 자유권이나 참정권보다 더더욱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것이 생존권 문제가 되었죠.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치밀하고 체계적인 제도적 뒷받침이 이뤄지지 못한 상태에서 급격하게 생존권 문제가 대두되면서 김대중정부는 일관된 철학을 가진 정책을 펴지 못하고 있고 IMF를 통한 신자유주의 공세에 수세적으로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효율성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를 내세우면서도 사회복지인권 측면에서는 이념적 저항성이 뚜렷하지 않은 몇 개의 산발적인 실업자 생존대책을 비효율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수준에 있습니다. 사회권에서 인권의 상황은 후퇴했다고 볼 수 있지만 긍정적으로 해석해보면 이제 비로소 우리도 사회권을 진정한 인권으로 보는 깨달

김대중정부는 일관된 철학을 가진 정책을 펴지 못하고 있고 IMF를 통한 신자유주의 공세에 수세적으로 우왕좌왕하고 있다

<평화와인권> 창간 4주년 기념 좌담 / 김대중정권 1년, 전북지역 인권현실을 진단하다

음을 주었다는 점에서 희망적이라 볼 수도 있습니다.

사회자: 사회복지권에서 가장 큰 피해를 당한 것은 노동자층인 것 같습니다. 노동자인권에 대해서 조문익씨의 말씀을 들겠습니다.

생존가능성 상실

조문익: 지난 1년여 사이에 노동인권 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정부의 발표를 보면 실업률이 3배정도 높았었고, 실업자의 숫자가 급증했습니다. 정부발표만 보더라도 노동인권은 지난해에 비해 약 200%정도 악화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자들이 체감하는 지수는 훨씬 큼니다. 예를 들어 전북지역에서 구속노동자의 수를 보면 96년엔 5명, 97년에는 하나도 없었고, 98년에는 22명입니다. 해고자의 수는 희망퇴직까지 합하면 4000명 정도입니다. 이것은 그 이전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숫자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생존가능성이 없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최근에 어떤 보고서에서 노동자들이 실직후 1년 정도면 자신의 재산을 소진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지금 그런 1년이 지나가고 있고 또 실업이 장기화되고 있으며 장기화 현상이라는 것이 거의 반전될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내년쯤 가면 현재 울체 겪었던 고등보다 훨씬 더 강한 고통이 노동자들에게 닥쳐올 것이라고 보는데요. 문제는 그런 고통을 고통스럽다고 말할 힘조차 상실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노동자들은 노동운동을 통해서 그런 고통을 표현하게 되는데 그런 고통을 표현할 수단조차, 그럴 힘조차 상실해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가장 큰 문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회자: 김대중정권의 사회권 정책에 대한 평가가 그렇게 긍정적이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치적 자유권에 관한 문제는 어떨까요? 김대중 정부에 대해서는 그런 면에서는 기대

가 있었는데요. 박민수변호사께서 정치적 자유권의 관점에서 지난 1년 동안의 공안형사관련부분을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수: 수사기관이나 법원 또는 법조 전반적인 부분의 인권은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크게 후퇴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국가보안법 폐지, 양심수 석방 문제는 전반적으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도 기존의 내부적인 행형인권이나 형법상의 인권은 탄력을 받지않고 나름대로 내부적 기준에 따라서 계속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대중정부가 출범했다고 해서 좋았었다거나 하는 점은 거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인권법이라든지 준법서약서라든지 그런 부분은 공과가 판단이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사회자: 더 구체적으로 평가는 각론에 들어가서 하기로 하구요. 국가인권 기구나 준법서약제 이런 것은 우리사회 인권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법제도라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개괄적으로 김승환교수께서 말씀해 주시죠.

공안인권, 역대정권과 별차이 없어

김승환: 방금 박민수변호사 말처럼 정권이 바뀌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 경우는 정권은 바뀌었지만 역대정권을 유지했던 시스템, 인적자원은 전혀 변한 게 없습니다. 시스템운영자의 의식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새 정부 인권 정책에 관해 몇 가지 아이টে를 가지고 논의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국가보안법 문제인데, 국보법의 본질은 사상 통제법이고 양심통제법이고 정치적 반대자를 축출·제거하는 법이고, 따라서 정치적으로 얼마든지 악용할 수 있는 법입니다. 국가보안법에 관한 새 정권의 정책은 역대 군사독재정권과, YS와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이 법을 놓고 극우보수세력의 눈치를 보는 데 급급하고 있다고 평가하는

것이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보법은 세계법률사적으로 볼 때도 희한한 법입니다.

다음으로 보안관찰법이 있는데 이 법에 의해서 보안처분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안관찰의 요건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법원의 재판을 받을 필요가 없이 몇 년이거나 갇신해서 보안관찰을 받게 하고 있습니다. 이 법도 전면적으로 폐지하든지 아니면 보안관찰 본래의 목적에 따라 법률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향각서 적용입니다. 사실은 이를 요구하는 근거법률이 전혀 없는데도 이를 강요해 왔습니다.

국가인권위와 인권법의 문제는 첫단추부터 잘못 끼워 나갔습니다. 법무부는 어찌됐든 국가인권위를 법무부 산하로 만들어야겠다는 것이고, 인권단체는 그러한 인권위라면 필요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사회자: 지금까지 지난 1년 동안 사회권, 노동인권을 되게나마 살펴 보았습니다. 그러면 영역별로 들어가보겠습니다. 먼저 새정부 들어서 공안인권상황은 어떤가요? 국가보안법 구속자 수를 비교하면 93년도는 63명, 국민의 정부는 310명이 출범 첫해 국보법으로 구속되었습니다. 9월말 현재 수배자수는 182명에 이릅니다. 이렇게 국보법 구속자가 급증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박민수: 저에게 관계되는 질문인데 어려운 문제네요. 현정부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과거 국보법 폐지를 주장했었습니다. 국보법 구속자 급증 이유는 정확히 검증할 수는 없지만, 공안관련 기관들의

노동자들이 노동운동을 통해 고통을 표현할 수단과 힘조차 상실해가고 있는 것이 노동인권의 현실이다

<평화와인권> 창간 4주년 기념 좌담 / 김대중정권 1년, 전북지역 인권현실을 진단하다

위상과 중요성이 점점 떨어지는 시점에 반사적으로 자기네들의 역할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좀 무리하게 나아간 부분이 있었다고 봅니다. 또 한가지는 기존의 인적, 법률적 체계 안에서 국보법에 관련된 수 있는 욕구가 더 분출하다보니 구속자 수가 늘어난 것 같습니다.

김승환: 부연해 말할 게 있습니다. 안기부 검찰 경찰 군내부 수사기관 등 우리가 소위 공안세력으로 분류하는 기관들의 존재이유는 자기들이 할 일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보법 위반자들이 항상적으로 존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50년만의 정권교체 앞에서 공안세력은 당연히 위기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자신들이 지어왔던 죄과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순수한 의미의 공안 사건이 아니라 만들어진 공안사건이 절대다수를 차지했습니다. 이것을 최후로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이 법원인데, 법원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공안사건들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유죄선고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법원에도 특별히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조직은 그 자체가 어떤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그 조직들의 위기의식이 새정권 들어 공안사범을 많이 만들었다고 봅니다.

사회자: 그러면 주제를 다시 한번 우리의 사회복지현실로 돌려봤으면 합니다. 윤찬영교수께 질문을 드립니다. 좀더 현실적으로 대중들이 실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회권요구에 "돈없다" 국민정부인가
윤찬영: IMF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여러 가지 것이 신자유주의라는 이념적 성향을 깔고 있는데 결국 경쟁을 강조한다거나 생산성, 시장성 등 시장적인 가치를 추구하다 보니까 인간적인 가치가 도외시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기업이 살기 위해 구조조정을 해야 되고 따라서 정리해고는 필연적

이라는 논리입니다. 정리해고를 하면 해고당한 노동자와 가족들의 생존이 직접적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IMF에서도 한국에 사회보장제도를 확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IMF가 구조조정과 정리해고 요구한 사실은 강조하면서 사회복지체계확립 요구한 것은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가장 저소득층이면서 사회적으로 열악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 정부가 기본적으로 인간적인 생활수준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유여하를 묻지 않고)'에 대해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사회운동하면서 느낀 것인데, 시민운동을 하는 분들조차도 "그렇게 하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냐"며 반론제기하시는 분들도 많고 정부당국자나 기업들은 그런 주장을 더더욱 강하게 합니다. 그게 바로 신자유주의, 아니 신자유주의 이전에 천민적인 자본주의가 요구했던 가치 또는 원칙이라고 하는 것에 세뇌를 당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가난한 자들을) 죽이지도 않으면서 제대로 보호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데 돈을 쓰는 것은 비효율·비생산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근로사업은 비교적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받았던 것은 일을 하면서 돈을 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건 괜찮은 거고 그것보다 더 못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국가가 책임을 지고 일방적으로 어떤 기초수준의 생활을 보장해주는 것은 마치 큰 도덕적인 문제가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모두 반성해야 합니다.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공부, 연구, 활동도 하면서 가장 억울하고도 가슴아픈 것은 사회복지에 대한 새로운 제도나 제도개선을 정부에 주장하면 반드시 돈이 없다는 대답이 돌아온다는 점입니다. 가진자들의 자유권이나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많은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거기 들어간 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기업이 무책임한 경영을 해서 부도가나

나 적자를 냈을 때 그것은 매워주고 돕기 위해 많은 돈을 쓰면서 그러면서 당장 하루하루의 생계를 책임지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의 생존권에 대해서는 돈이 없다고 말하는 그런 정부가 과연 국민의 정부라고 기대해야 하는지... 통탄할 일입니다.

사회자: 사회적으로 약자인 인권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가치의 변화가 뒤따라야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적 약자의 문제 가운데 간과할 수 없는 것이 여성인권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조문익씨가 여성노동자들을 포함해서 여성 문제를 다뤄줬으면 한다.

여성노동자 피해 가장 컸다

조문익: 전북여성노동자회와 민주노동당이 협력해서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여성들은 예를 들어 나이가 많은 여성,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 전체 업무 편제상 덜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해고됩니다. 공통적으로 여성이기 때문에 해고되는 것입니다. 정리해고 제1순위는 여성입니다. 현재 전체적으로 고용형태가 굉장히 변화했습니다. 이전에 상용근로자가 근소하게나마 비상용근로자보다 약간 많아서 48:52(작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비상용근로자 수가 상용근로자보다 많게 (58:42) 역전됐습니다. 여성들 가운데 비상용근로자는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성노동력이 적게 대접받는다는 사례입니다.

저는 만도기계에 경찰력이 투입된 이후 공권력이란 말을 절대 쓰지 않습니다. 가장으로서의 남성노동자들이 정리해고로 고통받는다면 그 뒤에는 그 고통을 나누는 여성이 있습니다. 직접 노동자로서뿐 아니라 노동자 가족으로서의 여성의 고통이 큼니다. 공공근로

우리나라는 가난한 자들을 죽이지도 않으면서 제대로 보호하지도 않는다. 그렇게 고통을 주고 있다

<평화와인권> 창간 4주년 기념 좌담 / 김대중정권 1년, 전북지역 인권현실을 진단하다

에 나오는 여성들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데 가장 심각해 생계가 위협받기 때문입니다.

박민수: 덧붙이자면, 형사절차에 있어서 여성은 피해자로 나타납니다. 성폭력과 가정폭력의 피해자들은 주로 여성들과 어린이들입니다.

형사고발 사건의 경우 여성이나 어린이의 인권이 수사과정에서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북도경에서 가정폭력방지법 시험을 본다는데 그와 아울러 그 부분(성폭력, 가정폭력)에 대한 조사를 할 때 피해자 인권이 존중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사회자: 이제 지역의 문제를 다뤄보겠습니다. 인권 및 사회운동의 관점에서 볼 때 전북지역의 개별성이라든지 특징적인 것은 어떤 것이 있다고 보는지 김승환교수께서 말씀해 주시죠.

전북지역 인권상황 더욱 악화될 듯

김승환: 우리 전북지역은 전통적으로 농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해가 가면 갈수록 줄어 들고 있습니다. 전북은 우리나라 시도 지역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입니다. 전북 인구는 전국의 4.4 - 4.5% 정도고 우리나라에서 전북 경제력 비율은 전국의 2% 정돕니다. 지역이 낙후되다 보니까 도민은 개발 환상에 빠져듭니다.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온 것이 바로 새만금간척사업입니다. 이 큰 이벤트를 내거니까 도민들은 이 사업만 성공하면 전북은 인간이 살만한 곳으로 될 것으로 착각하게 됐습니다. 집단취면 상태에 빠진 것이죠. 그러나 새만금간척사업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이 될까요? 완성되면 그 동안 생계를 유지해오던 사람들의 터전은 없어집니다. 시민·정치적 인권이 1세대 인권이라고 하고 사회·경제적 인권이 2세대 인권이라고 하는데, 요즘 국제사회에서 주목받는 것은 3세대 인권입니다. 이는 간단히 '연대권'이라고 합니다. 새만금에서 환경권 침해는 전세계 사

람들의 환경권을 침해하게 됩니다.

단순하게 말할 수 없겠지만 우리 전북지역은 가난한 지역입니다. IMF 이후 우리 지역은 더욱더 낙후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인권차원에서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전북지역에서 가족 파탄이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심해질 것이라 주장이 가능합니다. 가족생활기본권, 행복추구권이 침해되고 있습니다.

사회자: 최근에 전주교도소에서 재소자가 의문사한 사건에 대해 많은 의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암재활원 같은 사회복지 시설은 오히려 인권유린도 더 심각하고 대응하기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윤찬영교수께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윤찬영: 제가 알기로 교도소 재소자 하루 부식비와 생활보호대상자 하루 부식비를 비교해보면 재소자가 더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죄를 지은 사람보다는 가난한 사람이 더 못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특히 수용시설은 인권사각지대 중에서도 사각지대일 겁니다. 군대나 교도소에 갈 일이 생기면 반드시 법에 근거해서 법적 권한을 가진 공식적 당국이 영장을 발부해서 그 영장에 의해 시설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 시설은 영장이란 것도 없이 시장·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 사람들을 수용하게 돼 있어요. 얼마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양지마을은 인신매매 같이 술취한 사람을 잡아가다 가두고 노예노동을 시킨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행방불명된 사람이 있다면 두 종류일 겁니다. 북으로 넘어갔거나 사회복지시설에 잡혀가 있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법이나 인권이라는 것에서 도외시되는 것이 바로 사회복지시설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열악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의 인권의 실태를 보면 그 사회의 인권의 실태를 알 수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사실 죄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약력 복지자본가들이 설치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사회의 무관심입니다. 전주 동암재활원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지 얼마나 사실을 파악할 수 있을지는 진행중이지만 그들이야말로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그 누구의 관심거리도 되지 않는 사람들이 상당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북지역의 시민사회가 관심을 가지고 의식의 전환이나 사회운동을 전개해 나가는 것 그것이 현재 인권운동의 방향이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회자: 아쉽지만 시간이 되어 갑니다. 아직 지적하지 못한 것까지 함께 말씀해 주십시오. 마지막 인권의 문제를 얘기하면 인권운동가들이 반성할 문제와 특히 우리 전북지역쪽으로 눈을 돌려 앞으로 방향으로 제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3세대 인권 '연대권'에 주목하자

조문익: IMF를 거친 국가들은 대부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의 심화를 겪었습니다. 우리 지역은 특히 빈곤한 지역으로 그런 빈곤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전북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지난 한해 동안 자살자의 숫자가 순항은 600%, 남원·무주·장수 등은 300% 이상이 증가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130%가 늘었다고 합니다. 그 자살자의 45%가 가장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농촌지역의 자살이 많은 이유가 뭘까? 이미 계속된 살생정책으로 인해 더 이상 지탱할 힘이 없게 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IMF가 왔고 도시지역에 있던 가족과의 관계가 재조정이 되면 결국은 도시와 농촌의 동반자살이 이뤄져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IMF 이후 전북지역은 경제적으로 더욱 낙후될 것이고 이것은 더 큰 가족 파탄, 더 악화된 인권상황을 부를 것이다

<평화와인권> 창간 4주년 기념 좌담/김대중정권 1년, 전북지역 인권현실을 진단하다

더욱더 심화되리라는 사실은 너무 명백해서 굳이 사례를 들지 않아도 될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우리가 느끼고 있는 위기의식은 이에 훨씬 못미치는 것 같고 특히 그에 대한 대응이 매우 늦다는 점이 지적돼야 할 것 같아요. 국가는 무책임하고 민간차원의 운동들도 명백한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좀 더 좋은 사회를 만들려 하는 우리 운동진영에겐 지금이 새로운 각성과 결단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과 같이 계속 진행된다면 경제파탄 뿐만 아니라 인간성의 파탄이라는 것이 곧바로 올 것이라 생각돼요.

지금의 사회운동들이 인간의 권리를 지키고 발전시키는 관점에서 새로운 운동적 의식, 정신을 찾아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3세대 인권이라는 개념을 들으면서 드는 생각은 다른 사람들의 고통이 나의 문제라는 관점에서 운동을 전개하는 자세가 필요할 거라는 점이고, 그런 점에서 사회적 연대가 더욱 강화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윤찬영: 사회복지인권운동은 미미했다고 봅니다. 사회권이라는 개념이 한 사회에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자유권이 받아들여져야 했는데 우리는 자유권도 보장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으로 눈을 돌리면 고용실업대책전북도민운동본부에서 추진했던 실업자생활보호조례 청원 운동과 동암재활원의 비리에 대한 진상을 파악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비로소 사회복지인권의 대상이 돼야 할 문제를 인식하고 찾기 시작한 운동이었다고 봅니다. 상품이나 시장적 가치를 좇는 사회일수록 인권에 대한 의식은 희미해져 가기 마련입니다. 인권이라는 개념이 학술적으로나 운동적으로 중요하다고 보는데 바로 비민주적인 독점권력과 독점적 시장권력에 대항해서 인간을 지켜내는 보루가 될 수 있는 게 인권의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은 워낙 경제적으로 낙

후되어 있다보니까 개발에 대해 환상이 많아서, 중앙정부가 그동안 진행해왔던 경제성장이 우리 사회를 얼마나 비인간적으로 만들고 많은 갈등을 양산해왔는지를 생각 못하고, 지역개발·경제개발에 대한 지지, 경제학 박사로서의 도지사의 정책 등이 오히려 지역의 인권수준을 하락시키는 것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 이런 것을 시민인권단체에서 반대논리를 개발하고 시민들의 의식을 일깨우는 데 앞으로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지역의 인권운동의 출발점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난이 인권의식 확산 막을까 걱정

박민수: 원래 저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굉장히 낙천적으로 생각하는 편인데 오늘 여기와서 들어보니까 인권 상황이 정말 심각하네요. 형사적인 인권에서는 발전적인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가장 심각한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 해고문제인 것 같습니다.

전주지법에서 지난 10월에 검찰이 피의자와 그 가족에게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것인지 제재로 고지하지 않았다 해서 구속적부심에서 석방한 사건은 형사인권상 엄청난 발전을 가져올 획기적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판결을 받기까지 피해 당사자가 자신의 권리를 지키려고 문제를 제기했다는 점이 또한 중요합니다. 결국 인권 상황을 호전시키고 발전시키는 것은 인권을 침해받는 사람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다 좀더 고양된 인권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공안 부분에서의 형사 절차의 인권에서 예를 들자면, 자주대오사건에 대한 문제는 제가 맡은 부분은 대법에 올라가 있습니다. 재판 계류중이지만, 1심 과정에서 집유로 나오게 됐는데 강압 수사도 있었고 변호인 접견이 거부당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판과정에 있어서는 제가 생각할 때 일반 사건보다는 재판부에서 중립적인 입장에

섰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의 인권이 적잖게 향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청문제, 인권법 문제들이 있지만 낙관적으로 봐요. 다만 그 전제는 시대의 변화와 그리고 인권의식의 고양입니다. 그런데 먹고 살기 힘들다 보니까 고양되는 인권이 확 꺾어지지 않을까 걱정되긴 하는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북지부를 결성하려 하고 있습니다. 결성되면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진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인권부문에 있어서 법률적인 대응이나 조직적인 대응이 있다면 좀더 나아질 테니까요.

사회자: 김승환교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김승환: 우리의 인권의식을 볼 때, 먼저 우리가 무엇을 침해받고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군산 미군부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범죄나, 불법적인 불심검문 등에 의해 무엇을 침해받고 있는지를 모르는 채 당하고만 살아가는 안 됩니다. 또 도대체 누가 인권을 침해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인권침해자는 국가, 강대국, 그리고 나 자신도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과제로서 남겨진 것 가운데 하나는 우리 지역에 인권운동단체가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전주에 민변이 생긴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기존의 인권단체와 연대하면서 지역의 인권상황 개선에 앞장서기를 기대합니다.

사회자: 평화와 인권 4주년 창간 기념 좌담회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기회를 갖을 것을 기약합니다.

과제 가운데 하나는 지역에 인권운동단체가 활성화돼야 한다는 점이다. 민변이 생긴다는 것도 매우 고무적이다



평화와인권

PEACE & HUMAN RIGHTS WEEKLY NEWS

제 127 호

1998년 12월 22일

발행처: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발행인: 문규현·김승환

편집인: 문만식

· 주소) [561-162]전주시 덕진구 진북2동 1034-1 숲정이성지사회관 · 전화) 0652-276-1253 · 팩스) 274-7486
· 통신ID) onespark(천.나.녹두) · E-mail : human@kor.inp.or.kr · Homepage : http://kor.inp.or.kr/onespark

사찰자료 정보공개 청구

7개 사회단체 전북경찰청장 앞으로

경찰이 민간인과 사회단체들을 대상으로 존안카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자 전북지역 사회단체들이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전북지역경찰청장에 행정정보공개청구를 청구했다.

정보공개청구를 청구한 단체는 전북시민운동연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민주노총전북본부, 전주교정의구현전주교구사제단, 인권운동젊은연대, 전북인권선교협의회, 군산미군기지우리찾기시민모임 등 모두 7개 단체다.

21일 오전 기자회견 직후 경찰청 민원실에 접수한 행정정보공개청구서는 군산미군기지우리찾기시민모임 등 7개 단체를 청구인 단체로 하여 7개 단체의 임원 및 구성원 41명에 대한 단체자료와 인물존안자료, 기타 동향파악을 위해 작성한 일체의 자료에 대한 청구를 요청하고 있다.

청구단체들은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동향을 파악한다는 명목하에 사찰을 하고 이에 관한 신상명세 등을 작성하여 관리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인물존안자료, 단체자료 등의 사찰카드를 작성한 사실이 1998. 12. 15. 일간신문의 보도에 의하여 밝혀졌고, 이러한 사실은 피청구인과 행정자치부도 자인하고 있다"고 밝히고 "헌법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찰관련 정보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을 통해 "국민의 정부라 하여 과거 군사독재정권과 다르다고 믿었던 김대중 정부가 사찰카드

를 작성한 것은 정치민주화를 후퇴시키는 소행"이라며 "전북지역 인물 및 사회단체 존안카드를 즉각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경찰의 존안카드 작성의 배후에 안기부가 지적되고 있다"며 "정보공작정치로의 후퇴가 확인된 것"이라고 개탄했다.

한편 전북지방경찰청의 한 정보관계자는 사회단체들의 정보공개청구에 대

해 "사찰카드 작성에 대해 경찰청으로부터 지시받은 바는 있지만 전북지방경찰청은 시행한 바가 없다"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감옥 인권실태 공개

21일 인권운동사랑방(대표 서준식)과 천주교인권위(위원장 김형태)가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에서 「한국 감옥의 현실」(도서출판 사람생각) 출판회를 갖고 올 3월부터 진행된 감옥인권실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97년 이후의 전국 교도소 및 구치소 출소자들을 [2면에 이어짐]

"불평등이 존재하는 한 계속된다"

금요집회 1년 - 50회

매주 금요일 12시 군산미군기지 앞 금요집회가 어느덧 1년을 맞았다.

금요집회는 지난해 10월 민항활주사용료인상 반대를 외치며 시작했다. 시민모임의 회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50회 집회에서 문성주 공동대표는 성명서를 통해 "금요집회는 국민의 인권 보호와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한 투쟁"이라며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 개정 등 핵심적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금요집회는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요집회에 모두 48회 참석해 가장 여러번 참석한 기록을 세운 시민모임의 상임대표 문정현 신부는 50회 소감을 묻자 "정-그렇다. 하지만 해야지. 다 늘어 월체어 타고 와서라도 할거야. 끝까지 하지 않으면 절대로 해결되지 않아"라며 끈질긴 싸움의 필요를 역설했다.

98년 5월 8일 발족된 시민모임은 한해 동안 주로 미군범죄근절을 위해 싸웠고 그 결과 위조지폐법 테일.엘.허프가 5년형을 선고받는 성과를 낳기도 했다. 그러나 많은 사건들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있고(일부는 손해배상청구소송중) 또 주한미공군사령관에게 전달한 수차례의 항의 및 질의 서한에 대해서는 단 한 번의 답변도 받지 못했다.

시민모임은 환경문제를 중심으로 하는 감시활동과 환경피해조사 실현, 전국적 연대활동을 통한 한미행정협정운동 본격화, 그리고 무엇보다 시민과 함께 하는 운동으로 발전하도록 노력하는 것을 99년의 주요과제로 삼고 100회를 향해 깃발을 내렸다.

동암, 조사특위 뜨자 시설폐지 신고 전주시의회, 시 전체 사회복지시설 조사특위 구성

성폭행과 구타, 예산유용 등 장애인에 대한 심각한 인권유린을 상습적으로 저질러온 것으로 지적돼 문제가 된 사회복지법인 동암재활원(원장 박순자, 이사장 양복규)이 전주시의회에서 만장일치로 조사특별위원회가 만들어 지지마자 '시설폐지 신고'를 냈다.

동암재활원의 인권유린 실태는 98년 전주시에 대한 의회 행정사무감사 당시 증인들의 증언에 의해 드러난 사실이다.

그러나 동암재활원측은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근거없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법인의 명예와 직원들의 봉사정신마저 훼손시켰다"며 폐지 결정 이유를 밝혔다(자료: 전복일보).

이에 대해 이 문제에 꾸준히 관심을 갖고 있던 윤찬영 교수(전주대 사회복지학)는 "만약 허위사실이었던 조사를 하게 해서 진실을 밝혀내야 할 일이지, 오갈 데 없는 생활보호대상 장애인들에겐 생존권 문제가 달려있는 줄 뻔히 알면서 허위사실에 걸려서 내쫓는 폐쇄 방침은 재활원측이 장애인 인권의식이 조금이라도 있었는지 의심스럽게 하는 행동"이라면서 "이는 조사특위의 조사자체를 막아 그동안 밝혀진 인권유린행위를 완전히 덮어두려는 수작에 불과하다"며 분노했다.

한편 전주시의회는 21일 본회의에서 동암재활원 뿐만 아니라 전주시에 있는 모든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1월 11일부터 3월 11일까지 60일에 걸쳐 전면적인 운영실태조사작업을 벌이기로 만장일치로 결의하고 행정, 사회문화, 도시건설위원회 소속의원 15명을 위원으로 선출했다.

조사특위는 전주시 복지환경국을 비롯해 시내 사회복지시설중 주요 수용시설의 행정·재정적 지원사항과 시설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정밀 조사하기로 했다.

한편 동암재활원측은 21일 "지난 19일 법인 이사회를 긴급 소집해 재활시

설 폐지방향을 의결했다"고 밝히고 "72명의 입소원생 가운데 재가요양이 가능한 62명은 퇴소시켰으며 무연고자 등 10명은 법인차원에서 보호관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동암재활원측의 시설폐지 신고에 대한 전주시와 시의회의 대응에 귀추가 주목된다.

노조설립 불구, 사측 '베터기' 일관

대우상용차사무연구노조, 사측 노조와해 공작 직면해 총력투쟁

군산대우상용차의 노조와해 공작을 비롯한 부당노동행위를 규탄하는 집회가 지난 18일(금) 오후 2시에 회사 정문에서 열렸다.

이날 집회에는 조합원을 비롯해 대우그룹노동조합협의회(대노협)와 민주노총 전북본부 및 군산시지부, 기아특수강 해고자, 실업구복군산운동본부 등 각계에서 노동조합을 지지·지원하기 위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대우상용차사무연구노동조합은 지난 11월 2일 결성대회부터 지금까지 상식을 뛰어넘는 사측의 와해공작에 시달려왔다. 사측은 노동조합 자체를 인정하려 들지 않고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거나 매우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해 노동조합측은 아직까지 조합 사무실도 마련하지 못한 상태다.

노조측은 "탑장 등 관리자들이 조합원들을 식당에 감금해 탈퇴서 작성을 강요하거나 공휴일에도 집에 전화를 걸어 노조 탈퇴를 종용해 많은 조합원들이 가입서를 쓴 지 한달만에 탈퇴서를 썼다"고 밝혔다. 노조측은 또 "노조 집행부 전원에 대해 재택대기를 통보 하더니 지난 7일에는 급기야 조합원 두명에게 해고통보를 보냈다"며 회사

측의 노조와해 공작을 폭로했다.

이에 노동조합은 대노협 차원에서 대우상용차노조탄압대책위원회를 만들고 이날 집회후 임시노조사무실에서 회의를 갖고 대우상용차 정리해고 통보 및 노조탄압과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해 사측에 강력히 경고할 것을 결의했다. 또한 대노협은 23일(수) 대우그룹센터에서 현재 사측에서 자행하고 있는 정리해고, 부당노동행위, 차량 강제판매, 노조탄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기로 했다.

한편 이날 집회후 참석자들이 노조집행부와 함께 임시노조사무실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이를 막는 관리직 및 경비직원과 몸싸움이 벌어져 노조의 라성걸 부위원장과 경비직원 한 명이 부상을 당해 군산의료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면에서 이어짐] 상대로 총 2백64개 문항에 걸쳐 진행됐으며 2백30명이 설문에 응답하는 등 건국 이래 최초·최대규모의 조사였다. 이번 조사는 천주교인권위와 인권운동사랑방의 책임조사와 전국 주요 인권단체의 협조로 이루어졌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감옥현실은 '유엔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원칙' 등 국제인권기준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수용시설의 과밀화 현상, 재소자들에 대한 의료수준의 낙후, 출소자 57%가 동상을 경험하는 등 수많은 문제점이 지적됐다. (관련기사 다음호에)

※ 한때 동안 후원해주신 독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 뜻을 믿거름삼아 주간 「평화와인권」은 지역과 국내의 인권향상을 위해 더욱 힘쓰겠습니다.

구독문의: 0652)276 - 1253
후원계좌 · 예금주 문규현
국민은행 512-21-0065-982
우체국 402297-0062450
전북은행 535-21-0304454

<평화와인권>이 뽑은 98년 전북지역 인권 10대뉴스

잇단 정리해고와 노동자 구속사태 노동자들, 파업·장기농성으로 맞서

IMF를 빌미로 노동자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대량해고와 '법'의 이름으로 자행됐다. 노동자의 기본적 인권인 노동3권은 물론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인 생존수단마저 감탈당한 노동자들은 집단적인 파업과 장기농성으로 맞섰다.

이 과정에서 현대자동차 전주지부, 기아특수강(군산), 만도기계 익산지부 노동자들의 대량구속 사태가 벌어졌다. 이밖에 군산대학교, 태령상호신용금고(익산) 노동자들도 자본의 합리화 조치와 노동운동세력 탄압의 희생양이었다.

정보통신기술 이용한 노동감시 강화 버스 CCTV, 현대자동차 IC카드 등

언제부터인가 버스 안에서는 감시카메라가 작동하고 있다. 나와는 무관한 일로 무심코 지나치거나 잠깐 얼굴을 찡그리고 불쾌해하는 동안에도 여전히 감시카메라는 돌아간다. 지난 3월 안전여객(전주) 등 버스회사들이 감시카메라를 이용해 행동을 감시하고 의심이 간다는 이유로 버스기사 5명을 권고사직 형식을 빌어 사실상 해고하는 사건이 있었다. 현대자동차(전주)에서는 IC카드를 도입하려다 노조원들의 심한 반발로 현재 보류하고 있다. IC카드를 이용할 경우 출입기록뿐만 아니라 카드에 내장된 원격추적장치로 인해 동 건물내 이동사항도 모두 기록되게 된다. 즉 노동자가 카드를 가지고 건물 내에 설치돼 있는 전자센서를 지나치면 건물 내의 각 지역에서 노동자가 머무는 시간과 위치가 기록된다. 결국 컴퓨터는 노동자들이 화장실에 있는지, 공중전화 옆에 있는지, 흡연장소에 있는지 등등을 모두 기록한다는 것이다.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노동감시는 노동자들에게 이미 새로운 폭군으로 등장했다.

전주교도소 앞 천막농성

행형실태 개선 요구, 여전히 인권 그늘 - 2월

국민의 정부 출범을 앞두고 양심수 석방에 대한 기대는 어느때보다도 컸다. 한편으로 현실은 양심수들이 행형과 관련해 겪고 있는 부당한 처우를 드러내주었다. 양심수에 대한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인권·사회단체들의 투쟁은 전주교도소 앞의 5일 간의 천막농성으로 옮겨졌고 교도소장

퇴진요구로까지 이어졌다. 이에 놀라 교도소측이 사과와 함께 협상안을 가지고 나오으로써 농성이 일단락됐지만 교도소 내 인권침해 '소식은 여러 통로로 전해져왔다.

반면 교정기관의 인권침해를 지속적으로 감시·폭로하고 이에 대응해야 할 인권단체들은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지 못하고 '교도소 행형제도 개선'을 미래의 과제로 남겨놓았다.

청와대에 민원년 공학생 정계

학내문제 개선요구 담은 전자우편 트집 - 7월

전자우편(E-mail)을 이용해 청와대에 자신이 다니는 학교 행정의 불합리함에 대한 민원을 냈다가 학교측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사건이 일어났다. 이 학생의 민원내용은 △밤 10시면 버스가 끊기는데 학교수업이 늦게 끝나고 △책걸상이 키에 맞지 않아 불편하며 △보충수업비를 다른 시설에 사용한다는 등이었다. 학교측은 이 학생에게 무기정학 처분을 내리는 한편 "알고보니 오해였다"는 내용의 해명편지를 청와대에 다시 보낼 것을 강요했다. 이 사건에 대한 파문이 커지자 학교측은 중징계를 근신으로 낮췄고, 전라북도 교육청은 이 학교 교장을 전보조치했다. 그러나 교육부가 학교 내 청소년 인권실태를 먼저 조사하고 학생회 및 자발적 단체의 구성과 활동 권리 보장 등 학생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필요한 후속조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만도기계 경찰병력 투입 폭력진압

국민의 정부 폭력성 여지없이 드러내 - 9월

회사측의 노사 고용협약 일방적 파기와 정리해고 통보에 총파업으로 대응한 만도기계(익산) 노동자들에게 2천여명의 진압경찰과 헬리콥터·포클레인 등 중장비가 동원됐다. 정부는 같은 시각 전국의 만도기계 나머지 6개 공장에 1만 7천여명의 경찰병력을 투입해 파업을 강제진압했다.

익산공장에서는 세 살배기 아이로부터 임신부에게까지 최루탄이 난사되는 한편 갈비뼈가 부러지고 경찰의 집단폭력이 난무했다. 경찰병력이 만들어낸 무법천지, 국민의 정부가 참지 못하고 드러낸 6개월만의 자화상이었다.

강희남목사·문규현신부구속

재야통일운동 입막음 여전 - 8월

재야 통일운동에 대한 탄압은 국민의 정부 하에서도 가속 하기는 마찬가지였다. 3월 13일 특사로 풀려난 원로 통일 운동가 강희남 목사가 8월 15일 범민족대회 및 통일대축전 행사를 열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 죄를 쓰고 구속 됐다. 같은 시각 평양에서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대표 자격으로 통일대축전에 참가해 자신의 통일론을 펼친 문규 현신부가 역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덧붙여 럽 터져나온 석방운동은 두 통일운동가를 가둔 감옥문을 열었지만 첫 재판이 10월 16일 열렸을 뿐 정부와 공안당국이 이들에게 붙인 용공 딱지는 여전히 국가보안법과 어께 를 나란히 하고 있다.

저소득자·실업자지원 조례 청원

전국 최초, 도의회 응답 "재정부담" - 9월

유수한 국제 다국적기업의 전위부대격인 IMF가 그 확충 을 권고했을 정도로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체계는 허약하기 짝이 없다. 그런데도 지난 1년 동안 정부는 가난한 자들에 게 국가의 책임을 외면하다시피 했다. 이러한 가운데 고용 실업대책전북도민운동본부가 전국 최초로 '저소득자 및 실 업자에 대한 생활지원 조례'를 도의회에 청원했다.

조례(안)의 주내용은 △고용보험 미적용자 포괄 보호 △ 소득기준 지역주민 기본생활 수준 설정 등 우리사회에 거 의 전문한 사회안전망 실태에 경종을 울리는 내용들이었 다. 그러나 조례(안)은 재정부담을 구실로 도의회가 이를 미료처리함으로써 '찬밥' 신세를 면치 못했다.

실업자와 저소득자, 즉 가난한 자들을 확대하고 이들의 인권이 무시되는 우리 사회의 현실이 도의회 구성원들의 행위를 통해 다시 한번 드러난 사건이었다.

영장실질심사 미고지 이유 석방

피의자 인권 보호에 한가닥 희망 - 10월

범죄피의자들에게 보장돼야 할 인권을 수사기관에 의해 관행적으로 무시돼왔다. 그 관행을 불법이라고 규정해 제 동을 건 판결이 나왔다.

지난 10월 말 전주지법이 구속부심에서 "경찰이 피의자 에게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을 것인지를 분명히 묻지 않고 영장을 청구한 것은 불법"이라며 석방결정을 내린 것이다. 피의자의 형사절차상의 인권을 확인해준 판결이었다.

영장실질심사제는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신문한 뒤 구속 영장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로 97년 1월부터 시행돼 왔 다. 그러나 판사 직권으로 모든 피의자에게 판사대면권이

부여되던 시행초기와 달리 검찰의 반발로 현재는 피의자와 그 가족이 청구할 때만 영장실질심사를 받도록 돼 있다.

동암재활원 구타·성폭행 등 폭로

사회복지시설 인권사각지대로 드러나 - 12월

사회복지시설인 동암복지관의 동암재활원(전주)에서 구타 와 성폭행, 예산유용 등 상습적인 인권유린이 자행되고 있 다는 증언이 속출해 충격을 주고 있다. 더군다나 동암재활 원은 전국적으로 이름있는 재활기관이어서 그 충격은 더욱 크다.

현재 전주시의회는 의원 만장일치로 조사특위를 구성해 99년 1-2월 60일 동안 조사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그러나 재촬영측의 반발로 조사활동은 초반부터 어려움을 겪게 될 전망이다.

사건을 단순히 의혹으로 처리하고 싶어하는 일부 언론과 자신의 처지를 일반에 공개할 권리가 있는 장애인들을 이 해하지 못하는 사회적 의식, 사회적 약자들에게 인권비용 을 거의 지출하지 않는 정부, 이들 모두가 동암재활원 인 권유린 의혹의 진실을 규명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 다.

금요집회 1년-50회

끊이지 않는 미군범죄 맞서 싸운 1년 - 12월

올해는 굵직굵직한 미군범죄가 유난히 많았다. 그러나 예 년보다 미군범죄가 많이 발생했다기보다는 오히려 군산시 민의 감시활동이 더욱 강화된 결과로 표면에 드러난 미군 범죄가 많았다고 보는 편이 옳을 것이다.

군산미군기지 내 민항활주료 이용료 인상반대 투쟁으로 시작한 금요집회가 군산미군기지 우리땅찾기 시민모임 주 최로 올 12월 50회째를 맞았다. 이 가운데 시민모임이 이 끌어 지폐위조 미군피의자 허프에게 5년의 중형이 선고된 것은 집요한 시민행동의 성과로 꼽을 만하다.

그러나 미군범죄에 대한 한국정부의 재판권 행사율이 10% 미만인 현실에서 미군용의자에 의한 박순녀씨 살인사 건, 미군트럭에 의한 교통사고 사망사건과 목사가 중상을 입은 사건, 미군이 훈련중 발사한 유탄 때문에 마을주민이 임신중인 아이를 조산한 사건 등이 제대로 해결될 가능성 은 크지 않다.

결국 한미 불평등관계의 상징인 행정협정(SOFA)이 개정 되지 않고는 미군범죄에 대한 근본적인 단속과 처벌은 불 가능한 셈이다. 그러나 정부가 대한민국의 경제주권을 거 의 포기한 상태에서 대미 군사·정치적 자주권을 제대로 행사하겠느냐는 점에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압도적이다.



평화와인권

PEACE & HUMAN RIGHTS WEEKLY NEWS

제 128 호

1998년 12월 29일

발행처: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발행인: 문규현·김승환

편집인: 문만식

· 주소) [561-162]전주시 덕진구 진북2동 1034-1 숲정이성지사회관 · 전화) 0652-276-1253 · 팩스) 274-7486 · 통신ID) onspark(전.나.북두) · E-mail : human@kor.inp.or.kr · Homepage : http://kor.inp.or.kr/onspark

동암 진상규명 대책위 발족

"동암법인 전반 조사" - 사법조치 촉구 활동도

사회복지법인 동암사태에 대한 진상 규명과 정상화를 위해 시민사회단체가 공동대책위(상임대표 김승환·공대위) 를 만들었다.

전북시민운동연합 등 전북지역 7개 사회단체는 동암재활원 문제로 불거진 사회복지법인 동암의 전반적 문제에 대해 사회단체 차원에서 대책위를 만 들어 진상규명과 정상화를 위한 행동 에 나서기로 했다.

공대위는 지난 29일 오전 10시 반에 시청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 국적으로 이름있던 장애인 복지시설 동암에서 이미 밝혀진 성폭행과 구타 사건을 비롯해 사소한 관행에 이르기 까지 장애인에 대한 심각한 인권유린 이 자행되었고 그 외에도 많은 의혹들 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전주시의회가 조사특위를 만들자마자 시설폐지로 맞서는 동암측의 태도를 보면서 분개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또 "완전한 진상규명 과 처벌을 통해 다시는 사회복지시설 에서 인권유린 행위가 발을 딛지 못하 도록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대책 위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이어 "동암재활원에서 발생 한 원생들에 대한 상습 성폭행과 부실 한 식사 제공, 동암재활 중·고등학교 에서 벌어진 중증장애인에 대한 구타, 장애인 치료를 목적으로 국고로 지어 진 동암복지관의 수영장 시설을 목적 외로 사용한 점 등 재활원 뿐 아니라 사회복지법인 동암 전반에 대해 이미 많은 문제가 드러난 만큼 동암법인 전

체에 대해 조사작업이 벌어져야 한다" 고 주장했다.

또한 공대위는 "이미 사실로 밝혀진 성폭행과 구타사건, 식단 불이행, 수 영장 목적의 사용 사실만으로도 장애 인에 대한 인권유린 실상이 충분히 분 노할 만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직원 몇 명만 자르면 된다는 식의 동암측과 시·도 관리당국의 태도에 서글프기까 지 하다"며 "이는 우리 사회의 장애인 에 대한 인권의식 수준이 어떠한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 다.

참석자들은 또 "더군다나 동암측은 반성은커녕 시의회에서 조사특위를 만 들자마자 몸이 불편한 재활원생들을 동원해 혐의시위를 하는가 하면 이미 시의회에서 증언하고 자술서까지 쓴 피해원생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사 실이 아니었다는 자술서를 쓰라'는 회 유와 협박을 일삼아 증언자들을 공포 스펙게 하는 등 상식을 초월한 파렴치 한 행동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분노했 다.

공대위는 "앞으로 동암측의 인권유린 전반에 대한 진상규명은 물론 사법조 치를 촉구하고 재활원만의 문제가 아 닌 만큼 시의회 뿐 아니라 도의회와 전북도당국의 조사작업과 조치를 촉구 하며 더불어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 대책수립을 다각적으로 촉구할 것"이

라고 덧붙였다.[사태일지 2면에]

"약속지킬 의지있나"

민주노총 전북, 국민회의 농성

민주노총 전북지역본부(본부장 염경 석)는 50여개 단위노조 대표자들이 28 일 오후 3시부터 국민회의 전북도지부 사무실에서 농성투쟁을 시작했다.

전북본부는 "정부가 이미 약속한 교 원노조 법제화와 실업자 초기업단위 노조가입 등이 29, 30일에 열리는 임 시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지 의심스 럽다"며 "실업자 노조가입을 반대하는 법무부장관을 해임하라"고 요구했다.

전북본부는 "98년 한해동안 전북지역 에서 사상유례없는 22명의 노동자들이 구속됐고 지금도 군산 기아특수강 노 동자 6명이 구속상태에 있다"며 "불법 적인 정리해고와 부실경영을 일방적으 로 떠넘기는 경영주에 맞서 생존권을 지키려 한 전체 구속·수배 노동자들 을 즉각 석방하고, 수배를 해제하라" 고 강력히 촉구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이러한 요구를 외면할 경우 김대중정권과 독점재벌, IMF 지배에 맞선 전면적 투쟁을 벌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노총 이갑용 위원장은 △정 리해고 중단 △교원노조 법제화 △실 업자 초기업단위 노조가입 △구속노동 자 석방·수배해제 등 '5가지 당면요 구'를 내걸고 29일로 22일째 단식농성 을 벌이고 있다.

독자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전체세대 69% "관리비낼 돈 없다"

- 군산 모 영구임대아파트를 통해 본 빈곤문제 -

IMF에 따른 실업과 빈민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영세민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빈곤상태를 조금이나마 알 수 있는 자료가 있어 소개한다.

군산에 소재하고 있는 이 영구임대아파트는 전체 1,999세대로 모두 5,227명이 살고 있다. 이 중 생활보호대상자세대는 586세대 1천 396명으로, 아파트 주민의 27%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곳 아파트에는 장애인들도 307명이나 돼 군산시 장애인 등록수 650명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모자 세대도 105세대로 군산 전체 모자세대 188세대의 2/3가 이곳 아파트에 살고 있다.

이처럼 이곳 영세민 아파트는 전체 1999세대중 절반이 넘는 1000세대가 생활보호대상자이거나 장애인 또는 모자세대로 빈곤의 악순환에 시달리고 있으며 사실상 도시 속의 '슬럼지역'으로 자리잡고 있다.

군산시와 정부는 이곳 아파트에 생계비, 주거비, 자녀학비,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경노연금등 각종의 공적부조책을 펼치고 있지만 전체세대의 69%가 임대료 또는 관리비 장기체납으로 가스, 전기단절 위기로 놓여있을 만큼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갖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전체세대의 60%에 달하는 저소득층의 집단화 현상이다. 주민들은 스스로 이곳을 빈민촌 또는 영세민촌이라고 여기는 경향이 뚜렷해 이미 심리적 슬럼프로 전락했다. 특히 이곳 주민들 상당수가 심신장애 및 기타 질병으로 근로활동이 어려운 현실은 빈곤이 악순환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또 빈곤으로 인해 가정이 파괴되면서 청소년 범죄가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곳 아파트의 총 인구 5,227명중 실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은 2,652명

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 중 60% 이상이 건축일용직, 파출부, 영세노점등 단순 근로자들로서 고정적 수입이 없고 또 대부분이 연중 4-6개월은 실업상태에 있어 탈빈곤화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운동 사회복지사는 이곳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해 "행정편의적으로 되고 있고 사전개입보다는 사후개입 등으로 대처능력이 떨어지는 등 한계가 많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이곳에 대한 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해 사회복지요원의 확대와 민간단체의 관심을 촉구했다.

"공습 미국지지 경솔"

미국의 이라크 공습을 규탄하는 집회가 열렸다.

사회진보연대(대표 김진균) 등 8개 사회단체 회원 40여명은 24일 서울 광화문빌딩 앞에서 <미국의 이라크 침공 규탄과 한국정부의 지지 표명에 대한 항의집회>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이미 160만명 이상의 사망자를 낸 이라크 상황은 이번 군사공격으로 인해 더욱 악화될 위기에 처했다"며 "미국의 대규모 국방비와 이라크인들의 죽음을 담보로 하는 미국의 군사적 봉쇄정책과 경제제재조치는 분명히 철회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공습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는 미국의 대이라크 봉쇄정책도 철회하라고 항의했다.

참석자들은 또 미국의 군사공격에 대한 한국정부의 즉각적인 지지표명을 비판하면서 "국제사회에서의 객관적 위치를 포기한 편향적 행위였다"고 밝히고 "이라크에 대한 미국의 군사행동을 북한과 연관시키는 위험천만한 정부의 발상에 엄중히 항의한다"고 덧붙였다.

동암재활원 사태 일지

▲ 11월 - 동암재활원 직원 2명 원생성폭행 혐의로 구속

▲ 12월 4, 5일 - 도내 방송·신문에 동암재활원/복지관 문제점 기사화

▲ 12월 7일 - 전주시의회 사회문화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청취: 재활중고등학교 학생1명, 재활원생 1명, (전)재활원생 친형 1명, (전)재활원 영양사 1명, 재활중고등학교 교감(일부 내용은 사실이지만 대부분이 허위라는 주장과 인권유린 폭로 증언이 대립됨)

▲ 12월 19일 - 행정사무감사 이후 전주시 차원의 조사활동 결과 의회에 보고

▲ 12월 21일 - 전주시의회 전주시 관내 사회복지시설 중 수용시설 조사특위 구성

▲ 12월 22일 - 동암재활원 폐지신고

▲ 12월 22일 - 동암재활원 일부 원생·부모·직원, 전주시의회 앞과 이재전 의원 집 앞에서 항의시위

▲ 12월 23일 - 동암재활원 폐지신고 전주시 반남(국고지원 시설, 수용자 처리방법 부재 이유)

▲ 12월 29일 - 사회복지법인 동암사태 진상규명과 정상화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 구성

*** 재정이 매우 어렵습니다. 후원금을 보내주시고, 주간 평화약인 권은 여려분의 후원금을 받아 발행합니다.**
구독문의: 0652) 276 - 1253
후원계좌 · 예금주 문규현
국민은행 512-21-0065-982
우체국 402297-0062450
전북은행 535-21-0304454

<자료요약> 한국 감옥의 현실 : 감옥 인권실태 조사보고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인권의 사각지대"

[편집자주] 인권운동사랑방과 천주교 인권위가 주관하여 지난 2월부터 10개월에 걸쳐 전국 교도소(구치소) 출소자 230명을 대상으로 벌인 감옥 인권실태 설문조사 보고서가 책으로 묶여 나왔다(도서출판 사람생각). 인권의 가장 원초적인 형태가 신체의 자유이고 이를 가장 현실적으로 억압하는 곳이 감옥이라는 점에서 그곳의 실태가 어떤가는 한 사회의 인권 현실을 알아보는 가장 현실적인 잣대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보고서의 주요 분석결과를 소개한다.

1) 수용시설의 문제점

우리나라 행형시설의 수용조건은 국제기준에 대단히 못 미치고 있다. 무엇보다 전체적으로 너무 많은 인원을 수용하고 있다. 광주교도소의 경우 약 5명의 사망에 33명의 재소자가 수감됐다는 응답이 있었다. 전국 40여개의 시설에 1일 평균 약 7만명의 미·기결수가 구금돼 있는 과밀수용 상황은 피구금자의 처우에 기본적인 한계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재소자가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생활공간과 재소자 건강에 필수적인 사방의 조명이나 환기시설, 화장실, 냉난방 등에 관한 특별한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다.

2) 의료 및 위생

의료와 관련하여 가장 심각한 문제는 자격을 갖춘 전문의요인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다. 전국적으로 약 60명의 의사가 6만명이 넘는 재소자를 담당하고 있다.

신체 위생과 관련한 기본적·세부적 내용이 대부분 시설의 장의 재량사항이므로 피구금자가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규정상 재소자는 여름철

5일에 1회, 겨울철 주 1회의 목욕 및 샤워를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나라 기후에 맞지 않는 비위생적 규정인데다 이마저도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 이번 설문조사에 나타나고 있다.

3) 독서와 집필

행형법은 "수용자가 도서의 열람을 신청하는 때에는 특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없는 한 당해 소장은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제33조)고 명시하고 있지만 여전히 행형당국은 이를 소장의 절대적인 재량행위로 해석하고 있는 듯하다.

물론 재소자의 열독권을 충족시킬 수 있는 도서시설을 갖춘 곳이 거의 없으며, 재소자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법령을 비치한 곳도 드문 실정이다. 이번 설문조사에 응답한 재소자의 90% 이상이 행형법이나 재소자 처우관련 법규를 보지 못하거나 모른다고 답변해 단적으로 그 실태를 말해주고 있다.

특히 행형당국이 특정 재소자와 관련된 신문이나 잡지 기사를 삭제한 뒤 제공하는데 이는 재소자에게도 헌법상 보장되는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것으로 전근대적인 사상통제수단에 다름 아니다.

4) 분류·누진 처우

초범자와 재범자를 같이 수용하면 자칫 수용시설이 범죄학교로 전락하기 쉬워 분류 처우에 가장 기본적 관심을 쏟아야 하지만 이를 간과한 혼거수용이 전국의 시설에서 광범위하게 발견되고 있다.

행형법에서도 분류·누진 처우 규정이 너무 간단하고 추상적이어서 법무부에 너무 많은 재량을 주고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수형자 분류처우 규칙이나 분류처우 요강이 개별 처우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누진제에 의한 구금의 완화 정도에 초점을 두고 있는 실

정이다. 더욱이 사상범에게는 분류에서 급외로 제외할 수 있게 하여 강제적인 사상전향을 합법화시키고 있는 점도 지적되어야 할 부분이다.

5) 여성 재소자에 대한 처우

전국 어느 시설에도 여성의 특성을 이해하는 전문의요인이 없다. 전국 유일의 여성교도소인 청주여자교도소마저도 산부인과 전문의가 없어 임신부가 있는 경우 검진이나 치료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뿐만 아니라 장기간 차가운 바닥에서 생활하면 부인과 계통의 질환을 앓기 쉬운데 전국 어디에도 온돌 난방시설은 없어 많은 장기구금자들이 여성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다.

여성 재소자에 대한 직업훈련도 남성에 비하여 단순하고 차별적이다. 재소자의 소질이나 적성이 반영될 여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 많은 여성 재소자에게 소내 직원식당 취사일을 시켜 직업훈련에서조차 제외되기도 한다.

6) 징벌·불복제도

우선 징벌절차에서 피구금자의 위반 사실을 고지받을 권리와 변명의 기회를 부여받을 권리 등이 법률에 의하여 보장되어 있지 않다. 설문결과에 따르면 많은 경우 규율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징벌 결정 이전 단계에서 이미 가혹행위를 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해 적정 절차에 의해 징벌이 결정되는지에 심각한 의문을 품게 한다. 재소자가 징벌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상급기관 등에 신속하게 재심을 청구하여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나 우리나라는 재심이나 불복절차가 명문상으로 보장돼 있지 않다.

나아가 비인도적인 다양한 방법(징벌방에 창이 없거나 징벌목적으로 계구를 사용하는 등)으로 징벌이 가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별 기고	동암재활원 사태를 보면서
	윤천형 [전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1987년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이래 에바다농아원, 소쩍새마을, 양지마을 등에서 사회복지수용시설의 비리가 끊이지 않고 발생해 왔다. 형제복지원 사건 이래 매년 2~3건 정도가 계속 마스크에 보도되어 왔다. 사회의 민주화와는 동떨어지게 사회복지수용시설의 만행과 비리는 계속 자행되어 오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우리 지역에서도 동암재활원의 인권침해 사실이 폭로되고 시의회에서는 사회복지 수용시설에 대한 조사특위가 구성되었으며, 이에 항의라도 하듯이 동암측에서는 시설폐쇄 신고로 맞서고 장애인과 그 부모 그리고 직원들을 동원하여 시의회와 문제의 사실을 폭로한 시의원 집 앞에서 소란행위를 벌이는 등 매우 불미스러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회복지 수용시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즉, 시설 수용자들은 당연히 사회로부터 격리되어야 한다는 생각과 그들의 생존권을 어느 정도 지켜주는 대신 자유권은 억압하여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시각이 그것이다.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견해이다. 범죄인에 대해서도 격리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견해가 설득력을 가지고 있는데, 하물며 사회복지대상자들이 격리되어 시설에 수용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은 인권의 측면에서나 재활의 측면에서나 바람직한 입장이 아니다. 또한 시설에서 이들을 재워주고 먹여준다는 이유로(그 질에 대해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들의 신체적, 성적, 정신적, 통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을 억압해도 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견해들이 우리사회에 폭넓게 자리잡고 있는 것은 우리사회가 그들을 하나의 인간으로 여기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나마 인습이기 때문에 생명만큼은 인위적으로 어찌지 못하는 것 뿐이다.

**양지마을보다는 낫지만
본질적인 성격에서는
유사한 측면이 많다.**

따라서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생존권이라는 것도 결국 죽지 않을 만큼만 보장되는 것이지 "인간적"이라는 수식어를 붙이기가 민망한 수준인 경우가 많다. 자유권없는 생존권은 존재할 수 없다.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인들에게는 자유권과 생존권이 동시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다. 자유권이 극도로 제한되면서 생존권은 그야말로 죽지 않을 수준에서 유지되는 인간은 역사적으로 노예라고는 없었을 것이다. 양지마을과 같이 극단적인 비리를 야기시킨 시설들은 한마디로 노예시설인 것이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동암 사회복지법인 산하의 시설의 상태는 양지마을보다는 나은 상태이기는 하지만 본질적인 성격에서는 유사한 측면이 많다. <첫째> 이사장의 친인척 및 지인들을 중심으로 운영되어 온 점이다. 이는 사회복지서비스가 수용자의 재활 또는 자활을 위해 전문적인 실천이 요구된다는 점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것이다. <둘째> 성폭행 및 구타가 빈발한다는 점이다. 일부 사실에 대해서 동암측은 부정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전문가보다는 사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 운영되는 시설들 대부분이 이러한 경향을 보인다. <셋째> 돈과 관련된 문제이다. 동암재활원에 등록된 장애인은 20~30여명이지만 재활하고 학생들까지 합하여 약 70여명이 함께 생활하고 있는데, 시에서 제공되는 보조금은 70여명 분에 해당된다. 학생들에 대한 것은 교육청에서 지원한다. 또한 작업장에서 일한 장애인들의 노임이 최저임금은커녕 월 7만

원선이라든가, 1일 결근하면 2만원을 공제한다든가, 직원이 장애인들의 통장에서 돈을 함부로 인출한 점, 식당의 메뉴와 실제 식사가 차이가 있는 점, 장애인종합사회복지관의 부대시설인 수영장인 일반인을 위한 수익사업으로 거의 전용되다시피한 점 등을 볼 때 정부보조금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네째> 감독관청의 지도감독이 소홀하다는 점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관청이 비리시설의 비호세력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다. 동암재활원과 관련하여 시당국이 시의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보면 역시 시설운영자의 입장에서 현상을 바라보고 있다는 점이 역력하게 나타나 있다.

그렇다면 사회복지시설들이 왜 이러한 상황에 있는 것일까? 그것은 사회 전반적으로 사회복지에 대한 의식이 몇 세기 전의 수준에 있다는 점, 따라서 시설 운영자 또한 그러한 수준에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 정부 또한 사회복지에 대해 무책임하고 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결국 수용된 장애인들의 인권과 복지는 한낱 공염불에 그치고 그들이 모든 피해를 떠 안는 것이다.

이제 지역사회에서 뜻있는 건강한 시민들이 장애인의 인권보장을 대변해 주고, 그들의 자활과 재활을 위해 사회복지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지방자치단체의 복지행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구하고 감시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시민운동조직의 구성과 사회복지이념과 의식에 대한 공유가 필요하다.

**현재동안
일경주병에 기고해
주신 필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평화와인권

99년

129호-177호



평화와인권

PEACE & HUMAN RIGHTS WEEKLY NEWS

제 129 호(2면발행)

1998년 1월 5일

발행처: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발행인: 문규현·김승환

편집인: 문만식

· 주소) [561-162]전주시 덕진구 진북2동 1034-1 숲정이성지사회관 · 전화) 0652-276-1253 · 팩스) 274-7486
· 통신ID) onespark(천.나.녹두) · E-mail : human@kor.inp.or.kr · Homepage : http://kor.inp.or.kr/onespark

동암 진상규명 대책위 발족

“동암법인 전반 조사” - 사법조치 촉구 활동도

사회복지법인 동암사태에 대한 진상 규명과 정상화를 위해 시민사회단체가 공동대책위(상임대표 김승환·공대위)를 만들었다.

전북시민운동연합 등 전북지역 7개 사회단체는 동암재활원 문제로 불거진 사회복지법인 동암의 전반적 문제에 대해 사회단체 차원에서 대책위를 만들어 진상규명과 정상화를 위한 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공대위는 지난 29일 오전 10시 반에 시청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국적으로 이름있던 장애인 복지시설 동암에서 이미 밝혀진 성폭행과 구타 사건을 비롯해 사소한 관행에 이르기 까지 장애인에 대한 심각한 인권유린이 자행되었고 그 외에도 많은 의혹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전주시의회가 조사특위를 만들자마자 시설폐지로 맞서는 동암측의 태도를 보면서 분개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또 “완전한 진상규명과 처벌을 통해 다시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인권유린 행위가 발을 딛지 못하도록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대책위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이어 “동암재활원에서 발생한 원생들에 대한 상습 성폭행과 부실한 식사 제공, 동암재활 중·고등학교에서 벌어진 중증장애인에 대한 구타, 장애인 치료를 목적으로 국고로 지어진 동암복지관의 수영장 시설을 목적으로 사용한 점 등 재활원 뿐 아니라 사회복지법인 동암 전반에 대해 이미 많은 문제가 드러난 만큼 동암법인 전

체에 대해 조사작업이 벌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대위는 “이미 사실로 밝혀진 성폭행과 구타사건, 식단 불이행, 수영장 목욕의 사용 사실만으로도 장애인에 대한 인권유린 실상이 충분히 분노할 만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직원 몇 명만 자르면 된다는 식의 동암측과 시·도 관리당국의 태도에 서글프기까지 하다”며 “이는 우리 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인권의식 수준이 어떠한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참석자들은 또 “더군다나 동암측은 반성은커녕 시의회에서 조사특위를 만들자마자 몸이 불편한 재활원생들을 동원해 항의시위를 하는가 하면 이미 시의회에서 증언하고 자술서까지 쓴 피해원생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사실이 아니었다는 자술서를 쓰라’는 회유와 협박을 일삼아 증언자들을 공포스럽게 하는 등 상식을 초월한 파렴치한 행동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분노했다.

공대위는 “앞으로 동암측의 인권유린 전반에 대한 진상규명은 물론 사법조치를 촉구하고 재활원만의 문제가 아닌 만큼 시의회 뿐 아니라 도의회와 전북도당국의 조사작업과 조치를 촉구하며 더불어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 대책수립을 다각적으로 촉구할 것”이

라고 덧붙였다.[사태일지 2면에]

“약속지킬 의지있나”

민주노총 전북, 국민회의 농성

민주노총 전북지역본부(본부장 임경석)는 50여개 단위노조 대표자들이 28일 오후 3시부터 국민회의 전북도지부 사무실에서 농성투쟁을 시작했다.

전북본부는 “정부가 이미 약속한 교원노조 법제화와 실업자 초기업단위 노조가입 등이 29, 30일에 열리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지 의심스럽다”며 “실업자 노조가입을 반대하는 법무부장관을 해임하라”고 요구했다.

전북본부는 “98년 한해동안 전북지역에서 사상유례없는 22명의 노동자들이 구속됐고 지금도 군산 기아특수강 노동자 6명이 구속상태에 있다”며 “불법적인 정리해고와 부실경영을 일방적으로 떠넘기는 경영주에 맞서 생존권을 지키려 한 전체 구속·수배 노동자들을 즉각 석방하고, 수배를 해제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이러한 요구를 외면할 경우 김대중정권과 독점재벌, IMF 지배에 맞선 전면적 투쟁을 벌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노총 이갑용 위원장은 △정리해고 중단 △교원노조 법제화 △실업자 초기업단위 노조가입 △구속노동자 석방·수배해제 등 ‘5가지 당면요구’를 내걸고 29일로 22일째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

독자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스스로가 희망이 되면 무엇이 두려울까?

조문의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운영위원)

새해가 밝았다. 모두의 기대와 설렘속에 정동진에도, 팽곶마을에도, 천왕봉에도 새해를 기다리던 모든이에게 감동을 주는 시벨겐 해가 동시듯이 떠올랐다. 우리의 마을위에도, 잡자고 있는 사람들의 가슴 깊숙한 곳에도 해는 떠올랐다. 우리는 새해를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가 새해를 갈망했던 것은 98년이 그만큼 참혹하였기 때문이고, 그만큼 우리의 행복에 대한 열망과 새로운 세상에 대한 갈증이 더더욱 깊어졌기 때문이다. 지난 1년간 수많은 절망과 좌절과 고뇌가 우리의 두어깨를 짓눌렀다. 그리고, 수많은 가정파탄과 노숙과 죽음이 뒤이었다. 우리는 이제 절절하게 느낀다. 희망이 사람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이며 심지어 꿈은 사람의 생명 그자체라는 것을!

우리는 말하고 싶다. 목젓을 울려 사람들에게 당당한 목소리로 말하고 싶다. 우리는 사람이며, 사람답게 살고 싶다고! 때로는 웅얼거림으로, 때로는 고향으로, 아우성으로, 몸부림으로 꿈틀대고 싶다. 우리는 우리의 꿈을 잡고 싶지 않다. 아니 감추지 않을 것이다.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은 단순히 호흡이 계속되고 있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살아있다는 것은 꿈을 꾸는 것이며, 꿈을 꾸는 것은 자신을 사회적 실천으로 내던진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짐한다. 새로운 1000년을 맞이하는 설레이는 마음으로 깊은 꿈을 키워가겠다고... 우리는 다짐한다. 다른 이가 말하는 것을 들리는 그대로 듣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는 삶을 살겠다고... 우리는 다짐한다. 서로 소리내어 알려가며 나누며 더불어 살겠다고...

이제 21세기라고 한다. 새로운 1,000년이 시작한다고 한다. 우리는 독재의 사슬이 기어이 수많은 사람들

을 도륙하는 데까지 이르렀던 1980년 5월광주에서 그 참혹함과 함께 송고한 '헌신'과 '민주주의'와 '정의'와 '평화'와 '인권'을 볼 수 있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본능은 말한다. "가장 참혹한 곳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이 핀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어둠이 밀려들기 시작하면, 머지않아 햇새벽이 올 것이다. 우리의 고통은 고통만이 아니며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산통이기도 하다". 우리의 본능은 '극에 달하면 돌아간다' (극즉반, 極即反)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므로, 1999년 토끼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참혹함에 가위눌려 살지 않겠다. 우리는 과감하게 꿈을 꾸겠다. 행복의 나라를 만들기위한 조그만 한 꿈을 임대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가 만들어 나갈 희망찬 세상에 대해 이야기하고, 희망을 현실로 만들기위해 실천하겠다. 토끼의 지혜와 발랄한 걸음으로 지구에 발을 내딛겠다. 아이가 자신의 발로 우뚝 서면 기어다닐 때와는 다른 세상이 펼쳐지듯이 소중한 꿈을 담은 이가 발을 내디디면 발을 내디디는 곳은 희망과 기쁨으로 가득찬 세상이 된다. 우리 모두의 진정을 모아 전심전력할 수 있다면 어디에 오해와 시기와 좌절과 절망이 있으랴. 세상은 꿈꾸는 자의 것이다. 우리는 고통스러운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에만 머물지 않고, 사람으로 고통을 나누고, 희망으로 눈을 모아나가는 새로운 세상에 살고 있다.

우리 모두가 희망찬 사람이 될 때 희망찬 세상이 만들어진다. 우리 모두가 희망을 실천할 때 꿈은 현실이 된다. 새로운 세상이 된다. 우리가 갈길은 저항과 반란의 길이 아니라 바로 사랑과 평화의 공동체를 만들어나가는 혁명의 길이다. 서로 손을 잡고, 어깨를 다독거리며, 옆에 있는 사람들의 눈빛을 들여다보자. 지금 여기에 새세상이 있다. 이 모든 것이 나의 꿈, 우리의

꿈이다.

동암재활원 사태 일지

▲ 11월 - 동암재활원 직원 2명 원생 성폭행 혐의로 구속

▲ 12월 4, 5일 - 도내 방송·신문에 동암재활원/복지관 문제점 기사화

▲ 12월 7일 - 전주시의회 사회문화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청취: 재활중고등학교 학생 1명, 재활원생 1명, (전)재활원생 친형 1명, (전)재활원 영상사 1명, 재활중고등학교 교감 (일부 내용은 사실이지만 대부분이 허위라는 주장과 인권유린 폭로 증언이 대립됨)

▲ 12월 19일 - 행정사무감사 이후 전주시 차원의 조사활동 결과 의회에 보고

▲ 12월 21일 - 전주시의회 전주시 관내 사회복지시설 중 수용시설 조사특위 구성

▲ 12월 22일 - 동암재활원 폐지신고

▲ 12월 22일 - 동암재활원 일부 원생·부모·직원, 전주시의회 앞과 이재전 의원 집 앞에서 항의시위

▲ 12월 23일 - 동암재활원 폐지신고 전주시 반남(국고지원 시설, 수용자 처리방법 부재 이유)

▲ 12월 29일 - 사회복지법인 동암사태 진상규명과 정상화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 구성

※ 재정이 매우 어렵습니다. 후원금을 보내주시십시오. 주간 평화와인권 권은 여러분의 후원금을 받아 발행합니다.
구독문의: 0652) 76 - 1253
후원계좌 · 예금주 문규현
국민은행 512-21-0065-982
우체국 402297-0062450
전북은행 535-21-0304454



평화와인권

PEACE & HUMAN RIGHTS WEEKLY NEWS

제 130 호

1998년 1월 12일

발행처: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발행인: 문규현·김승환

편집인: 문만식

· 주소) [561-162]전주시 덕진구 진북2동 1034-1 숲정이성지사회관 · 전화) 0652-276-1253 · 팩스) 274-7486
· 통신ID) onespark(천.나.녹두) · E-mail : human@kor.inp.or.kr · Homepage : http://kor.inp.or.kr/onespark

노동감시 새기술 도입 말성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RF 카드 도입 추진

사회복지법인 동암사태에 대한 진상규명과 정상화를 위해 시민사회단체가 공동대책위 (상임대표 김승환·공대위)를 만들었다.

전북시민운동연합 등 전북지역 7개 사회단체는 동암재활원 문제로 불거진 사회복지법인 동암의 전반적 문제에 대해 사회단체 차원에서 대책위를 만들어 진상규명과 정상화를 위한 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공대위는 지난 29일 오전 10시 반에 시청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국적으로 이름있던 장애인 복지시설 동암에서 이미 밝혀진 성폭행과 구타사건을 비롯해 사소한 관행에 이르기까지 장애인에 대한 심각한 인권유린이 자행되었고 그 외에도 많은 의혹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전주시의회가 조사특위를 만들자마자 시설폐지로 맞서는 동암측의 태도를 보면서 분개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또 "완전한 진상규명과 처벌을 통해 다시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인권유린 행위가 발을 딛지 못하도록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대책위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이어 "동암재활원에서 발생한 원생들에 대한 상습 성폭행과 부실한 식사 제공, 동암재활 중·고등학교에서 벌어진 중증장애인에 대한 구타, 장애인 치료를 목적으로 국고로 지원된 동암복지관의 수영장 시설을 목적으로 사용한 점 등 재활원 뿐 아니라 사회복지법인 동암 전반에 대해 이미 많은 문제가 드러난 만큼 동암법인 전

체에 대해 조사작업이 벌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대위는 "이미 사실로 밝혀진 성폭행과 구타사건, 식단 불이행, 수영장 목적의 사용 사실만으로도 장애인에 대한 인권유린 실상이 충분히 분할 만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직원 몇 명만 자르면 된다는 식의 동암측과 시·도 관리당국의 태도에 서글프기까지 하다"며 "이는 우리 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인권의식 수준이 어떠한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참석자들은 또 "더군다나 동암측은 반성언제쯤 시의회에서 조사특위를 만들자마자 몸이 불편한 재활원생들을 동원해 항의시위를 하는가 하면 이미 시의회에서 증언하고 자술서까지 쓴 피해원생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사실이 아니었다는 자술서를 쓰라'는 회유와 협박을 일삼아 증언자들을 공포스럽게 하는 등 상식을 초월한 파렴치한 행동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분노했다.

공대위는 "앞으로 동암측의 인권유린 전반에 대한 진상규명은 물론 사법조치를 촉구하고 재활원만의 문제가 아닌 만큼 시의회 뿐 아니라 도의회와 전북도당국의 조사작업과 조치를 촉구하며 더불어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 대책수립을 다각적으로 촉구할 것"이

라고 덧붙였다. [사태일지 2면에]

"약속지킬 의지있나"

민주노총 전북, 국회의원회 농성

민주노총 전북지역본부(본부장 염경석)는 50여개 단위노조 대표자들이 28일 오후 3시부터 국회의원회 전북도지부 사무실에서 농성투쟁을 시작했다.

전북본부는 "정부가 이미 약속한 교원노조 법제화와 실업자 초기업단위 노조가입 등이 29, 30일에 열리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지 의심스럽다"며 "실업자 노조가입을 반대하는 법무부장관을 해임하라"고 요구했다.

전북본부는 "98년 한해동안 전북지역에서 사상유례없는 22명의 노동자들이 구속됐고 지금도 군산 기아특수장 노동자 6명이 구속상태에 있다"며 "불법적인 정리해고와 부실경영을 일방적으로 떠넘기는 경영주에 맞서 생존권을 지키려 한 전체 구속·수배 노동자들을 즉각 석방하고, 수배를 해제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이러한 요구를 외면할 경우 김대중정권과 독점재벌, IMF 지배에 맞선 전면적 투쟁을 벌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노총 이갑용 위원장은 △정리해고 중단 △교원노조 법제화 △실업자 초기업단위 노조가입 △구속노동자 석방·수배해제 등 '5가지 당면요구'를 내걸고 29일로 22일째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

독자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전체세대 69% "관리비별 돈 없다"

- 군산 보 영구임대아파트를 통해 본 빈곤문제 -

IMF에 따른 실업과 빈민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영세민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빈곤실태를 조금이나마 알 수 있는 자료가 있어 소개한다.

군산에 소재하고 있는 이 영구임대아파트는 전체 1,999세대로 모두 5,227명이 살고 있다. 이 중 생활보호대상자세대는 586세대 1천 396명으로 '아파트 주민의 27%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곳 아파트에는 장애인들도 307명이나 돼 군산시 장애인 등록수 650명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모자 세대도 105세대로 군산 전체 모자세대 188세대의 2/3가 이곳 아파트에 살고 있다.

이처럼 이곳 영세민 아파트는 전체 1999세대중 절반이 넘는 1000세대가 생활보호대상자이거나 장애인 또는 모자세대로 빈곤의 악순환에 시달리고 있으며 사실상 도시 속의 '슬럼지역'으로 자리잡고 있다.

군산시의 정부는 이곳 아파트에 생계비, 주거비, 자녀학비,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경노연금등 각종의 공적부조책을 펼치고 있지만 전체세대의 69%가 임대료 또는 관리비 장기체납으로 가스, 전기단절 위기로 놓여있을 만큼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갖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전체세대의 60%에 달하는 저소득층의 집단화 현상이다. 주민들은 스스로 이곳을 빈민촌 또는 영세민촌이라고 여기는 경향이 뚜렷해 이미 심리적 슬럼가로 전락했다. 특히 이곳 주민들 상당수가 심신장애 및 기타 질병으로 근로활동이 어려운 현실은 빈곤이 악순환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또 빈곤으로 인해 가정이 파괴되면서 청소년 범죄가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곳 아파트의 총 인구 5,227명중 실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은 2,652명

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 중 60% 이상이 건축일용직, 파출부, 영세노점등 단순 근로자들로서 고정적 수입이 없고 또 대부분이 연중 4-6개월은 실업상태에 있어 탈빈곤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운동 사회복지사는 이곳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해 "행정편의적으로 되고 있고 사전개입보다는 사후개입 등으로 대처능력이 떨어지는 등 한계가 많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이곳에 대한 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해 사회복지요원의 확대와 민간단체의 관심을 촉구했다.

"공습 미국지지 경솔"

미국의 이라크 공습을 규탄하는 집회가 열렸다.

사회진보연대(대표 김진균) 등 8개 사회단체 회원 40여명은 24일 서울 광화문빌딩 앞에서 <미국의 이라크 침공 규탄과 한국정부의 지지 표명에 대한 항의집회>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이미 160만명 이상의 사망자를 낸 이라크 상황은 이번 군사공격으로 인해 더욱 악화될 위기에 처했다"며 "미국의 대규모 국방비와 이라크인들의 죽음을 담보로 하는 미국의 군사적 봉쇄정책과 경제제재조치는 분명히 철회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공습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는 미국의 대이라크 봉쇄정책도 철회하라고 항의했다.

참석자들은 또 미국의 군사공격에 대한 한국정부의 즉각적인 지지표명을 비판하면서 "국제사회에서의 객관적 위치를 포기한 편향적 행위였다"고 밝히고 "이라크에 대한 미국의 군사행동을 북한과 연관시키는 위협천만한 정부의 발상에 엄중히 항의한다"고 덧붙였다.

동암재활원 사태 일지

▲ 11월 - 동암재활원 직원 2명 원생 성폭행 혐의로 구속

▲ 12월 4, 5일 - 도내 방송·신문에 동암재활원/복지관 문제점 기사화

▲ 12월 7일 - 전주시의회 사회문화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청취: 재활중고등학교 학생 1명, 재활원생 1명, (전)재활원생 친형 1명, (전)재활원영양사 1명, 재활중고등학교 교감(일부 내용은 사실이지만 대부분이 허위라는 주장과 인권유린 폭로 증언이 대립됨)

▲ 12월 19일 - 행정사무감사 이후 전주시 차원의 조사활동 결과 의회에 보고

▲ 12월 21일 - 전주시의회 전주시 관내 사회복지시설 중 수용시설 조사특위 구성

▲ 12월 22일 - 동암재활원 폐지신고

▲ 12월 22일 - 동암재활원 일부 원생·부모·직원, 전주시의회 앞과 이재전 의원 집 앞에서 항의시위

▲ 12월 23일 - 동암재활원 폐지신고 전주시 반납(국고지원 시설, 수용자 처리방법 부재 이유)

▲ 12월 29일 - 사회복지법인 동암사태 진상규명과 정상화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 구성

*** 재정이 매우 어렵습니다. 후원금을 보내주시고, 주간 명확확인 권은 여러분의 후원금을 받아 발행합니다.**
구독문의: 0652) 276 - 1253
후원계좌 · 예금주 문규현
국민은행 512-21-0065-982
우체국 402297-0062450
전북은행 535-21-0304454

<자료> 전북대 혁신대오 1심 판결문(요약) - 이적단체 구성 무죄 - "규약 문건 없고 대부분 신빙성 없는 증거들"

[편집자주] 98년 12월 전북대 혁신대오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은 철저한 증거주의에 입각해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결은 98년 2월 전북대 혁신대오 사건으로 구속된 엄성복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에 뒤이은 것이다.

사건: 97고합230, 231, 232 (병합)
국가보안법 위반 등

재판부: 전주지방법원 제3형사부
피고인: 임성중, 오경섭, 김진욱
변호인: 법무법인 백제종합법률사무소 / 담당변호사 김점동, 김영, 안호영 / 변호사 전봉호

주문: 피고인 임성중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1995. 7. 하순경 및 같은 해 10. 중순경의 각 반국가단체 활동 동조의 점,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반국가단체 활동 동조 목적의 단체구성의 점은 각 무죄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반국가단체활동 동조 목적의 단체 구성의 점

다. 판단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구성죄의 이적단체란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 선동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 합법적인 단체와는 달리 그 특성상 조직이 비밀스럽고 대내외적으로 명확한 실체를 가지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은 사실이나, 국가보안법의 해석 적용에 있어서는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 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국가보안법의 입법목적과 국가

보안법 제2조에서 반국가단체를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계를 갖춘 단체라고 정의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국가보안법상의 이적단체 또한 위와 같은 반국가단체 찬양 등의 이적목적 외에도 위 단체가 계속적이고도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춘 조직적인 결합체라는 단체로서의 실체를 갖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과연 피고인 오경섭, 피고인 김진욱이 1995. 10. 초순경 「전북대 혁신대오」라는 조직의 결성 및 인선을 논의하고, 같은 달 21. 09:00경부터 12:00경까지 사이에 위 공소사실 기재의 장소에서 피고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적단체의 결성식을 개최함으로써 위와 같이 계속적이고도 지휘통솔체계를 갖춘 단체를 구성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으나, 이(그 가운데 위 공소사실 부분에 한함)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증거능력이 없거나 그 신빙성에 의문이 있어 선뜻 믿기 어렵고, 기록에 첨부된 「인간중시」 제하의 각 문건 사본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북대 혁신대오」라는 명칭의 반국가단체활동 동조를 목적으로 한 계속적이고도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춘 조직적인 결합체를 결성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중략)
(2) (사) 다음으로 조직의 목적 및 규약에 관하여 보건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위 혁신대오의 목적과 규약이 기재된 어떠한 문건도 발견되지 아니하였고, 그 조직원이라는 위 유영산은 이를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그 내용 또한 앞에서 인정한 종전 전북대 내에 있었다는 <전북대 자주대오 활동가 조직>과 그 목적은 서

로 비슷하고, 그 규약은 완전히 같은 점에 비추어 1995. 10.경 과연 위 <전북대 자주대오 활동가 조직>과 전혀 별개의 「전북대 혁신대오」라는 조직이 새로이 결성되어 위와 같이 유사한 내용의 목적 및 규약이 채택되었는지에 관하여 의문이 생긴다.

(아) 또 조직 결성식에 관하여 보건대, 위와 같이 대낮에 공개된 장소에서 많은 학생들이 드나드는 가운데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의 활동에 동조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이적단체의 간부를 선출하고, (중략)

(자) 나아가 위 행사 이후 「전북대 혁신대오」 조직의 조직원들이 다시 모임을 가지면서 전북대 총학생회를 배후에서 조종하거나 주체사상을 전파하기 위하여 구체적이고도 지속적인 활동을 하였다는 아무런 자료를 찾아볼 수 없고, (중략)

(3) 그밖에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엄성복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사 사본 및 기록에 첨부된 각 판결문 사본은 모두 당해 사건의 피고인들의 자백 및 위 각 사건의 다른 피고인들 등의 자백 등 대부분 앞서 신빙성이 없어 배척한 증거들을 근거로 한 것에 불과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전북대 혁신대오」라는 이적단체가 과연 결성되었는지에 관하여 많은 의문점이 있는 점에 비추어 이들 또한 그대로 믿기 어렵다.

라.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전북대 혁신대오」라는 이적단체 구성의 점은 모두 범죄의 증거가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2. 3. (중략)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8. 12. 17.
재판장 판사 방극성/ 판사 박대준/
판사 강인상

인권 수준 - 국민 수준
 김익수 [전북대 철학과 교수]

인권이 존중되지 않는 사회는 야만 사회이다. 한국 국민은 수준 높은 정치인을 대통령으로 선출했다(지금 정치권은 전반적으로 불신당하고 있으나 김대중 대통령만은 정치를 잘하고 있다는 평을 듣는다). 따라서 한국은 인권의 수준이 높은 문명사회를 자랑할 만한 하나의 조건을 갖춘 셈이다. 게다가 김대중 대통령은 민주운동가였고, 특히 인권탄압의 대표적 희생자였다. 그러므로 김대중 대통령이 다스리는 국민의 정부 아래에서 인권이 침해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한국 사회의 인권 상황은 결코 바람직한 수준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이미 작년에 인권문제로 많은 지적이 있었다. 하지만 경제 위기 때문에 인권문제는 우선 순위에서 좀 밀렸을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작년의 일은 그렇게 이해해 주고, 금년에는 달라질 것으로 기대해 보고 싶은 심정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금년 1년은 기다렸다가 연말에 가서 평가를 내려보자는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될 거다. 그러다가는 결정적인 1년을 마치 허송할 위험이 너무도 크기 때문이다.

안기부 얘기는 참으로 안타깝다. 김대중 대통령이 정보기관의 개혁을 그렇게 분명하게 공약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정보기관원들이 중앙과 지방의 정부 기관을 드나들며 사찰한다는 것이 어느 시대 얘기인가. 교육기관에 정보원들이 드나들던 것은 박정희 전두환 때 얘기 아닌가. 김영삼 대통령 때 국회 내에 안기부의 전용 사무실을 두었다면 그것은 3당 야합으로 발목이 잡힌 무능한 대통령이 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 아닌가? 그런데 왜 지금 김대중 대통령이 집권하고 있는 시대에 국회에 안기부가 자리를 잡고 있어야 하는가?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한나라당 편일까? 아니다. 그렇다면 한나라당이 안기부 요원의 국회 상주를, 아니 심

우리는 더 이상 한 사람의 정치지도자에게 모든 것을 기대해서는 안된다. 국민이 나서지 않으면 국민의 정부는 문명의 정부 짝이 날 수밖에 없다.

지어 정치 사찰일 망정 나무랄 자격이 있는가? 그것도 아니다. 그들은 자격이 없다. 자기네가 하던 짓을 현 정부가 아직 청산하지 못하고 있는 것뿐이므로 그들은 말할 자격이 없다. 그러므로 한나라당을 비판하고, 정부 여당은 비판하지 말아야 하는가? 아니다. 그럼 무얼 하자는 것인가?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국민의 정부가 한나라당에게 발목이나 잡히면서 허우적거리는 짓을 그만 하라는 것이다. 왜 확실하게 못하는가? 경제문제 하나 웬만큼 풀어가면, 국민들은 지원한다. 그것 하나 하기도 힘든데, 무슨 다른 요구들을 하느냐고 말하는 것은 잘못이다. 지난 1년 동안에 분명한 개혁의 원칙들을 내놓고 추진했어야 한다. 늦었지만, 금년에는 정말 개혁의 의지를 보여주어야 하고, 개혁을 실천해야 한다. 개혁을 위해서 인권이 기본이다. 모든 분야의 개혁에서 인권이 기초가 되어야 한다. 안기부와 검찰, 경찰 등 국가의 질서를 유지하는 권력 기구를 개혁해야 한다.

교문 얘기가 나오는 한 공권력은 허깨비다. 공권력으로 국민을 사찰하고, 감시하며, 공작하는 정권은 허수아비다. 부패를 일소하고, 법 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에게 원칙적인 기준을 적용해야 하고, 철저히 공평한 법의 집행을 유지해야 한다.

그렇게 한다면 한나라당이 발목을 잡을 수가 없다. 특별감사제를 도입하면 성역없는 사정이 가능하고, 부정과 부패를 뿌리 뽑고, 인권을 지킬 수 있다. 자신감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구태의연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다. 개혁적인 시민단체를 중심에 세우기보다 손쉬운 관변단체를 활용하려 하고, 정정당당한 정치개혁과 정계 개편 대신 야당 의원 빼오기, 날치기 통과 같은 꼼수를 쓰게 된다.

1999년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아이 엠 에프 위기 극복의 해, 21세기와 새 밀레니엄의 전야로서 의미가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기본은 인권이다. 인간의 존엄성은 모든 일의 기준이며 기초이기 때문이다. 인권의 수준이 낮은 사회는 삶의 질을 말할 자격이 없는 사회이다. 우리는 더 이상 한 사람의 정치지도자에게 모든 것을 기대해서는 안된다. 국민이 나서지 않으면 국민의 정부는 문명의 정부 짝이 날 수밖에 없다. 시민들이 발언권을 행사해야 하고, 개혁을 요구해야 한다. 양심수를 풀이고, 전근대적인 정치 사찰과 반인간적인 고문을 근절하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태도로 국가와 민족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어야 한다. 인권의 수준은 국민의 수준을 말해준다.

한해 동안 인권수평에 기고해 주신 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평화와인권

PEACE & HUMAN RIGHTS WEEKLY NEWS

제 131 호

1999년 1월 19일

발행처 :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발행인 : 문규현 · 김승환
 편집인 : 문만식

· 주소) [561-162]전주시 덕진구 진북2동 1034-1 숲정이성지사회관 · 전화) 0652-276-1253 · 팩스) 274-7486
 · 통신ID) onespark(전.나.녹두) · E-mail : onespark@kor.inp.or.kr · Homepage : http://kor.inp.or.kr/onespark

새만금 “최대 갯벌 파괴”

한·일 습지보전단체 ‘새만금선언’ 채택

전국습지보전연대회의와 일본습지행동네트워크(JAWAN)는 16일 새만금과 금강하구를 둘러본 뒤 갯벌간척사업 중지와 전체 갯벌을 보전지역으로 요구하는 새만금 선언을 채택했다. 이날 새만금 선언은 한국의 새만금 간척과 일본 후지마에 갯벌과 새만금 지역 갯벌 등 현재 한일 양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갯벌 간척사업에 대한 공동대응 일환으로 채택됐다. 새만금 선언에서 전국습지보전연대회의와 일본습지행동네트워크는 “일본과 한국의 갯벌 및 연안 생태계는 동일한 어종과 물새, 저어 생물을 공유하는 등 많은 문화적·생물학적 공통점이 있다”고 밝혔다. 또 한국과 일본의 갯벌이 호주에서 시베리아로 날아가는

철새들의 중간기착지인만큼 양국 갯벌 보전에 대한 공동대응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선언문은 또 “한일 양국 정부가 양국에서 가장 중요한 갯벌인 일본 후지마에 갯벌과 한국 새만금 갯벌에 대한 간척사업을 중단하고 갯벌 전체를 보전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일본 이사하야만의 수문을 열어 파괴된 갯벌을 복구할 것도 요구했다. 이번 새만금 선언에 참여한 한국의 환경단체는 환경운동연합 11개 지부를 포함해 모두 15개 단체다.

E-mail 주소 다음과 같이 바꿉니다.
 onespark@kor.inp.or.kr

《어달의 인권간행물》

『양심수 없는 나라』

민권공대위 위음/살림터 펴냄/271쪽/7천5백원

▶ 「민중의 기본권 보장과 양심수 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민권공대위, 상임대표 홍근수 등)가 한총련·범민련의 정당성 및 국가보안법 폐지주장 글 등 지난 한해 동안의 활동 결과를 묶어낸 책. (문의: 02-3141-6553)

『조선일보를 해부한다!』

조선일보 허위·왜곡보도 공동대책위원회 위음/249쪽/3천원

▶ 학술단체협의회 등 43개 사회단체로 구성된 공대위가 위은 책. 주요 내용은 <2부> 역대 기사로 본 조선일보가 걸어온 길, <3부> 최장집교수에 대한 조선일보사의 왜곡 음해보도 관련자료 등. (문의: 02-3273-1529)

『98년 국정감사 자료집』, 『한국감옥의 현실』

(문의: 인권운동사랑방 02-741-5363)

전주교도소 재소자 사망사건 ‘미궁’

‘자살용’ 끈 교도소가 불태워

지난해 11월 발생한 전주교도소 재소자 배재문(40세)씨 사망사건이 또 다른 의혹만을 남긴 채 끝내 미궁 속으로 빠지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사건에 대한 의혹 가운데 숨진 배씨가 자살에 이용했다는 찢어진 내의를 전주교도소측이 불태워 없어버렸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은 지난 8일 CBS 전북방송이 담당 변호사를 통해 확인함으로써 처음 밝혀졌다.

교도소측은 배씨가 스스로 목을 매 숨진 것으로 판단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소견서와 유서에 대한 대검과 수사과의 필적감정서를 근거로 사건을 종결했으며 이에 따라 보관하고 있던 내의를 이달 초 태워 없앴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것이 오히려 사건에 대한 의혹을 오히려 가중시키고 있다. 감정을 위해 국과수에 일부 제출된 자살용도의 끈과 교도소 현장에 매달려 있는 끈이 서로 다르다는 주장이 사건 현장을 방문했던 변호사에 의해 제기됐었기 때문이다. 국과수도 끈으로 인한 목부위 흔적이 일반적인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끈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부검감정서에 분명히 명시한 바 있다.

특히 이 문제의 끈은 불태워 없애기 이틀전 교도소장이 변호사를 통해 유족에게 돌려준다고 밝혔지만 태도가 갑자기 돌변한 것이다.

불법사찰도 비공개 자료?

사회단체들, 비공개처분 취소 행정소송 준비

경찰이 민간인 사찰카드를 조직적으로 작성해 보관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공개할 수 없다며 버티자 전북시민운동연합·전북평화인권연대 등 전북 지역 사회단체들이 전북지역경찰청장을 상대로 정보공개처분취소 소송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12월 15일 경찰청의 인물 및 단체 존안카드 작성·보관 사실이 밝혀지자 사회단체들은 불법적인 사찰자료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행정정보공개청구서를 경찰청장 앞으로 접수시킨 바 있다. 이번 소송은 경찰청이 비공개결정 통지서를 이들 사회단체에 보내온 뒤 준비되고 있다.

경찰청은 통지서에서 비공개 사유를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자료는 경찰청에서 비밀로 보관하는 것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비공개대상 정보) 제1항 1호에 해당하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위 정보공개법 제1항 제1호는 비공개 대상정보로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

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를 들고 있다. 경찰은 그러나 사회단체들이 청구한 자료가 도대체 어느 법률 또는 명령에 의하여 비공개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지 그 근거를 전혀 밝히지 않고 있다. 또한 정보공개법 제7조는 비공개대상정보로 그것이 수집기관의 권한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수집된 정보일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수집된 자료는 '단체 및 그 구성원의 인적사항 및 교우관계, 정채선호도'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불법수집 정보에 해당하는 것이다.

경찰증거 그대로 인정 시민단체, "사법부 폭거"

'영남위' 사건 1심 중형 선고

'국민의 정부' 들어서도 국가보안법이 여전히 자의적으로 해석·적용되고 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인권하루소

식 기사제공)

15일 오전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이른바 '영남위원회' 사건 1심 선고재판에서 부산지법 형사2부(재판장 권오봉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구성 및 가입죄(제3조)를 적용해 박경순, 김창현(울산동구청장)씨 등 관련 피고인 전원에게 3년에서 1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의자들이 경·검찰에 의해 제시된 문서, 감청자료 등의 내용이 조작됐으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으나 위의 내용들을 증거로 채택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며 "여러 가지 증거들로 추정하였을 때 피고인들은 북한의 주체사상에 바탕을 두고 공산주의국가 건설을 목표로 반국가단체인 영남위원회를 구성·활동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선고에 대해 재야와 시민단체들은 성명을 발표해 1심 선고 결과를 강력하게 비난하며 국가보안법의 철폐를 거듭 촉구했다.

전국연합 등 9개 사회단체는 "반국가단체임을 증명할만한 확실한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조작 가능한 컴퓨터 디스크와 불법 도감청 내용을 증거로 채택해 내려진 이번 판결은 재판부의 폭거"라고 주장하며 "선고결과를 인정할 수 없고 국내외적인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을 강력하게 벌여나가겠다"고 선언했다(공동성명서 4면 전제). '영남위원회 부산·울산 공대위'도 재판이 끝난 뒤 기자회견을 갖고 "오늘 선고는 헌법에서 보장되고 있는 사상·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기본적 인권을 송두리째 목살하는 치욕적인 결과"라고 비난했다. 또한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인권, 정의와 진실, 민주주의 실현을 바라는 모든 국민의 바램을 무참히 짓밟고 스스로 반인권적인 정부임을 드러낸 재판"이라며 정부와 사법부가 영남위 사건에 대한 국가보안법 적용을 철회하고 관련자 전원을 석방할 것을 주장했다. 한편 김창현 울산동구청장은 가족과 방청객들을 향해 "우리는 석방을 구걸하지 않을 것이며 역사와 민중의 법정에서 무죄를 선고받기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리하고 억울...수용못해" 최후진술

기아특수강 구속노동자 공판, 검사 징역3년 구형

지난해 군산 기아특수강의 정리해고에 대한 반대 투쟁 과정에서 구속됐던 기아특수강 노동자 김상배씨 등 6명에 대한 2차 공판이 15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201호 법정에서 열렸다.

재판과정에서 구속자들은 "투쟁과정에서 빚어진 일로 사람이 다친 데에는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리해고를 당하지 않으려고 일만 했지만 회사측은 적절한 기준도 밝히지 않은 채 해고를 했다"며 정리해고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상배씨는 이날 최후진술을 통해 "지금까지도 정리해고가 억울하다. 95년 이후 생산호황으로 회사는 흑자를 보았지만 임금은 오르지 않았다"고 전제하고 "정리해고조치를 한 후 사유를 설명하는 회사측의 노력을 보지 못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날 기아특수강 구속자에 대해 폭력 및 기물파손, 화염병 처벌법 위반 등을 들어 징역3년을 구형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29일 오전 10시에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노동감시 무엇이 문제인가? - 토론회

"작업장 사생활 포기 말아야"

현대자동차전주공장 RF카드 도입에 대한 노동자들의 반대가 점차 조직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보통신연대 INP 등 전주지역 사회단체들이 '정보사회에서의 노동감시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15일 월봉교전북교구청에서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토론은 김의수(전북대 철학과) 교수의 사회로 두 시간 동안 진행됐으며, 서정원(현대자동차전주지부 트럭부대의원 대표)씨의 현대자동차전주공장 사무자동화 도입과 진행과정, 최근 RF카드 경과와 이후 대책도 발표됐다.

서정원씨는 "사무자동화와 RF카드는 별개 문제"라며 "RF카드를 도입하려는 진짜 의도는 회사가 관리자에 의한 직접통제에서 노동자들을 일상적이고 충분하게 감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조합원들로부터 수거한 1천여 명의 설문지 가운데 85%가 RF카드 도입 전면반대의사를 밝혔고 회사가 RF카드를 지급했을 때 공동대책위가 수거투쟁을 벌일 경우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견이 90% 이상이었다"며 조합원들의 분위기를 전했다.

'노동감시와 노동자의 인권'을 주제로 발제한 문민식(전북평화와인권연대 편집인)씨는 "아직 노동자의 프라이버시권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규약이나 협약은 없다"며 "노동감시로 인한 인권침해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프라이버시 보호 입법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의 시행을 앞두고 있는 RF카드에 대해서는 "지난 96년 국제노동기구가 노동자 권리보호규약을 통해 '카드나 뱃지를 강제로 착용시켜 작업장 안 움직임을 세밀하게 통제·감시하는 행위는 규약 위반'이라며 "노동자는 사생활 보호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자본의 작업장 감시를 통한 현장통제와 노동권'을 발제한 조문익(민주노총전북본부 교육선전국장)씨는 "작업장·현장민주주의 운동이 오늘날 더욱 중요하다"면서 "감시 없는 세상에서 살고싶다 라는 공동의 슬로건을 통해 사회적 실천들이 조직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형수(정보통신연대INP)씨는 "노동자를 중심으로한 아래로부터의 운동이 가장 중요한 대안이 될 것"이라며 "작업감시를 규제하는 데 INP가 노동자와 연대해 운동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 후원금을 보내주시고, 주간 평화와인권은 여러분의 후원금에 가장 크게 의존합니다.
구독문의: 0652) 276-1253 / 예금주 문규현
후원계좌·국민은행 512-21-0065-982
우체국 402297-0062450
전북은행 535-21-0304454

<동암 공대위 기자회견> "인권유린 사실 확인"

사회복지법인 동암사태 진상규명과 정상화를 위한 시민사회공동대책위원회(상임대표: 김승환)는 지난 14일 오전 10시 반 가톨릭센터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기준에 의혹으로 제기됐던 인권유린 사건들이 모두 사실로 드러났다"고 밝히고 보조금 유용, 의문사 등 몇 가지 새로운 의혹을 함께 제기했다.

공대위에 따르면 동암은 <전라북도장애인체육관> 수영장을 통해 돈벌이에 급급했다. <장애인복지사업지침>에 의하면 '장애인체육관 내 수영장을 설치하고 일반인으로부터 이용료를 징수하여 총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를 충당하는 법인은 정부지원에서 제외한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동암측은 매일 입장하는 이용객의 인원에 비례해 날마다 '후원금' 명목의 이용료를 받는 편법을 쓰면서 국고 지원금을 받아냈다. 장애인 시설로써 전액(29억원) 국고를 들여 만든 수영장에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은 전혀 없는데다 수십 또한 일반인에게 맞춰져 장애인에게는 너무 깊으며, 정작 동암재활원생이나 학교학생들은 보호자가 없으면 이용하지 못하게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법인 내 근로재활시설인 동암재활원은 현재 74명분으로 3억 8천만원의 보조금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순수 근로재활생은 30명 뿐이고 재활학교 학생 가운데 생활보호대상자 40여명을 원생으로 편입해 총 74명으로 보고했다. 또한 퇴소자 서류도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원생 중 * 모양은 서류에 '년-월'에 퇴소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그 몇달전 퇴소했다. 이런 식의 허수는 보조금 횡령 의혹이 짙은 부분이다.

공대위는 "법인 내 시설의 현금출납부가 월별누계나 월별 결재과정이 하루 한날 기록한 것처럼 허술하기 짝이 없고 더군다나 법인 전체의 회계장부가 없다"며 놀라움을 나타냈다.

공대위는 원생 증언을 인용해 "최근 3년간 약 세 건의 의문사가 있었다"며 "당시 검안의사 면담 등 정확한 진상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복지법인 동암내 직원의 대부분이 이사장의 친인척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문가는 거의 없다.

공대위는 "이런 사실을 종합해 볼 때 동암은 장애인복지시설로 총체적인 한계와 문제점을 안고있으며 이것은 공정성, 투명성, 전문성이 확보되지 않은 사회복지사업이 가져올 수 있는 당연한 결과"라고 말하고 "시의회 조사특위가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기자회견장에는 동암측 관계자 15명과 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99년 1월 1일자로 새로 부임한 재활원장 백순희(40세)씨는 "공대위에서 지적한 편법과 탈법들이 약의에 이용됐는지 선의에 이용됐는지 헤아려달라"고 말했다.

<공동성명서>

확증도 없이 '반국가단체' 규정한 사법부를 규탄한다
이른바 '영남위원회' 사건 1심 선고에 부처

오늘 부산지방법원 합의2, 3부는 이른바 '영남위원회' 사건 1심 선고에서 검찰의 기소내용을 거의 대부분 인정하여 이른바 영남위원회 사건 관련자들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지난 7월 현 정권 들어 최초로 반국가단체 혐의가 적용된 이 사건이 미칠 파장 때문에 오늘의 선고 결과에 국내외 시민사회단체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다.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가 되기 위해서는 조직의 강령과 조직체계 및 지휘통솔체계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서는 이를 입증할 만한 확실한 증거가 없었기 때문이다. 또 중요한 증거라고 하는 것이 불법 도감청에 의한 녹음테이프와 누구나 조작할 수 있는 얼굴없는 제3의 협조자에 의해 제시된 컴퓨터 디스켓과 같은 것뿐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몇 년 동안 치밀하게 수사하여 왔다는 사건의 명칭에 대해서 김·경마저도 네 번이나 명칭을 바꿔 왔다는 점은 더욱 이 사건의 실체에 대해 인정할 수 없는 이유였다.

1. 재판부는 민주주의를 짓밟는 폭거를 저질렀다.

재판과정에서도 피고인들은 검찰이 제시하는 증거들을 일관되게 부인해왔으며, 이에 대해 이 사건의 결정적인 열쇠를 쥐고 있는 제3의 인물을 법정에서조차 내세우지 못하는 검찰의 수세적인 입장에서 재판이 진행되어 왔던 것이다. 이에 따라 국내외에서는 이번 사건에 대해 재판부의 용기 있는 결단이 있기를 기대해왔던 것이다. 하지만, 오늘 재판부는 유령과도 같은 제3의 협조자가 검찰에 넘겨졌다는 컴퓨터 디스켓과 오랜 시간 개인의 사생활을 무참히 짓밟으면서 불법적으로 수집된 증거들을 모두 유죄의 증거로 삼는 폭거를 저질렀다. 이로써 50여 년 동안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짓눌러온 국가보안법이 용기 있는 재판부의 결단에 의해 철폐를 맞는 계기가 되기를 바랐던 국내외의 인권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세력의 기대는 산산이 무너져 버렸다.

2. 이른바 영남위원회 피고인들이 반국가행위를 한 구체적 증거가 없다.

한 걸음 양보하여 피고인들이 이른바 영남위원회라는 반국가단체를 결성하여 활동한 것이 국가의 안보와 사회질서를 현저히 해쳤다고 입증할 만한 증거는 어디에 있는가. 그들이 지역사회에서 행하였다는 활동이 산재·해고 노동자의 자녀들을 위한 장학사업, 주부학교, 노래교실, 한글교실, 풍물교실, 주부글쓰기반, 좋은 아버지모임, 백혈병어린이돕기모임, 가족등산모임 등과 같이 그 지역의 현안과 깊은 관련이 있는 활동들이었고, 전국적으로 진행된 북한

동포돕기, 정리하고 반대투쟁과 같은 것이었다. 이런 활동들이 반국가단체의 활동이었고, 이런 것이 과연 국가의 안보를 해치는데 기여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가.

지난해 10월 유엔인권이사회가 결정한 바에 따르면, 국가보안법 제7조가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제19조 2항에서 규정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조약을 정면으로 위배했다고 결정하였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는 비단 국가보안법 7조만 아니라 다른 조항들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3. 우리는 시대착오적인 국가보안법의 철폐를 위해 국내외 역량을 집중해 투쟁할 것이다.

민주주의 사회라면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사상의 자유는 특정 사상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받지 않을 권리, 사상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받지 않을 권리, 자신의 사상을 고백할 것을 강제받지 않을 권리 등을 포함한다. 또 사상의 자유와 깊은 관련이 있는 표현의 자유는 의견을 가질 권리, 의사표현의 자유, 알 권리를 포함한다.

국가보안법은 이런 기본원칙을 무시한 반인권법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국제사회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던 것이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유지된다면 다시 한국 정부는 국제사회에서 치욕스럽게도 인권침해국의 오명을 뒤집어쓸 것이다.

우리는 사법부가 비겁하게 검찰 등 공안세력들의 반인권 논리에 굴복하여 이번 판결을 내린 점을 우려스럽게 생각하며, 이제 인권과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모든 세력의 힘으로 국가보안법의 운명을 끝장내야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또 다진다.

아울러 이번 선고결과를 국제사회에 광범위하게 알려내고 한국정부의 인권정책의 허구성을 폭로할 것이며, 국제사회는 한국의 인권단체들과 연대하여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거센 압력을 가하고 말 것이다. 결국 이번 사건 판결은 국가보안법의 운명을 앞당기는 결과를 낳고야 말 것이라는 점을 정부와 사법부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1999년 1월 15일

부산울산지역 용공조직사건 전국대책위원회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사회진보를위한민주연대/인권운동사랑방/참여연대국제인권센터/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국민승리21/영등포산업선교회



평화와인권

PEACE & HUMAN RIGHTS WEEKLY NEWS

제 132 호

1999년 1월 26일

발행처: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발행인: 문규현·김승환

편집인: 문만식

· 주소) [561-162]전주시 덕진구 진북2동 1034-1 숲정이성지사회관 · 전화) 0652-276-12531 · 팩스) 274-7486
· 통신ID) onespark(전.나.녹두) · E-mail : onespark@kor.inp.or.kr · Homepage : http://kor.inp.or.kr/onespark

현대차 전주 RF카드 도입

노사 서면합의 - 공대위 "노조집행부 불신임"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노사가 노동감시 논란을 빚은 알에프(RF: Radio Frequency, 라디오 주파수) 카드(본지 130호, 131호 기사 참조) 도입에 합의하자 일부 현장 조합원들이 노조 집행부 불신임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반발하고 있다.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노사는 21일 회사 본관에서 노조 문용희 지부장과 김재원 공장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RF카드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사무자동화 시스템 운영에 대한 합의문'을 채택했다. 이에 따르면 각 정문 세 곳과 숙소식당, 도장공장, 연구소 출입구 등 모두 여섯 곳에 RF카드 감지가 설치·운영된다. 논란거리였던 적용시간은 출근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합의됐다.

다만 합의문은 "노동통제 및 감시수단으로 악용하지 않는다"는 내용과 "사내에서 출입증 패용을 의무화해서 안되며, 제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RF카드 사용으로 인해 전업을 강요하지 않으며, 인사고과에 사용하지 않는다" 등 그 동안 노조가 카드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내세운 항목들을 단서조항으로 명시했다.

노조 집행부는 운영위원회와 대의원간담회 등을 통해 일부 조합원들이 우려하는 방식으로 RF카드가 활용되는 것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또 이번 합의는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사용하고 출퇴근 처리 등 한정된 조건에서 사용되는 방안을 마련해 노사합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카드 도입을 원천적으로 반대해온 일부 현장조합원들은 "합의문에 명시된 단서조항들은 현재의 노사역학관계를 볼 때 무용지물이 될 소지가 크다"며 25일 <RF카드 반대, 노조집행부 불신임 위한 공대위>를 구성해 반대활동을 벌이고 있다. 공대위는 "이법 합의는 민주적 절차와 과정을 거치지 않고 조합원들의 여론을 묵살한 결과"라고 반발하며 집행부 불신임 투표를 위한 조합원 총회 소집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총회 소집을 위한 조합원 1/3 이상 서명을 받아 26일 노조측에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울산의 현대차 노조 본조는 지난 19일 노사협의회에서 회사의 RF카드 도입 요구에 대해 '조합원 개인 감시 및 노동통제'에 활용될 소지가 크다고 이의 도입을 전면 반대했다.

「새만금」 중단 촉구

사회단체, 매주 반대 캠페인

지난 23일 오후 1시 코아백화점 앞에

서 「새만금 간척사업 전면 재검토를 위한 전북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 주관으로 비가 오는 중에도 불구하고 거리 선전과 유인물 배포 등 새만금 간척사업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캠페인이 시민들과 함께 시작되었다.

대책회의는 이날 도민 홍보를 통해 "방조제 공사를 중단하고 정부 추천 전문가와 환경단체 추천 전문가를 동수로 한 민·관 공동조사단을 즉각 구성하여 새만금 사업이 강행된 과정, 갯벌의 경제성 등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한 포괄적이고 전면적인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책회의는 "갯벌은 단위면적당 밀립의 몇십배 이상의 광합성작용을 할 뿐 아니라 엄청난 정화능력을 지니고 있다"며 "전주시 하수 처리장 10만톤짜리 40개와 같은 수질정화기능을 지니고 있는 새만금 갯벌이 사라진다면 엄청난 환경재앙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책회의는 이어 "새만금 간척사업을 무리하게 진행시킬 경우 어류의 생산량이 크게 줄어들 것이며 적조현상으로 인한 환경재앙이 예견될 뿐 아니라 방조제 공사가 끝나고 나면 간척지를 메우기 위해 서울 남산 20개만금의 흙이 필요한데 이 흙을 구하기 위해서도 엄청난 산림이 훼손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소중한 자연유산인 갯벌을 매립하는 것은 오히려 관광지로 각광받을 자연유산을 훼손하는 것이기에 때문에 손해"라는 것도 대책회의가 새만금공사를 반대하는 이유다.

새만금 간척사업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이번 캠페인은 매주 토요일 오후 1시 전북도민의 참여 속에 전주 코아백화점 앞에서 열릴 예정이다.

인터넷 E-mail 주소 onespark@kor.inp.or.kr
2.1일부터 팩스번호 바뀝니다. 255-9331

불법사찰 비공개 위헌·위법

사회단체들, 행정소송·행정심판 26·27일 청구

경찰이 보관하고 있는 단체 및 인물 존안카드를 공개하라는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이 제기된다.

전북지역의 7개 사회단체들은 경찰이 사찰자료를 보관하고 있으면서도 '국민의 알권리'에 따라 청구한 행정정보 공개에 응하지 않은 것은 위법한 처분이라며 경찰청장과 전주지방법원에 이의 취소결정을 요구하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늦어도 27일 오전까지 제기하기로 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회단체는 전북시민운동연합과 전북인권선교협의회,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등 모두 7개 단체다.

이들 단체들은 소장에서 "경찰이 범죄예방 및 수사목적으로 범죄와 관련된 정보, 기타 치안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그 권한범위 내의 업무활동이라 하겠지만 구체적 범죄혐의없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에 대하여 범죄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개인의 신상에 관한 광범위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하는 행위는 국가권력을 남용하여 국민을 감시하는 행위로서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청구인들은 "청구인 단체 및 그 구성원에 대한 피청구인(전북지역경찰청장)의 동향과약자료를 공개를 요구하여 그 진상을 파악하고 수집된 정보의 폐기를 요구하는 등 국가권력기관의 불법적인 정치사찰을 종식시키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정보공개청구를 했던 것"이라며 지난해 12월 21일 정보공개청구 이유를 밝혔다.

청구인들은 이어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한 것은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위헌, 위법의 처분"이라며 "사상 또는 의견을 자유롭게 표명할 권리는 충분한 정보에의 접근이 보장됨으로써 비로소 가능한 것이고... 세계인권선언 제19조도 모든 사람은 모든 수단에 의하여 국경을 초월하여 정보와 사상을 탐구하거나 입수 또는 전달할

자유를 갖는다고 '알권리'를 명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청구인들은 또한 경찰의 비공개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비공개 사유로 경찰이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자료는 경찰청에서 비밀로 "보관"하는 것...'이라며 보관사실을 시인하고 있다는 점, 경찰이 든 비공개대상정보는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를 들고있는데 그것이 어느 법률이나 명령에 따른 것인지 전혀 밝히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이는 위법한 행정처분이라고 주장했다.

청구인들은 또한 "피청구인의 비공개처분은 피청구인이 그 근거로 들고

있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의 비공개대상정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비공개처분에 이유를 명시하지 않은 하자있는 처분으로서 위법한 것이며, 나아가 청구인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위헌, 위법적인 것"이라며 행정심판과 소송이유를 밝혔다.

▲ 군산 기아특수강 김상배 외 4명 전주지법 군산지원 201호 오전10시

[알림] 인권에 관련된 정보를 알려주십시오.

계획하고 계신 사업, 현장소식, 구속자들의 상황, 재판소식 등 인권에 관련된 정보를 평화와인권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평화와인권은 이를 통해 국내외 지역의 인권현실을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내 민간차원 실업자 지원활동 활발

최근 도내 주요도시 군산, 익산, 전주에서 실직자 지원센터가 줄이어 문을 열고 있다.

지난 26일 익산 북래원에식당에서는 실업극복 익산운동본부(공동대표 리수현 신부, 전병생 목사, 강형신 교무)가 출범해 본격적인 실업자 지원 운동에 나섰다. 현재 익산에 있는 지원센터로는 익산 노동자의 집에서 운영하고 있는 '익산 희망나눔터'가 있다. 지난해 12월 7일 문을 연 희망나눔터에서는 무료급식, 취업상담과 정보제공, 노동상담을 주로 하고 있으며 주1회 비디오 촬영과 교육프로그램도 준비하고 있다. (연락처: 0653-843-3330)

군산에서도 오는 27일 실직자 지원센터가 문을 연다. 실업극복군산운동본부 부설 '군산실직자지원센터'는 실업자 구호사업뿐 아니라 일용직 노동자를 위한 '세백 컵라면 배식'과 임금체불과 산재 상담도 겸할 예정이어서 눈길을 끌고 있다. (연락처: 0654-442-8219 / 466-9219)

이미 실직자지원운동이 활발한 전주에서 새로이 '실업자 취업지원센터'가 곧 문을 열 예정이다. 전주 서화동성당 안에 위치한 '실업자 취업지원센터'는 사제단과 서화동성당 그리고 전북평화와인권연대가 뜻을 모아 준비하고 있으며 실업자 실태조사와 더불어 취업 정보제공과 취업교육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연락처: 0652-232-9191)

이주의 인권뉴스

“준법서약서 내야 3·1절 사면”

—김대통령, 민가협 폐지 요청에

정부는 오는 3·1절 사면에서도 여전히 준법서약제를 조건으로 할 것을 분명히 했다.

이는 지난 23일 민가협과 오찬을 가진 김대통령이 민가협의 준법서약 폐지 요구에 대해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사상의 자유는 절대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의 분위기는 반드시 그렇지 않다"고 말함으로써 확인됐다. 그는 이어 "여러분 중에는 사상전향과 똑같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고 정부의 입장도 생각해달라"고 덧붙였다.

이로써 제2의 사상전향제로 인식되고 있는 준법서약제가 국민의 정부에서 뿌리를 내리게 될 전망이다.

한편, 민가협은 지난 15일 현재 구속 수감중인 양심수는 41년째 수감생활을 계속해온 우용각(71)씨를 비롯한 70세 이상의 교령 수령자 8명과 29년 이상 감옥생활을 한 초장기수 17명 등 모두 302명인 것으로 파악했다.

한미투자협정을 반대한다!

—사회진보연대 성명

한미투자협정은 지난 25일과 26일 이틀간 제4차 실무협상이 워싱턴에서 열렸다. 한미투자협정이 미국의 요구대로 체결될 경우 한국정부는 외국투자자에게 스크린쿼터제 뿐 아니라 기존의 국산입담대 사용의무, 내국인 고용의무, 장애인 고용촉진의무 등 각종 의무를 부과할 수 없게 된다. 협정안은 이밖에도 노동 및 환경기준 부과금지 등 한국사회 전반에 파괴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인 조항들로 가득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도 오히려 한국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협정에 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 이유는 정부가 세계화로 표현되는 시장개방과 '외자유치'만이 한국경제의 살길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사회진보연대(대표 김진균)는 지난 25일 성명을 내고 "한미투자협정은 그 자체로 한국사회 및 민중들에게 엄청난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는 IMF구조조정으로 인해 파괴된 민중들의 삶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 판단된다"면서 "정부는 즉각 협정을 중단하고 그동안 진행되었던 협상내용을 국민 앞에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특명! 도청을 막아라

—제도적 방지책 필수

공안당국의 불법 도·감청 행위가 잇달아 확인되고 있다. 지난 10일 수원에서 한총련 수배자의 여자친구 지취방에 경찰이 설치한 도청장치가 발견된 데 이어, 19일 민족통일 애국청년회 구속자들에 대한 공판과정에서 김사가 도청사실을 영검결에 털어놓기도 했다. 얼마 전 1심 재판이 끝난 영남위원회 사건에서도 경찰의 감청자료가 주요 증거물로 제출된 바 있다.

또한 얼마 전 주요인사와 사회단체에 대한 검찰의 사찰행위가 확인됨에 따라 사찰의 주요수단으로 불법도청이 이용되고 있을 가능성도 높게 점쳐지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도청행위를 근절하기엔 제도적 허점이 큰 것으로 지적된다. 지난해 국회에서 도·감청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하지만 개정안 역시 불법감청을 제한하기엔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개정안은 문제가 되어 온 긴급감청제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으며 불법감청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 등 감청남용을 방지할 장치를 제대로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기사출처: 인권허우소식]

전두환씨도 보안관찰대상자?

—정화려씨, 내란·학살 범죄자 관련 정보공개청구

자신에 대해 검찰이 보안관찰처분 결정을 신청하자 정화려씨(94년, 구국전위 사건으로 구속·지난 8·15때 석방)가 지난 21일 법무부장관 앞으로 전두환·노태우 등 내란학살 범죄자들이 보안관찰 처분을 받지 않는 까닭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해 관심을 끌고 있다.

정씨는 "군형법상 반란죄와 형법상 내란목적살인죄 등으로 무기징역 등을 선고받은 전두환·노태우 등 12·12, 5·18 사건 관련 범죄자들 14명은 모두 보안관찰 처분을 받지 않고 있다"며 "전두환·노태우 등 범죄자들이 준법서약서를 제출하는 등 보안관찰처분 면제결정을 받기 위한 요건을 충족시킨 후 면제처분을 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관련자료의 공개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정씨는 또 "제14대 국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94년 현재 보안관찰대상자가 모두 6189명이고, 이는 해방 후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이 3년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이 거의 망라되어 있는 셈"이라며, 해방 후 현재까지 국보법 위반으로 3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던 보안관찰대상자 중 보안관찰처분 면제결정을 받은 사람의 명단과 사유에 관련된 자료의 공개도 함께 청구했다. [기사출처: 인권허우소식]

구독문의: 0652) 276-1253 / 예금주 문규현
후원계좌·국민은행 512-21-0065-982
우체국 402297-0062450
전북은행 535-21-0304454

인 권
주 명

98년 인권침해자

고흥석 (전북대 교수)

인권운동사랑방에서 발행하고 있는 '인권하루소식'은 박상천 법무부장관, 조선일보, 김대중 대통령, 노재중 양지마을 이사장, 한나라당을 98년 독자들이 뽑은 인권 침해자로 보도한 바 있다.

이 중에서 그 동안 극우세력의 돌격대로 자처하여 왔던 조선일보가 최장집 교수 논문 중 마녀사냥을 하는데 필요한 부분만을 도려내 사상공세를 하여 2위를 하고,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에게 자선을 베풀어야 할 사회복지시설이 오히려 그들을 이용하여 치부를 하거나 인권을 유린한 것이 종종 있는 일인지라 '육지 위의 노예선' 양지마을 노재중 이사장이 4위를 기록한 것은 충분히 수급이 간다. 그러나 한나라당 (총 친 막대기꼴이라 언급할 가치조차 없다)을 누르고 박상천 법무부장관과 김대중 대통령이 1, 3위를 한 것은 상식 밖의 일이다. 왜냐하면 법이야말로 인권을 위해서 존재하며 이를 집행하는 국가기관이 바로 법무부이며, 그런가하면 김대중 대통령으로 말할 것 같으면 국제적으로도 공인된 '인권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금만 주의 깊게 살펴보면 이 순위가 결코 허무맹랑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국민정부에서 인권신장 기대는 무리?

박 장관이 1위를 한 것은, 준법서약서라는 신(新)사상전향을 도입하여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국가인권위원회회를 설립하는데 있어서 법무부가 주도권을 장악하려 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세간에 '정치는 국회의원들이, 법은 법무부가, 교육은 교육부가, 경제는 재경부가, 농업은 농림부가 망해 먹는다는 말이 있다. 안다는 놈들이, 전문가라는 놈들이 오래 그 잘난 전문지식으로 못된 짓을 해대며 오히려 전문분야를 망치는 짓을 두고 하는 말일 것이다. 참으로 '정의와 양심'을

세기말 99년에는 피비린내 나는 독재정권의 남은 잔재인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는 것을 간절히 소망해 본다.

대변 (대부분의 국민은 믿지 않지만) 해야 할 법무부 장관이 명예롭게(?) 1위를 기록한 것으로 보아, 이런 이야기의 타당성을 새롭게 확인시켜 주고 있는 듯하다.

국제적으로 인정된 '인권 대통령'인 김대중 대통령에게 그 동안 인권침해를 자행해온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양심수 석방하며, 안기부·기무사의 해체 내지는 국민을 위한 기구로의 재편하는 것을 기대한 것은 큰 무리는 아니었다. 더구나 김 대통령은 국가보안법에 의해 사형선고를 받고 감옥살이를 하였고, 취임 이후 "경제발전과 동시에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겠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개혁 과제 중 다른 것은 몰라도 인권 신장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의 진전은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국민들은 전혀 용서와 화해의 마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김영삼 정부가 감옥에 가두었던 전두환·노태우 (질펀하게 차려놓고 새해에 새배객을 맞이하고 포항에서는 대구공교 동문들로부터 생일 축하를 받는 전두환, 그러나 아직까지도 추운 겨울 감옥살이 하고 있는 양심수를 떠올리면 분노로 치가 떨린다)를 사면할 때, 아마 양심수 전원 석방을 위해 '준비한' 것으로 돌이켜 생각하면 어리석게 지레 짐작하였던 적도 있었다.

'인권대통령', 양심수 양산

더욱 우리를 실망하게 하는 것은 자칭 '국민의 정부'에 들어와서 국가보안법 구속자가 소위 '문민정부'의 3배로 늘어났다는 점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외국의 인권단체에서 주는 인권상을 수상하는 등 '인권 대통령'이라는 이미지를 끊임없이 부각시켜 왔지만 이전 어떤 정부보다도 더 많은 수의 양심수를 양산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총련과 범민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초장기수 17명이 여전히 구금되어 있고, 경제파탄을 자초한 재벌·비리정치인·무능공무원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노동자들에게는 정리해고·고통전담을 강요하여 실업자가 170만 명에 달하여 가정이 해체되는, 절망의 끝과 희망의 시작이 보이지 않는 현실을 볼 때 김대중 대통령이 3위로 밀린 것은 오히려 억울한 느낌이다. 유신잔당, 5·6공군사정권의 권력자들과 손을 잡았을 때 이미 기대를 버렸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권하루소식' 독자들은 아직까지도 '인권' 대통령에게 행여나 하는 기대가 남아있었던(?) 모양이다.

세기말 99년에는, 피비린내 나는 독재정권의 남은 잔재인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는 것을 간절히 소망해 본다. 인권이 신장되기 위해서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어야 하고, 이 법이 폐지되면 공안기구들은 따라서 해체 내지는 재편될 것이고, 양심수들은 전원 사면 복권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법의 폐지는 소망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98년 인권침해 3위를 기록한 '준비된 인권 대통령'에게 기댈 수도 없다. 중단 없이 싸울 수밖에 없다.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은 인권 신장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남북으로 갈라져 있는 우리에 현실에서는 민족의 화해와 단결, 민주와 통일을 위한 필수조건인 것이다. 투쟁이 없이는 어느 한 순간도 역사는 진전되지 않기 때문이다.



평화와 인권

PEACE & HUMAN RIGHTS WEEKLY NEWS

제 133 호

1999년 2월 2일

발행처 :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발행인 : 문규현 · 김승환
편집인 : 문만식

· 주소) [561-162]전주시 덕진구 진북2동 1034-1 숲정이성지사회관 · 전화) 0652-276-1253, 255-9339 · 팩스) 255-9331
· 통신ID) onespark(천.나.녹두넷.진보넷) · E-mail : onespark@kor.inp.or.kr · Homepage : http://kor.inp.or.kr/onespark

손성모씨 등 사면 안될듯

3.1절 석방 대상 '비전향' 정부주장 사실과 달라

3.1절 특사 때 준법서약서를 쓰지 않아도 비전향장기수를 사면한다는 법무부 방침이 알려졌으나 전주교도소에 장기수로 수감돼 있는 손성모, 신광수 씨는 자칫 이번 사면 대상에서 제외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 비전향장기수이지만 북에 가족을 두지 않은 장기수인 강용주씨 등도 정부의 이번 사면기준에 따르면 석방될 수 없게 된다.

법무부는 북한에 가족이 있는 비전향장기수의 경우 준법서약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오는 3.1절 기념 특사 때 석방할 방침이라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준법서약서 제출을 거부하며 41년째 수감생활을 해온 우용각(71)씨 등 10여명이 이번 사면의 혜택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손성모, 신광수씨의 경우 북에 가족을 두고 있는 비전향장기수이면서도 20년 이상 수감생활을 하고 있는 이른바 '초장기수'들보다 구금연수가 적다는 이유(각각 18년, 14년)로 사면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또 이른바 '구미유학생 간첩단' 사건으로 구속돼 14년째 갇혀 있고 한국의 최연소 장기수이기도 한 강용주씨(37세)는 한국의 대표적인 양심수로 알려져 있지만 남한이 고향이다.

정부가 이번 석방 대상에 올려놓은

장기수는 모두 17명이라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민기협은 손성모, 신광수, 강용주, 조상록씨 등 4명을 장기수로 분류하고 있다. 인권운동사랑방 박대군 사무국장은 "이번 특사가 정부 말처럼 대사면이 되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하고 준법서약서를 받지 않는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서도 "모든 양심수로부터 준법서약서를 받아야 하는데 북에 가족을 둔 장기수에게 베푸는 은전쯤으로 정부가 이번 사면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도소 답변 못믿는다"

평화와인권, 은폐의혹 다시 제기

전주교도소에 수감돼 있다 지난해 11월 20일경 사망한 배재문씨(당시 39세) 사건과 관련된 의혹을 묻는 공개질의서에 대해 전주교도소측이 사회단체에 공식 답변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7일 공개질의서를 보낸 전북평화와인권연대(평화와인권, 공동대표 문규현, 김승환)는 "전주교도소측의 답변 내용을 신뢰할 수 없다"며 "전주교도소가 배씨 의사사 의혹을 더욱 증폭

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주교도소측이 지난해 27일 평화와인권측에 보내온 '공개질의서에 대한 답변내용'은 △유서관련 의혹 △사망시점에 관한 의혹 △진정제 주사 의혹 △목매 자살한 끈과 관련된 내용 등 평화와인권이 공개질의한 네 가지 항목에 차례로 답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답변 내용은 전주지검이 이 사건에 대한 내사를 종결한 지난 1월 초로부터 20일 이상 지난 뒤 나온데다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데 결정적 증거물로 주목받은 '자살용 끈'을 전주교도소측이 최근 불태워 없앴으로써 전주교도소가 이 사건에 관한 중요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그와 같은 방법을 선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까지 낳고 있다. 전주교도소장은 끈을 불태우기 전날 송진 배씨의 담당 변호인으로부터 "끈의 소유권이 유족에게 있으니 내일 찾아가겠다"는 말을 듣고 "그렇게 하라"고 대답했었다.

평화와인권은 2일 성명서를 내 "전주교도소 재소자 의사사 사건의 의혹은 아직 풀리지 않았다"며 "진실 규명을 위해 필요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기아특수강 석방

징역2년6월에 집행유예3년

정리해고에 항의하다 구속된 기아특수강 노동자 5명에 대한 선고공판이 지난해 29일 열렸다. 이날 노동자들은 모두 징역2년6월에 집행유예3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함께 구속돼 있던 노동자 가운데 조남열씨(27세)는 부친상을 당해 27일 형집행정지로 석방됐다.

◆ <평화와인권> 제호 바꿨습니다. (신영복선생 글씨)
◆ 2.1일부터 팩스번호 바꿨습니다. → 255 9331
◆ 인터넷 E-mail주소 onespark@kor.inp.or.kr

유엔 결정안 즉각 수용 촉구

민변, 인권운동사랑방 등 항의성명

법무부가 박태훈씨의 국가보안법 위 반사건과 관련하여 유엔인권이사회가 한국정부에 보내온 결정을 사실상 거 부한 데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변, 회장 최영도)과 인권운동 사랑방 (대표 서준식) 등이 규탄성명을 내고 유엔인권이사회 결정을 즉각 수

용할 것을 촉구했다. 민변은 지난달 29일 성명을 내 "정부 는 현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다 되 어가는 현재에도 국가보안법 개폐에 대한 어떠한 논의도 진행하지 않은 채, 오히려 유엔인권이사회의 결정을 정면으로 거부함으로써 다시 한번 국

제사회의 비난을 자초하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인권운동사랑방도 28일 성명을 내고 "국가보안법 7조가 과거와 똑같이 남 용되어 사상과 양심의 자유, 의사표현 의 자유와 같은 소중한 인권을 침해하 고 있다"고 지적하고 "법무부는 즉각 적으로 거부방침을 철회하고 국가보안 법 개폐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우리 정부는 지난 90년 '시민적, 정 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B규약)에 가입했다.

<요약> 국보법 관련, 유엔인권이사회 결정문

"국제규약 위반...배상 및 구제조치 시행"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 제5조 4항에 따른 인권이사회 견해

-제64차 회기- 통보번호 628/1995

통보자 : 박태훈 (대리인 조용환)

피해자 : 통보자

당사국 : 대한민국

제소일 : 1994년 8월 11일

허용 결정일 : 1996년 7월 5일

견해 채택일 : 1998년 10월 20일

인권이사회는 1998년 10월 20일에 열린 회의에서 박태훈 씨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 에 따라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통보번호 628/1995호에 대한 심의를 종결하고 통보의 제출자, 그의 대리인 및 당사국 이 이사회에 제공한 모든 문서 자료들을 심의하여 다음과 같은 견해를 채택했다. (중략)

-이사회가 심의한 쟁점과 진행절차

10. 1 (쟁략) 10. 2 (쟁략)

10. 3 이사회는 규약 제19조가 의견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다음과 같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에 의한 제한 을 허용하고 있음을 확인한다. : (가) 타인의 권리와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경우, (나) 국가안보 또는 공공질서, 공 공의 건강 또는 도덕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는 모든 민주적인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며, 이 권리의 실현을 제한하는 어떠한 조치도 엄격한 기준에 의해 그 정당성을 심사받아야 한다. 당사국은 그 와 같은 제한조치가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한 것으로 정당하며, 국가보안법 제7조에 따라 법률로 정하고 있다고 주장 하고 있으나, 이사회는 여전히 통보자에게 가해진 조치들이 규약에서 말하는 목적에 필요한 것이었는지를 결정해야 한다. 이사회는 당사국이 나라의 일반적인 상황과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제기하는 위협을 언급하면서 국가안보문제 를 제기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한다. 이사회는 통보자에 의한 표현의 자유 행사로 인하여 일어났다는 위협의 정확한 성격을 당사국이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데 실패했으며, 당사국이 내세운 어떠한 주장도 제19조 (3)항에서 말하는 정 당한 목적들 가운데 하나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었음을 증명하지 못했음을 확인한다. 따라서 표현행위와 관련 된 통보자에 대한 유죄판결은 규약 제19조에 따라 통보자의 권리에 대한 침해로 간주해야 한다.

10. 4 이런 맥락에서 이사회는 "통보자는 재판부가 의도적으로 규약의 적용을 배제했기 때문에 유죄판결을 받은 것 이 아니라, 한국의 안보상황을 고려할 때 규약에서 인정한 개인의 특정한 권리보다 국가보안법 조항이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당사국의 주장을 검토한다. 이사회는 당사국이 규약에 따른 의무보다 국내 법의 적용을 우선하는 것은 규약과 합치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이런 맥락에서 이사회는 당사국이 규약 제4조 (3)항 에 따라 비상사태가 존재하며 그에 따라 규약의 일부 권리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선언한 일이 없음을 지적한다.

10. 5 (쟁략)

11. 인권이사회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 제5조 제4항에 따라 이사회에 제출된 사실관 계가 규약 제 19조에 위반한 사실을 인정한다.

12. 규약 제2조 3 (b)항에 따라 당사국은 박태훈 씨에게 표현의 자유를 행사한 이유로 유죄판결을 선고한 데 대한 적절한 배상과 효과적인 구제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후략)

잘못된 진단, 빗나간 처방

만주노총 전북본부 청문회 규탄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제파탄 청문회를 규탄하기 위해 노 동자들이 길거리로 나섰다. 만주노총전북본부 산하 노동자 100여명은 지난 토요일 오후 2시 전주 코아백화점 앞에서 '잘못된 진단 빗나간 처방! 재벌총수 없는 청문회를 규탄 한다!'는 주제의 집회를 가졌다.

이들은 "경제파탄 원인을 진단하는 청문회 증인명단에 핵심인물인 재벌총수가 빠졌다"면서 "빚더미 위에 앉아서 도 물어발확장, 과잉투자에 급기야 나라경제를 무너뜨린 주범인 재벌을 소환하지 않는 청문회는 쏘일 뿐"이라고 주장 했다.

또 "이러한 범죄인에게 처벌은 커녕 '빅딜'에, 합병에, 민영화에 특혜주기 바쁜 현재의 '구조조정'으로 살판난 건 재벌과 국제투기자본 뿐"이라며 "경제파괴범, 재벌총수를 청문회에 세우고 IMF식 모범생이기를 자처해 나라경제를 진 정에 빠뜨린 유종근·진병·강봉균·이헌재·이규성 등 현 정부의 핵심경제관료도 소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자들은 또한 "IMF조차 잘못된 처방이었다"고 시인하 고 있는 현재의 IMF식 구조조정이 계속된다면 김대통령 자신이 청문회에 서게 될 날이 올 것"이라며 "잘못된 구조 조정 정책을 당장 중단하고 제대로 처방하라"고 촉구했다.

"노동감시 반대!"

정보통신연대INP 캠페인 돌입

최근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 RF카드를 도입한 것을 계기로 노동감시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정 보통신연대 INP (대표 박형수, INP)가 토요일 오후 2시 코 아백화점 앞에서 '노동감시 사회 반대' 캠페인을 벌여 눈길 을 끌었다.

INP는 "정보사회에서의 관리함과 급속도로 변화하는 기술 발전의 이면에 최첨단 감시 및 통제기술을 통해 일하는 사 람들이 권리를 짓밟히고 있다"면서 그 예로 "현대자동차 전 주공장이 최근 R/F카드 같은 전자사원증을 도입하고, LG 등 대형 증권회사에서는 직원의 전화내용을 일일이 녹음하 고 있으며, 전주시 5개 시내버스는 버스마다 최소형 감시카메라를 장치해 노동감시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 다.

INP는 "이러한 감시체제는 노동자를 해고하는 데 악용될 소지가 매우 높고 특히 그 대상이 노조간부와 현장활동가 에게 집중될 것"이라며 "노동감시는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와 인간의 존엄성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INP는 "이러한 폐단을 막기 위해서는 공공정보에 대한 접근

권을 강화하고 사적 정보의 철저한 보호를 위한 프라이 버시보호법 같은 구체적인 관련법이 제정되어야 한다"며 이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촉구했다.

한편 INP의 박형수 대표는 "아직 시민들에게 생소한 노동 감시와 감시사회 도래에 대해 지속적인 캠페인을 통해 여론화 시키겠다"고 밝혔다.

"에바다 재단 약속 지켜라"

공대위 등 100여명 간담대회

793일째를 맞고 있는 평택의 에바다복지회 사태가 아직까 지 전혀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에바다 정상화 공대위' 등이 28일 평택시에서 문제해결을 촉구하 는 간담대회를 벌였다.

에바다학교 학생·교사·학부모 및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공대위의 대학생연대비상대책위 회원 등 1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28일 오전 11시부터 평택시청에서 평택역까지 걷 기대회를 갖고, 재단 임원진의 퇴진과 국정감사 당시의 약속이행을 촉구했다.

이날 공대위 등은 "지난 96년 11월 에바다복지회의 비리 폭로로 시작된 농아학생들의 시위가 2년이 지나도록 끝나 지 않고 있다"며 "아직까지도 비리재단이 영향력을 행사하 고 있는데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성재 의원의 재단 이사장 취임을 약속하고 김선기 평택시장이 사태를 해결하겠다고 했는데 어느 하나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조속한 약속이행을 요구했다.

이에 앞서 공대위는 지난주 김선기 시장과 이성재 의원을 면담하고 사태해결을 촉구한 바 있지만 아직 명확한 답변 을 듣지 못했다고 전했다.

[알림] 인권에 관련된 정보를 알려주십시오.

계획하고 계신 사업, 현장소식, 구속자들의 상황, 재판소식 등 인권에 관련된 정보를 평화와인권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평화와인권은 이를 통해 국내외 지역의 인권현실을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평화와인권>은 독자여러분의 후원금으로 운영됩니다. 인권운동을 더 잘 하도록 도와주십시오.

구독문의: 0652) 276-1253 / 예금주 문규현
후원계좌·국민은행 512-21-0065-982
우체국 402297-0062450
전북은행 535-21-0304454

인 권	'정상'과 '장애' '자선가'와 '수혜자', 그 사회적 이분법을 넘어
주 평	이재권 (전주시의회 의원)

내가 어렸을 때 살던 집동네를 떠올리면 그 골목 안 사람들의 정경과 함께 사람들이 '안세완'이라고 불렀던 한 정신이상의 떠돌이 걸인이 참으로 파스한 기억으로 되살아온다. 안세완은 누군가에게 받은 옷들을 모조리 한 몸에 걸치고 그 위에 두터운 외투까지 해서 사철을 그 모양으로 돌아다녔다. 우리 엄마는 아침에 식구들 뒷치닥거리가 다 끝나면 꼭 안세완 밥상을'마루 한 편에 놔놓으셨고 안세완은 밥알하나 남기지 않고 밥상 위의 것들을 깨끗이 먹어치웠다. 종이에 있는 간장까지도. 안세완은 그렇게 동네에서 먹고 살았다. 사람들이 구두도 주고 명절이 되면 떡도 싸주고 돈도 주었다. 우리 동네는 고등학교 부근이어서 학생들도 많았고 우리 또래의 아이들도 많았는데 내 기억에 안세완이 동네에서 불변이나 놀림을 당한 적은 없는 것 같다. 동네 오편 하나가 '검은 모자, 눈에 매려...' (안세완의 물골을 상상해보라) 하는 노래를 안세완한테 지어준 것도 안세완이 우리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한참을 더 커서, 아니 내가 아주 어른이 되고 아이까지 낳은 직후, 그 때 나는 한국에 있지 않았다. 나는 한국 비디오 한쪽 끝에 어찌다가 함께 녹화된 대담 프로를 한도막 보게 되었다. 휠체어를 타야 할 정도의 지체 장애로 북한산을 등반한 10대의 장애인과 그 어머니가 초대되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었다. 그 때, 그 엄마의 말. "요즘 아이들 얼마나 말 잘하고 야무집니까. 제가 집에서 아들을 데리고 나오면 동네에서 지나가는 아이들이 대뜸 손가락질 하며 말해요. 엄마, 왜 저래?" 그 엄마의 소리는 목에서 나오는 음성이 아닌 한땀한 기슴 속 떨림이었다. 그 엄마의 눈빛과 창백한 얼굴빛이 지금도 내 속에 남아있다. 솔직히 장애인에 대한 나의 경험이라고 한다면 동양재활원 일 이전의 것으로 이것을 큰 것이라 말할 수 있겠다.

나는 ... 장애인 인권 문제를 직접 겪으면서 소위 '정상'과 '장애', '자선가'와 '수혜자' 따위의 차이로써 인간에 대한 억압적 행태가 사회규범이 된 것에 대한 자각을 얻게 되었다.

재활원에 살면서 동양 재활학교에 다니던 한 장애인을 만난 것은 지방 신문에 재활원에서 일어난 성폭행 사건이 보도된 직후였다. 동양 재활원은 전주시가 국도비 보조를 신청, 거기에 시비까지 보전하여 지원해주고 있는 지체장애인 근로수용시설이었다. 나는 성폭행 피해자인 허양과 그 가족들도 만났고 재활원을 포함한 사회복지법인 동양의 모든 시설들이 장원(莊園)처럼, 장애인의 천국처럼 둘러서 있는 현장을 직접 찾아다녔다. 그 과정에서 동양재활원의 관리와 운영에 대해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었으며 분노가 치미는 것이 한 두 번이 아니었다. 나는 나름대로 철저히 면담과 조사를 하면서 무엇보다 균형각각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멀쩡한 어른들도 때로는 자기중심으로 과장하고 지어낸다. 그러나 아무리 재활원 생활자들의 말을 냉정하게 듣는다해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그들이 끊임없이 그 안에서 불편과 억압을 받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누가 봐도 이들이 주어진 여건 안에서 배려받고 재활의 과정을 밟고 있다고는 추호도 생각지 않으리라. 한 예로 시설 입소 전에는 잘 쓰고 있던 원생이 시설에 들어간 지 2,3년만에 거의 위를 졸도 쓸 줄도 모르게 되었다는 가족들의 말이다. 성폭행이나 구타 등 인권의 측면 못지않게 시설의 환경이나 운영이 시설 생활

자들의 삶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나는 시의회의 명예와 나의 활동의 책임을 걸고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동안의 문제점들을 제기했고 언론에서 보도를 하게 되었다. 그 이후 재활원 이사장의 시설 폐원 신청과 함께 동양법인의 직원들이 60여명의 장애인과 가족들을 의회로 거리로 그리고 내가 사는 집으로 몰고 다녔는데 시위 장면만큼은 몇날며칠 방송에 보도된 그대로다. 그 일로 더 크게 깨달은 것이 있다면 크게 세 가지이다. 장애인의 처지를 너무 잘알아 그들을 이용하는 것 역시 장애인이나 시설의 관리 종사자들이라는 것. 우리나라같이 장애인들이 비정상인으로 취급되어 오갈 데 없는 사회에서는 가족들조차도 장애인을 기피한다는 것. 그리고 장애인들이 무슨 불만을 말하면 그들 주변에 있던 비장애인들은 '모멸감'이나 '배신감'을 느낀다는 것 (자기가 보호하는 장애인들을 생각도 분노도 느끼도 없는 존재로 알았다가 그들의 '반응'에 당혹해하고 부정한다)...

나는 인권이나 복지분야의 전문가도 아니고 활동해 본 경험도 없다. 그래서 그동안 이 지면이 인권문제의 실제 혹은 치열한 투쟁의 경험들과 전문 학자들의 글로 채워졌던 것을 생각하면 크게 부담스럽고 조심스럽기 그지없다. 그러나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문제, 장애인의 인권의 문제를 직접 겪으면서 소위 '정상'과 '장애', '자선가'와 '수혜자'...그런 차이로써 인간에 대한 우월적 인식과 억압적 행태가 사회규범이 된 것에 대한 자각을 얻게 되었고, 이러한 것들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덕분에 갖고도 싶어 원고를 맡게 되었다. 장애인문제는 결코 장애인 스스로 풀 수가 없더라는 것이 내가 이 일 속에서 얻은 결론이다. 사회구성원 모두가 공동의 책임으로 장애인의 권익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서는 장애인 문제는 결코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평화와인권
PEACE & HUMAN RIGHTS WEEKLY NEWS

제 134 호
1999년 2월 9일
발행처 :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발행인 : 문규현 · 김승환
편집인 : 문만식

· 주소) [561-162]전주시 덕진구 진북2동 1034-1 숲정이성지사회관 · 전화) 0652-276-1253, 255-9339 · 팩스) 255-9331
· 통신ID) onespark(천.나.녹두넷.진보넷) · E-mail : onespark@kor.inp.or.kr · Homepage : http://kor.inp.or.kr/onespark

재소자 우편물 '꿀꺽'
군산교도소, '인권지침' 담긴 책자 출소날 내보

군산교도소가 재소자에게 가야 할 우편물을 건네주지 않고 보관하다 이들이 석방되는 날 이를 돌려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정리하고 반대 투쟁과 관련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됐다 지난달 29일 구속된 지 100여일 만에 석방된 군산기아특수강 해고노동자들에 따르면, 군산교도소측은 노동법과 국가보안법을 위반해 구속된 노동자들을 후원하는 단체인 <구속노동자후원회>(구노회·대표 정동석)가 지난해 10월말 경 구속 노동자들에게 우편으로 들여보낸 책 <알기 쉬운 인권지침>(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인권위원회 편)과 여기에 끼워 부친 여섯 통의 편지를 건네주지 않고 있다가 석방되는 날 돌려줬다. 구노회가 출소 노동자들을 통해 이와 같은 소식을 뒤늦게 전해 듣고 군산교도소에 항의하자 교도소측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처음에는 발뺌하다가 구노회측이 이를 문제삼았다며 강력히 항의하자 "아마 법정에 나간 사이 책이 들어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것 같다" "담당 직원이 없는 사이 벌어진 일 같다"는 등의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았다. 군산교도소는 구노회측의 강력한 항의를 받고 나서야 석방된 노동자에게 전화를 걸어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구두 약속을 남겼다. 한편 구노회 장한빛씨는 "구속노동자

들에게 이와 같은 사례가 종종 발생했다"며 "다른 교도소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산교도소에서 우편물을 재소자에게 건네주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전주교도소 등 전국 각 교도소에서 우편물 '실종' 문제는 재소·출소 양심수들과 그 동료 및 가족들로부터 계속해서 지탄을 받아왔다.

손성모씨 석방 난망

국민회의, "29년 이상 17명" 사회단체들, 석방 촉구 기자회견
전주교도소에 수감중인 비전향장기수 손성모(71세·19년 구금), 신광수(71세·15년 구금)씨 석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전북인권선교협의회 등 전북지역 종교·사회단체들은 8일 오전 전주가톨릭센터에서 <손성모, 신광수 선생을 비롯한 양심수 전원석방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양심수 석방의 걸림돌인 준법서약을 즉각 폐지

하라"고 주장했다. 사회단체들은 또한 "비전향장기수인 최호경(42세·7년 구금)씨 등 모든 양심수를 조건없이 석방, 사면, 복권 조치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밖에도 △조소사중이거나 재판중인 모든 양심수에 대한 공소취하와 석방 △정치적 수배자들에 대한 수배조치 해제도 함께 요구했다. 한편 여당인 국민회의는 9일 <사면복권 대상자 건의안>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41년제 구금돼 있는 우용각씨(71세) 등 29년 이상 복역한 비전향장기수 17명이 석방대상에 올라있다. 이밖에도 △3, 5, 6공화국 당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7명(전체 구속자는 45명, 98년 7월 현재 민가협 통계) △김영삼 정권 시절 구속자 : 국보법 위반 구속자 56명, 집시법 위반 구속자 18명 등 74명(전체 161명)도 국민회의가 건의한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르면, 북에 가족을 둔 비전향장기수 19명 가운데 손성모, 신광수씨만 이번 사면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최종 대상은 이달 25일께나 나오게 되지만, 두 비전향장기수가 석방되지 않을지 모른다는 우려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역시 전주교도소에 수감중인 비전향장기수 최호경씨도 이번 사면대상에 오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최씨도 6공 정권의 피해자이지만 이제까지 양심을 이유로 준법서약서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최씨에게 이번에도 준법서약서가 석방의 전제로 요구될 것이기 때문이다.

다음주 설 연휴 관계로 <평화와인권> 쉽니다.
특차여러분! 뜻깊은 연휴가 되시길 바랍니다.

적자타령에 국민건강권 침해

전북대병원 통해 본 국립대병원 구조조정

최근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구조조정이 속속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발표한 국립대병원 구조조정안의 핵심내용이 인원감축으로 귀결됨으로써 환자들에 대한 의료서비스 질이 저하되는 등 국민의 건강권에 심각한 침해가 우려되는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지난 1월 <국립대병원 경영혁신안>을 발표하고 각 국립대병원측에 이에 맞는 경영방안을 2월말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그리고 이는 곧바로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교육부안은 경영합리화 체제 구축, 교육연구기능의 효과적 추진,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투명한 경영체제 구축 등 그럴싸한 취지와는 달리 몇 가지 긍정적 요인을 제외하면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혁신안의 핵심은 △의료수입에 인건비 지출 상한선을 맞추는 '인건비 상한제' 도입 △간호사·의료기사·일반직 노동자 수를 줄이고 일부 직원은 용역으로 대체하는 '직원 총정원제' 도입 등 비용절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교육부와 병원측은 국립대병원이 자자운영되고 있다는 이유로 인원감축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적자의 사정은 인건비 때문이 아니라 엄청난 부채를 떠안을 수밖에 없는 시설투자 때문이다. 전북대병원의 경우 최근 응급센터를 새로 지으면서 97년 12월로 220~230억 정도로 부채가 누적됐다.

그러나 실제로 IMF 여파로 시설투자가 거의 없었던 98년 상반기 전국 국립대병원이 올린 경영실적은 6개 병원 중 5개 병원이 144억 6천 만원의 흑자다. 전북대병원의 경우 98년 한해 동안 20억의 적지않은 흑자를 썼다. 결국 무리한 시설투자로 인한 적자 피해는 환자들에게 돌아간다. 투자비용을 거둬들이기 위해 의료인원을 감축하게 되고 이것은 병원노동자에게 과로와

만성피로를 주어 결국 의료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의료사고의 위험이 커지는 악순환을 낳을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현재 '국립대병원 환자 수 대비 인력현황'을 97년 통계로 보면 직원 1인당 환자 수는 436명으로 사립대병원의 420명보다 16명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대병원의 경우 직원 1인당 조정환자 수는 50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립대병원 노동자들의 노동강도가 사립대병원 노동자들보다 세며 근로조건이 더 열악하다는 사실을 뜻한다.

또한 의료수익 증대를 위한 수익성 위주의 병원운영을 부추기는 것은 결국 과잉진료와 부당진료를 증가시킬 위험을 키운다.

따라서 이번 교육부안은 단지 인력감축과 비용절감 등 노동자의 고통전담

을 통한 의료 수익 증가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고 그 피해 또한 고스란히 환자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의 혁신안이 이런 식으로 나온 것은 공공의료에 대한 정부의 인식이 부족한 탓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북대병원 노조위원장 박영신(32)씨는 "이번 교육부안은 공공의료기관인 국립대병원을 민간병원과 똑같이 '수익성'에만 평가의 근거를 두고 있다"면서 "국립대병원은 3차 공공병원으로서 국가보건사업을 행하는 공공병원의 역할을 해야 하는 곳으로 민간병원과 무한경쟁으로 치닫는 현재의 의료현실에서 벗어나는 게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정차 구조조정해야 할 부분은 이사회와 비민주적 운영, 병원장 낙하산 인사 등 구조적 개혁"이라며 "민간이사회제 등 이사회제도 개선, 병원장 추천위원회 구성, 각종 위원회의 노사공동 구성, 노조의 경영참가 등이 개혁안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권간행물]

「국가인권위원회,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

- 인권법 제정 및 국가인권기구 설치 민간단체공동추진위원회 펴냄 -

김대중 정부가 외교통상부장관까지 유엔인권위원회에 보내 자랑하고 싶어하는 <국가인권위원회>가 할 일은 도대체 무엇인가? 지난해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 50주년을 기념하는 날 <인권법>을 공포하고 설립안을 확정하겠다고 했는데 해지나 2월 중순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다. 무슨일이 있었는가?

민간단체공추위가 의문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소책자를 내놨다. 김대중 대통령이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는 '유엔 제시 기준', 국제앰네스티가 대통령에게 보낸 두 통의 공개서한 전문(全文), 국가인권위원회 설치 논란의 주요 경과 등이 부록으로 실렸다. 본문은 △국가인권기구란 무엇인가? △법무부 인권법안 무엇이 문제인가? △민간단체의 입장 등으로 구성됐다.

지난해 12월 10일을 기점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설치 문제는 불안한 휴먼기에 들어간 상태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를 자기 조직의 산하에 두고 싶어하는 법무부의 정치권 로비는 물밑에서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민간단체공추위는 적지 않은 수고를 거쳐 국가인권위원회 논쟁을 집약적으로 정리한 55쪽 짜리의 이 소책자를 통해 '전국민적 논의와 참여를 통해서만 올바른 국가인권위원회의 설치가 가능하다'는 원칙을 반복해 보여주고 있다.

· 구입문의 : 공추위(02-741-5363), 전북평화와인권연대(0652-276-1253)

“공공근로 임금 또 깎더니”

전북지역 노동단체 성명서 내

공공근로자 하루임금이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 98년 10월 이후 두 차례에 걸쳐 19,000원까지 깎인 데 대해 노동단체들이 규탄하고 나섰다.

고용실업대책 전북도민운동본부, 전북지역 건설일용노동자 무료취업알선센터, 그리고 전기·설비노동자들의 조합인 전기원 노조는 8일 공동으로 성명을 내 "정부는 공공근로 임금삭감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당국에서는 '임금역전현상으로 일용직 노동자들이 공공근로에 물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강변하지만 최소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하루임금을 깎을 경우 오히려 이미 취업한 노동자들의 임금까지 하락시킬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한 "매달 새벽 4시~5시 사이에 7회 이상 출근해 재방문카드에 낄아야 2주 단위로 단기간 투여되는 공공근로에 참여할 자격이 부여되고 있다"며 "전주지방노동사무소의 일일취업센터는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새벽출근을 강요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전주실업자취업지원센터(대표 문규현)도 9일 성명을 내 "공공근로 임금삭감을 즉각 철회하고 전라북도와 전주시는 실질적인 실업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일시적 공공근로를 철회하고 최저생계비를 산출하여 모든 실업자들에게 실업수당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새만금 조사단 구성하라”

전북공대위, <조사단 구성위원회> 제안

새만금 간척사업 민간 공동조사단은 사업 전면 재검토를 위한 조사단이 돼야 한다는 지적이 시민단체들에서 일고 있다.

새만금 간척사업 전면 재검토를 위한 전북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회의(대책회의·대표 전봉호 외)는 9일 오전 전주 가톨릭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월 6일 전북도와 중앙행정 각 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새만금 사업관련 관계부처 국장회의는 사업의 부분 검토만을 고려하고 있다"며 "부분 검토만으로는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결론을 마련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책회의는 "민관 공동조사단 구성이 늦어질수록 사업의 문제점은 커질 수밖에 없다"며 "부서간 입장 차이 극복을 위해 조사단 구성을 위한 정부 책임자를 선정해 시민단체와 <공동조사단 구성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대책회의는 "유종근 전북도지사가 지난 1월 11일 기자회견에서는 백지화 검토를 포함한 민관 공동조사단 구성을 제안했다가, 농림부장관을 만난 자리에서는 복합산업단지

로 할 것인가 농지전용으로 이용할 것인가를 논의하고, 언론에 대해서도 부분개발이나 교량개발이나 하면서 개발을 전제하고 있다"면서 "유지사가 제안한 여러 의견들은 공동조사단이 꾸러지면 그 안에서 논의될 수 있는 문제나만큼 민관 동수가 참여하는 공정한 공동조사단부터 시급히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암공대위 감사원 진정

동암공대위가 8일 <사회복지법인 동암>의 비리악 인권유린 내용을 담은 진정서를 감사원과 전주지방검찰청, 그리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제출했다. [진정서 표지 : → 4면에]

인권을 지키는 등대가 되어주십시오.

전북평화와인권연대의 자원활동가가 되시면 인권운동의 경험을 쌓고 인권학습 등을 통해 관련지식을 체득할 수 있으며, 어둡고 뒤떨린 사회에서 자신의 참된 자아를 찾아나가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수배해제·사면복권 신청을 받습니다.

전북지역 양심수 및 정치수배자, 사면복권 대상자에 대하여 사면복권 신청을 받습니다. 문의: 255-9339

[알림] 인권에 관련된 정보를 알려주십시오.

계획하고 계신 사업, 현장소식, 구속자들의 상황, 재판소식 등 인권에 관련된 정보를 평화와인권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평화와인권은 이를 통해 국내외 지역의 인권현실을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평화와인권>은 독자여러분의 후원금으로 운영됩니다. 인권운동을 더 잘 하도록 도와주십시오.

구독문의: 0652) 276-1253 / 예금주 문규현
후원계좌·국민은행 512-21-0065-982
우체국 402297-0062450
전북은행 535-21-0304454

“특별검사제만이 해결책”

“법무부장관·검찰수뇌부 퇴진” ... 법조비리 처리에 항의 붓물

[편집자주] 법무부와 검찰이 발표한 대전 법조비리 수사결과와 검찰인사 개혁방안, 법조비리 개혁방안 등에 대해 각계에서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이 내용을 간추려 보았다.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위원장 양건)는 지난 1일 법무부와 검찰의 발표에 대해 성명을 내고 “은 국민의 법조개혁에 대한 기대를 모은 이번 사건을 이종기 변호사에게 형사사건을 수임해 준 전·현직 판검사에 대한 형사처벌 없이 검사 6명의 사표를 수리하는 것으로 종결한 것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처사이며, 검찰이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기를 거부한 행위”라고 비난했다.

경실련은 “특히 이종기 변호사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은 하위직 공무원들의 경우 구속처리하면서 그들보다 더 큰 책임을 져야 할 관련 판·검사들은 단 한 명도 형사처벌하지 않고 사표를 받거나 가벼운 징계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은 검찰 스스로 법질서와 형평성을 무시한 처사”라고 밝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도 지난 1일 성명을 통해 “전관예우와 브로커 근절은 법조개혁의 핵심으로 형사사건의 수임제한 등을 통해 이를 반드시 입법화하여 제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민변은 “전관 변호사에 대해 자신이 근무했던 지역에서 개업할 경우 2년간 형사사건의 수임을 제한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민변이 대한변협을 통해 제출했으나 법무부의 반대로 국회에 상정조차 하지 못했다”면서 “이번 기회에 입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심재훈 고검장의 발언과동에 대해 “그 동안 검찰이 정치권의 요구에 의

해, 또 정치권의 요구가 있기 이전에 미리 심기를 살펴 정치적인 수사를 해 왔다는 비판이 줄곧 있어 왔지만 검찰 고위간부가 스스로 정치적 편향성과 탈공정함에 대해 폭로하고 검찰 수뇌부에 대해 퇴진을 요구한 것은 처음”이라면서 “여기에 대한 검찰 수뇌부의 책임있는 해명이 없는 한 검찰총장은 사퇴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후배 검사들이 그릇된 법조관행에 대해 철퇴를 가하는 마당에 지휘책임이 있는 검찰수뇌부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온당하다는 것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이갑용)은 “이러한 검찰이 과연 이 나라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활동하다 구속된 노동자와 양심수에 대해 기소할 도덕적 명분과 권리가 있는지” 반문하면서 “공안검사와 정치검사들의 정치적 필요에 의해 자행된 인권탄압의 진상을 규명하고 모든 양심수를 석방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한인섭·서울대 법대)는 지난 4일 <검찰 개혁 의견서>를 발표하고 “검찰에 대한 외부의 견제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무엇보다 특별검사제가 운영되어야 하며, 이러한 특별검사제에 의해 운영되는 독립적인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가 신설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제도를 도입해 검찰이 정치로부터 중립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검찰 내부에서는 △상명하복제도 폐지 △내부결재제도 간소화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지휘권 폐지 등을 통해 검찰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대하되 이에 따른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견제할 검찰심사제를 신설하자”고 구체적인 대안까지 내놓아 눈길을 끌었다.

진정서

진정인 : 사회복지법인 동암사태 진상규명과 정상화를 위한 시민·사회단체공동대책위원회 (상임대표: 김승환)
피진정인 : 사회복지법인 동암 (이사장: 양복규)

피진정인 사회복지법인 동암은 국비, 도비와 시비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 재활을 위한 사회복지법인입니다. 피진정인은 이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 중 상당한 인지도를 누리고 있고, 시설운영면에서 호평을 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1998년 11월경 피진정인이 운영하는 동암재활원의 직원 2명이 원생을 성폭행과 성주행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되면서 많은 비리와 인권침해의혹이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지역민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안겨 주었습니다.

위 사태에 접하여 뜻이 있는 시민·사회단체들이 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중략)

진정인은 약 1개월에 걸쳐서 피해자나 목격자의 증언 등 증거를 수집하여 이를 기초로 1) 동암재활원생 성폭행, 2) 동암재활원생과 학생 상습구타, 3) 근로시설없는 동암재활원, 4) 장애인 체육관·수영장 일반인 중심으로 운영, 수영장 국·도비 보조금 편법수령, 5) 기타 동암재활원내 인권침해 등을 조사하여 1999. 1. 27. 불임과 같은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진정인은 귀 감사원이 불임 보고서에 들어 있는 비리와 인권침해사태에 대하여 조속한 감사를 실시하여 일련의 사태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의법처리해 주시기를 진정합니다.

1999. 2. 8

감사원 귀중



평화와인권

PEACE & HUMAN RIGHTS WEEKLY NEWS

제 135 호

1999년 2월 22일

발행처: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발행인: 문규현·김승환

편집인: 문민식

·주소) [561-162]전주시 덕진구 진북2동 1034-1 숲정이성지사회관 ·전화) 0652-276-1253. 255-9339 ·팩스) 255-9331
·통신ID) onespark(전.나.녹두넷.진보넷) ·E-mail : onespark@kor.inp.or.kr ·Homepage : http://kor.inp.or.kr/onespark

조건없는 석방 불과 19명

준법서약 걸러 손성모·신광수씨도 빠져

군산교도소가 재소자에게 가야 할 우편물을 건네주지 않고 보관하다 이들이 석방되는 날 이를 돌려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정리하고 반대 투쟁과 관련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됐다 지난달 29일 구속된 지 100여일 만에 석방된 군산기아특수강 해고노동자들에 따르면, 군산교도소측은 노동법과 국가보안법을 위반해 구속된 노동자들을 후원하는 단체인 <구속노동자후원회>(구노회·대표 정동석)가 지난해 10월말 경 구속 노동자들에게 우편으로 들여보낸 책 <알기 쉬운 인권지침>(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인권위원회 펴냄)과 여기에 끼워 부친 여섯 통의 편지를 건네주지 않고 있다가 석방되는 날 돌려줬다.

구노회가 출소 노동자들을 통해 이와 같은 소식을 뒤늦게 전해 듣고 군산교도소에 항의하자 교도소측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처음에는 발뺌하다가 구노회측이 이를 문제삼겠다며 강력히 항의하자 “아마 법정에 나간 사이 책이 들어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것 같다” “담당 직원이 없는 사이 벌어진 일 같다”는 등의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았다.

군산교도소는 구노회측의 강력한 항의를 받고 나서야 석방된 노동자에게 전화를 걸어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구두 약속을 남겼다.

한편 구노회 장한빛씨는 “구속노동자

들에게 이와 같은 사례가 종종 발생했다”며 “다른 교도소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산교도소에서 우편물을 재소자에게 건네주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전주교도소 등 전국 각 교도소에서 우편물 ‘실종’ 문제는 재소·출소 양심수들과 그 동료 및 가족들로부터 계속해서 지탄을 받아왔다.

손성모씨 석방 난망

국민회의, “29년 이상 17명”
사회단체들, 석방촉구 기자회견

전주교도소에 수감중인 비전향장기수 손성모(71세·19년 구금), 신광수(71세·15년 구금)씨 석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전북인권선교협의회 등 전북지역 종교·사회단체들은 8일 오전 전주시톨릭센터에서 <손성모, 신광수 선생을 비롯한 양심수 전원석방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양심수 석방의 걸림돌인 준법서약제를 즉각 폐지

하라”고 주장했다. 사회단체들은 또한 “비전향장기수인 최호경(42세·7년 구금)씨 등 모든 양심수를 조건없이 석방, 사면, 복권 조치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밖에도 △조소중이거나 재판중인 모든 양심수에 대한 공소취하와 석방 △정치적 수배자들에 대한 수배조치 해제도 함께 요구했다.

한편 여당인 국민회의는 9일 <사면복권 대상자 건의안>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41년제 구금돼 있는 우용각씨(71세) 등 29년 이상 복역한 비전향장기수 17명이 석방대상에 올라있다. 이밖에 △3, 5, 6공화국 당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7명(전체 구속자는 45명, 98년 7월 현재 민가협 통계) △김영삼 정권 시절 구속자 : 국보법 위반 구속자 56명, 집시법 위반 구속자 18명 등 74명(전체 161명)도 국민회의가 건의한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르면, 북에 가족을 둔 비전향장기수 19명 가운데 손성모, 신광수씨만 이번 사면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최종 대상은 이달 25일께나 나오게 되지만, 두 비전향장기수가 석방되지 않을지 모른다는 우려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역시 전주교도소에 수감중인 비전향장기수 최호경씨도 이번 사면대상에 오르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최씨도 6공 정권의 피해자이지만 이제까지 양심을 이유로 준법서약서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최씨에게 이번에도 준법서약서가 석방의 전제로 요구될 것이기 때문이다.

다음주 설 연휴 관계로 <평화와인권> 쉽니다.
독자여러분! 뜻깊은 연휴가 되시길 바랍니다.

적자타령에 국민건강권 침해 전북대병원 통해 본 국립대병원 구조조정

최근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구조조정 이 속속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발표한 국립대병원 구조조정안의 핵심내용이 인원감축으로 귀결됨으로써 환자들에 대한 의료서비스 질이 저하되는 등 국민의 건강권에 심각한 침해가 우려되는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지난 1월 <국립대병원 경영 혁신안>을 발표하고 각 국립대병원측에 이에 맞는 경영방안을 2월말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그리고 이는 곧바로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교육부안은 경영합리화 체제 구축, 교육연구기능의 효과적 추진,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투명한 경영체제 구축 등 그럴싸한 취지와는 달리 몇 가지 긍정적 요인을 제외하면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혁신안의 핵심은 △의료수입에 인건비 지출 상한선을 맞추는 '인건비 상한제' 도입 △간호사·의료기사·일반직 노동자 수를 줄이고 일부 직원은 용역으로 대체하는 '직원 총정원제' 도입 등 비용절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교육부와 병원측은 국립대병원이 적자운영되고 있다는 이유로 인원감축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적자의 사정은 인건비 때문이 아니라 엄청난 부채를 떠안을 수밖에 없는 시설투자에 있다. 전북대병원의 경우 최근 응급센터를 새로 지으면서 97년 12월로 220~230억 정도로 부채가 누적됐다.

그러나 실제로 IMF 여파로 시설투자가 거의 없었던 98년 상반기 전국 국립대병원이 올린 경영실적은 6개 병원 중 5개 병원이 14억 6천 만원의 흑자다. 전북대병원의 경우 98년 한해 동안 20억의 적지않은 흑자를 냈다. 결국 무리한 시설투자로 인한 적자 피해는 환자들에게 돌아간다. 투자비용을 거둬들이기 위해 의료인원을 감축하게 되고 이것은 병원노동자에게 과로와

만성피로를 주어 결국 의료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의료사고의 위험이 커지는 악순환을 낳을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현재 '국립대병원 환자 수 대비 인력현황'을 97년 통계로 보면 직원 1인당 환자 수는 436명으로 사립대병원의 420명보다 16명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대병원의 경우 직원 1인당 조정환자 수는 50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립대병원 노동자들의 노동강도가 사립대병원 노동자들보다 세며 근로조건이 더 열악하다는 사실을 뜻한다.

또한 의료수익 증대를 위한 수익성 위주의 병원운영을 부추기는 것은 결국 과잉진료와 부당진료를 증가시킬 위험을 키운다.

따라서 이번 교육부안은 단지 인력감축과 비용절감 등 노동자의 고통전달

을 통한 의료 수익 증가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고 그 피해 또한 고스란히 환자에게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의 혁신안이 이런 식으로 나온 것은 공공의료에 대한 정부의 인식이 부족한 탓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전 국민건강의료산업노동조합 전북대병원 노조위원장 박영신(32)씨는 "이번 교육부안은 공공의료기관인 국립대병원을 민간병원과 똑같이 '수익성'에만 평가의 근거를 두고 있다"면서 "국립대병원을 3차 공공병원으로서 국가보건의 사업을 행하는 공공병원의 역할을 해야 하는 곳으로 민간병원과 무한경쟁으로 치닫는 현재의 의료현실에서 벗어나는 게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정작 구조조정해야 할 부분은 이사회와 비민주적 운영, 병원장 낙하산 인사 등 구조적 개혁"이라며 "민간이사회제 등 이사회제도 개선, 병원장 추천위원회 구성, 각종 위원회의 노사공동 구성, 노조의 경영참가 등이 개혁안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권간행물]

「 국가인권위원회,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 」

- 인권법 제정 및 국가인권기구 설치 민간단체공동추진위원회 펴냄 -

김대중 정부가 외교통상부장관까지 유엔인권위원회에 보내 자랑하고 싶어 하는 <국가인권위원회>가 할 일은 도대체 무엇인가? 지난해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 50주년을 기념하는 날 <인권법>을 공포하고 설립안을 확정하겠다고 했는데 해 지난 2월 중순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다. 무슨일이 있었는가?

민간단체공추위가 의문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소책자를 내었다. 김대중 대통령이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는 '유엔 제시 기준', 국제엠네스티가 대통령에게 보낸 두 통의 공개서한 전문(全文), 국가인권위원회 설치 논란의 주요 경과 등이 부록으로 실렸다. 본문은 △국가인권기구란 무엇인가? △범정부 인권법안 무엇이 문제인가? △민간단체의 입장 등으로 구성됐다.

지난해 12월 10일을 기점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설치 문제는 불안한 휴면기에 들어간 상태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를 자기 조직의 산하에 두고 싶어하는 법무부의 정치권 로비는 물밑에서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민간단체공추위는 적지 않은 수고를 거쳐 국가인권위원회 논쟁을 집약적으로 정리한 55쪽 짜리의 이 소책자를 통해 '전국민적 논의와 참여를 통해서만 올바른 국가인권위원회의 설치가 가능하다'는 원칙을 반복해 보여주고 있다.

· 구입문의 : 공추위(02-741-5363), 전북평화와인권연대(0652-276-1253)

“공공근로 임금 또 깎더니” 전북지역 노동단체 성명서 내

공공근로자 하루임금이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 98년 10월 이후 두 차례에 걸쳐 19,000원까지 깎인 데 대해 노동단체들이 규탄하고 나섰다.

고용실업대책 전북도민운동본부, 전북지역 건설일용노동자 무료취업알선센터, 그리고 전기·설비노동자들의 조합인 전기원 노조는 8일 공동으로 성명을 내 "정부는 공공근로 임금삭감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당국에서는 '임금여전현상'으로 일용직 노동자들이 공공근로에 물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강변하지만 최소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하루임금을 깎을 경우 오히려 이미 취업한 노동자들의 임금까지 하락시킬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한 "매달 새벽 4시~5시 사이에 7회 이상 출근해 재방문카드에 날인해야 2주 단위로 단기간 투여되는 공공근로에 참여할 자격이 부여되고 있다"며 "전주지방노동사무소의 일일취업센터는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새벽출근을 강요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전주실업자취업지원센터(대표 문규현)도 9일 성명을 내 "공공근로 임금삭감을 즉각 철회하고 전라북도과 전주시는 실질적인 실업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일시적 공공근로를 철회하고 최저생계비를 산출하여 모든 실업자들에게 실업수당을 지급하라" 요구했다.

“새만금 조사단 구성하라” 전북공대위, <조사단 구성위원회> 제안

새만금 간척사업 민관 공동조사단은 사업 전면 재검토를 위한 조사단이 돼야 한다는 지적이 시민단체들에서 일고 있다.

새만금 간척사업 전면 재검토를 위한 전북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회의(대책회의·대표 전봉호 외)는 9일 오전 전주 가톨릭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월 6일 전북도와 중앙행정 각 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새만금 사업관련 관계부처 국정회의는 사업의 부분 검토만을 고려하고 있다"며 "부분 검토만으로는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결론을 마련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책회의는 "민관 공동조사단 구성이 늦어질수록 사업의 문제점은 커질 수밖에 없다"며 "부서간 입장 차이 극복을 위해 조사단 구성을 위한 정부 책임자를 선정해 시민단체와 <공동조사단 구성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대책회의는 "유종근 전북도지사가 지난 1월 11일 기자회견

에서는 백지화 검토를 포함한 민관 공동조사단 구성을 제안했다. 농림부장관을 만난 자리에서는 복합산업단지로 할 것인가 농지전용으로 이용할 것인가를 논의하고, 언론에 대해서도 부분개발이나 교량개발이나 하면서 개발을 전제하고 있다"면서 "유지사가 제안한 여러 의견들은 공동조사단이 꾸러지면 그 안에서 논의될 수 있는 문제나만큼 민관 동수가 참여하는 공정한 공동조사단부터 시급히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암공대위 감사원 전정

동암공대위가 8일 <사회복지법인 동암>의 비리와 인권유린 내용을 담은 진정서를 감사원과 전주지방검찰청, 그리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제출했다. [진정서 표지 : → 4면에]

인권을 지키는 등대가 되어주십시오.

전북평화와인권연대의 자원활동가가 되시면 인권운동의 경험을 쌓고 인권학습 등을 통해 관련지식을 체득할 수 있으며, 어둡고 뒤틀린 사회에서 자신의 참된 자아를 찾아나가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알림] 인권에 관련된 정보를 알려주십시오.

계획하고 계신 사업, 현장소식, 구속자들의 상황, 재판소식 등 인권에 관련된 정보를 평화와인권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평화와인권은 이를 통해 국내외 지역의 인권현실을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평화와인권>은 독자여러분의 후원금으로 운영됩니다. 인권운동을 더 잘 하도록 도와주십시오.

구독문의: 0652) 276-1253 / 예금주 문규현
후원계좌 · 국민은행 512-21-0065-982
우체국 402297-0062450
전북은행 535-21-0304454

특별검사제만이 해결책

“법무부장관·검찰수뇌부 퇴진” ... 법조비리 처리에 항의 붓물

[편집자주] 법무부와 검찰이 발표한 대전 법조비리 수사결과와 검찰인사 개혁방안, 법조비리 개혁방안 등에 대해 각계에서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이 내용을 간추려 보았다.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위원장 양건)는 지난 1일 법무부와 검찰의 발표에 대해 성명을 내고 “은 국민의 법조개혁에 대한 기대를 모은 이번 사건을 이종기 변호사에게 형사사건을 수임해 준 전·현직 판검사에 대한 형사처벌 없이 검사 6명의 사표를 수리하는 것으로 종결한 것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처사이며, 검찰이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기를 거부한 행위”라고 비난했다.

경실련은 “특히 이종기 변호사로부터 급품과 함응을 받은 하위직 공무원들의 경우 구속처리하면서 그들보다 더 큰 책임을 져야 할 관련 판·검사들은 단 한 명도 형사처벌하지 않고 사표를 받거나 가벼운 징계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은 검찰 스스로 법질서와 형평성을 무시한 처사”라고 밝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도 지난 1일 성명을 통해 “전관예우와 브로커 근절은 법조개혁의 핵심으로 형사사건의 수임제한 등을 통해 이를 반드시 입법화하여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민변은 “전관 변호사에 대해 자신이 근무했던 지역에서 개업할 경우 2년간 형사사건의 수임을 제한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민변이 대한변협을 통해 제출했으나 법무부의 반대로 국회에 상정조차 하지 못했다”면서 “이번 기회에 입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심재훈 고검장의 발언과중에 대해 “그 동안 검찰이 정치권의 요구에 의

해, 또 정치권의 요구가 있기 이전에 미리 심기를 살펴 정치적인 수사를 해왔다는 비판이 줄곧 있어 왔지만 검찰 고위간부가 스스로 정치적 편향성과 불공정함에 대해 폭로하고 검찰 수뇌부에 대해 퇴진을 요구한 것은 처음”이라면서 “여기에 대한 검찰 수뇌부의 책임있는 해명이 없는 한 검찰총장은 사퇴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후배 검사들이 그릇된 법조관행에 대해 철퇴를 가하는 마당에 지휘책임이 있는 검찰수뇌부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온당하다는 것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이갑용)은 “이러한 검찰이 과연 이 나라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활동하다 구속된 노동자와 양심수에 대해 기소할 도덕적 명분과 권리가 있는지” 반문하면서 “공안검사와 정치검사들의 정치적 필요에 의해 자행된 인권탄압의 진상을 규명하고 모든 양심수를 석방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한인섭·서울대 법대)는 지난 4일 <검찰 개혁 의견서>를 발표하고 “검찰에 대한 외부의 견제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무엇보다 특별검사제가 운영되어야 하며, 이러한 특별검사제에 의해 운영되는 독립적인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가 신설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제도를 도입해 검찰이 정치로부터 중립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검찰 내부에서는 △상명하복제도 폐지 △내부결재제도 간소화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지휘권 폐지 등을 통해 검찰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대하되 이에 따른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견제할 검찰심사제를 신설하자”고 구체적인 대안까지 내놓아 눈길을 끌었다.

• 동양 비리 진정

진정서

진정인 : 사회복지법인 동양사태 진상규명과 정상화를 위한 시민·사회단체공동대책위원회 (상임대표: 김승환)
피진정인 : 사회복지법인 동양 (이사장: 양복규)

피진정인 사회복지법인 동양은 국비, 도비와 시비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 재활을 위한 사회복지법인입니다. 피진정인은 이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 중 상당한 인지도를 누리고 있고, 시설운영면에서 호평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1998년 11월경 피진정인이 운영하는 동양재활원의 직원 2명이 원생을 성폭행과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되면서 많은 비리와 인권침해의혹이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지역민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안겨 주었습니다.

위 사태에 접하여 뜻이 있는 시민·사회단체들이 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중략)

진정인은 약 1개월에 걸쳐서 피해자나 목격자의 증언 등 증거를 수집하여 이를 기초로 1) 동양재활원생 성폭행, 2) 동양재활원생과 학생 상습구타, 3) 근로시설없는 동양재활원, 4) 장애인 체육관·수영장 일반인 중심으로 운영, 수영장 국·도비 보조금 편법수령, 5) 기타 동양재활원내 인권침해 등을 조사하여 1999. 1. 27. 불임과 같은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진정인은 귀 감사원이 불임 보고서에 들어 있는 비리와 인권침해사태에 대하여 조속한 감사를 실시하여 일련의 사태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의법처리해 주시기를 진정합니다.

1999. 2. 8

감사원 귀중



평화와인권

PEACE & HUMAN RIGHTS WEEKLY NEWS

제 136 호

1999년 3월 2일

발행처 :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발행인 : 문규현·김승환

편집인 : 문만식

· 주소) [561-162]전주시 덕진구 진북2동 1034-1 숲정이성지사회관 2층 · 전화) 0652-276-1253, 255-9339
· 통신ID) onepark(천.나.녹두넷.진보넷) · E-mail : onepark@kor.inp.or.kr · Homepage : http://kor.inp.or.kr/onespark

미군범죄 석연찮은 무죄판결

사법부, 화해위조 인정 불구 항소심서

사법부가 법정에서 미군 범죄 피의자의 화해위조 행위를 인정하면서도 “사용목적이 없었던 것 같다”는 정황 근거를 들어 피의자에게 무죄를 선고해 반축을 사고 있다.

더구나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가 이 사건 판결에서 ‘통화위조 사실이 인정된다’며 통화위조 행위 자체만으로도 5년의 중형을 선고한 바 있어 ‘외압’의혹조차 낳고 있다.

지난 24일 광주고법 형사합의부(재판장 맹천호 부장판사)는 칼라프린터와 스캐너를 이용해 원화와 미화 70여장을 위조해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통화위조)로 1심(전주지법 제3형사합의부, 98.10.22)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던 군산 미공군 전투비행단 통신대 병장 데일 엘 허프(Dale L Huff, 26세)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유통목적 없다 판단’ 이유

재판부는 “피고인이 위조통화를 유통할 목적이 없었음을 인정한다”는 요지의 무죄판결 취지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복사기를 이용해 위조한 지폐를 실물 크기로 오린 점 등은 위조의 목적이 ‘유통’에 있었다고 추정할 근거가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위조한 지폐를 태우거나 없애지 않고 쓰레기통에 버린 점 △피고인의 방에 위조한 지폐가 보관돼 있는 점 △인근 상점에

유통한 흔적이 없는 점 등을 ‘위조통화를 유통할 목적이 없었던’ 근거로 풀이했다.

한국 검찰 상소권 없어

군산미군기지 우리찾기 시민모임(상임대표 문정현 신부·시민모임)은 허프의 무죄판결 소식을 듣고 곧바로 성명을 내 “허프의 무죄판결에 대해 몇 가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1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통화위조의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통화위조 자체를 범법행위로 인정해 유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의 판결을 뒤집은 점 ▲지금까지 부대 안의 미군범죄는 비상을 뛰어넘는 허점투성이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점 등을 이번 판결의 문제점으로 짚어냈다.

시민모임은 또 “무죄선고는 관행적으로 있어왔던 주한미군의 외압의 결과라는 인상이 짙다”는 의문도 내놨다.

이번 무죄판결로 허프는 도리어 한국 정부로부터 상당한 액수의 피해보상액을 챙겨 귀국할 것으로 짐작된다.

한편 1967년 체결된 이후 2차례에 걸쳐 개정된 한미행정협정(SOFA) 규정에 따르면, 1심 또는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미군 범죄 피의자에 대해 한국 검찰은 상소할 수 없다. SOFA 규정은 이밖에도 △구속수사 불가능 △경찰강제권 행사 불가능 △미군의 재판포기 요청의 호의적 고려 등 불명등한 원칙으로 돼 있어 우리나라 사법권 행사를 제약해 왔다.

〈'98 전북인권보고서〉가 나왔습니다.

'98년도 전북지역의 인권상황을 모은 〈'98 전북인권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보고서는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와 <시민, 정치적 권리>로 크게 나뉘며, 본문은 노동, 사회복지, 사상탄압, 양심수, 채소자 인권, 주한미군범죄 등 9개 항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부록으로 <국가인권기구>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성명서 모음>을 실었습니다.

● 문의 : 012-676-6359(김영옥), 0652-276-1253, 255-9339

〈평화와인권〉은 독자여러분의 후원금으로 운영됩니다. 인권운동을 더 잘 하도록 도와주십시오.

구독문의: 0652-276-1253 / 예금주 문규현
후원계좌·국민은행 512-21-0065-982
우체국 402297-0062450
전북은행 535-21-0304454

경찰, 시위노동자 짓밟아 군산노동사무소 항의집회 도중

국민의 정부의 경찰이 시위 참가 노동자를 군화발로 짓밟아 중상을 입혔다.

지난 26일 오후 5시 40분께 <정리해고 반대와 생존권 사수를 위한 군산지역 투쟁사업장 연대회의> (대표 김연태 군산대노조위원장·연대회의) 소속 120여명의 노동자들은 군산노동사무소 앞마당에서 '사업주의 부당해고와 노조와해 공작에 대한 군산노동사무소의 편파수사와 직무유기 규탄 및 악질 사업주 처벌을 위한 결의대회'를 열 예정이었다. 이날로 다섯 번째가 되는 이번 집회에 경찰은 노동사무소 앞을 막았고 노동자들은 경찰과 몸싸움을 벌였다. 이때 대열의 선두에 있던 <군산지역 카게리어 노동조합> 노동자 장성민 (30세) 씨가 전투경찰 속으로 몸을 던지자 경찰들은 고립된 장씨를 군화발로 마구 짓밟았다.

장씨는 현재 눈자위 뼈가 으스러지는 중상을 입고 전주 예수병원에서 입원치료 중이며 심한 두통과 구토를 호소하고 있다.

한편 노동자들은 경찰의 저지선을 뚫고 노동사무소 사무실에 들어가 소장과 군산경찰서장에게 강력히 항의했다.

이에 경찰서장은 참가자들에게 즉시 사과하고 부상자에 대한 일체의 치료비 보상을 약속했다. 군산노동사무소장 역시 사과와 함께 참가자들이 주장했던 '편파수사'에 대해 "재수사를 통해 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소장과 서장은 이번 사태를 책임지고 즉각 사퇴할 것 △노조와해 조장하고 편파수사 자행하는 군산노동사무소에 특별감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자들과 노동단체 회원들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3월 2일부터 6일까지 전주지방노동위원회와 군산노동사무소 그리고 군산경찰서 등에서 항의집회를 갖기로 했다.

연대회의는 지난 1월 지난해부터 이어져오고 있는 부당해고와 노조와해 공작에 맞서 싸우고 있는 군산지역 5개 사업장 노동자들이 주축이 되어 결성됐다. 이들은 "대우상용차사무노조와 군산지역 카게리어노동조합 등 신규노동조합에 대한 회사측의 불법적인 노조와해 공작과 기아특수강과 군산대노조 등에 대한 부당해고에 대한 고발에 대해 군산노동사무소가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악질 사업주의 횡포를 그대로 눈감아주고 있다"면서 이를 규탄하는 집회를 다섯 차례에 걸쳐 열었다.

구속 양심수 치료 호소 '영남위' 이은미씨 교도소에서 고통

이른바 '영남위원회' 사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1심에서 4년형을 선고받고 부산교도소에 수감중인 이은미 (울산여성회 준비위원장) 씨가 지병인 만성허리디스크를 앓고 있으나 수술비 마련과 입원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씨는 학생운동 시절 전경들에게 폭력적으로 연행되다 허리를 다쳐 만성디스크를 앓아 왔다. 이씨는 '영남위' 사건에 연루된 뒤 누운 상태에서 보안수사대의 신문문을 받을 정도로 현재 병세가 악화됐다.

그러나 이씨는 현재 부산교도소에 수감중인데다 남편 임동식 (9년 실형) 씨와 동생 이희 (3년 실형) 씨까지 같은 사건으로 수감돼 있어 더 큰 고통을 겪고 있다.

이씨는 현재 '빠른 시일 안의 수술과 이를 위한 3개월 정도의 시간을 요한다'는 진단을 받고서도 손을 쓰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민주주의민족통일울산연합은 이씨의 수술비 마련과 '구속 집행정지' 석방 탄원을 위한 서명과 모금을 전국적으로 벌이고 있다.

- 문의 : (052) 294-7278
- 온라인계좌 : 농협 815081-56-010375(박희영)

[알림] 인권에 관련된 정보를 알려주십시오.

계획하고 계신 사업, 현장소식, 구속자들의 상황, 재판소식 등 인권에 관련된 정보를 평화와인권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평화와인권은 이를 통해 국내외 지역의 인권현실을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림] 구직상담 받습니다.

<전주 실업자 취업지원 센터>에서는 실업자들의 구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화: (0652)232-9191, 팩스: (0652)232-9192

- [행사와 동정]**
- 민주노총 전북본부 제4차 정기대의원대회
 - 때 : 3월 4일(목) 오후 2시
 - 곳 : 전북신협연합회 5층(빙상경기장 옆)
 - 군산지역 투쟁사업장 연대회의 6차 결의대회
 - 때 : 3월 5일(금) 오후 2시
 - 곳 : 군산노동사무소

수용자 대부분 환자 - 요양·치료 방치 - 시특위 '사회복지시설' 조사활동 중간 보고 ② -

<노인복지시설> 편

전주시내 노인복지시설로 소망요양원, 신성양노원, 전주양노원, 실비성예요양원 네 곳이 있다.

전반적으로 전주시내 노인복지시설의 문제는 입소자들이 대부분 건강상태가 심각하나 의료시설이 전혀 갖춰져 있지 않고 요양시설이나 치료시설로 옮겨져야 하는 환자들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 시설내 간호사와 촉탁의, 사회복지사, 영양사 등의 전문인력이 배치되어 노인들의 기능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이 실시되어야 하나 대부분 자원봉사자 등 비전문직으로 채워져 있다.

입소자들에게 노인복지법 시행령 20조와 지침에 의해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하나 모든 시설이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

시설의 장, 입소대표, 가족대표 등으로 운영간담회를 만들어 운영토록 되어 있으나 이 역시 모든 시설이 이행하지 않고 있다.

교통승차요금과 경로요금의 지급이 시설별로 다르며 운영이 불투명해 지급목적 벗어난 사용이 우려된다.

노인들의 저녁식사 제공이 4시 반에서 5시에 이루어져 시설편의로만 운영되고 있다.

사망시 개인통장 잔액을 시설장이 임의대로 집행하고 있다.

● 소망요양원 (현재 44명 수용)

회계관리를 총무가 아닌 다른 시설의 원장인 호성보육원장이 수행하고 있어 회계관리가 부실하고 연말정산조차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개원후 총 입소자 67명 중 사망자가 20명으로 평균 30%가 질병으로 사망했고, 수용자가 대부분 치매·당뇨병·고혈압 등의 만성질환에 시달리고 있어 요양이 아닌 치료시설에 수용되어야 하는데 방치되고 있다.

또한 교통승차요금을 시설장이 신청하지 않아 수용자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3년간 109명이 경로연금을 수령하고 있으나 승차요금은 12명만 지급됨).

영양사가 당뇨병, 고혈압 등의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 맞는 식단을 따로 작성해야 하는데 모두 한 종류의 식단만 배식해 병세를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전반적으로 노인들의 기능감퇴를 방지하기 위해 각종 사

회복지프로그램이 필요하나 전혀 실시되지 않고 있다.

● 신성양노원 (현재 43명 수용)

95년에 구입한 1천7백만원어치의 물리치료장비가 전혀 사용되지 않고 창고에 방치되어 있으며, 98년 12월에 6천만 원을 들여 보강한 물리치료시설이 예비실로 사용되고 있고, 이에 대한 시의 감독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수용자 사망시 통장에 남은 잔금을 시설에서 임의대로 사용해 개인재산을 침해했다. 또 수용자 대부분이 치료가 필요한 환자로서 요양시설로 전원조치하거나 시설 기능을 보강해야 하는데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

영양사도 없고 식단도 없어 개인환자에 맞는 식단지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경로연금이 일부 통장으로 지급되지 않는 등 연금관리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전무한 채 특정 종교활동이 강제 종교전과 수단으로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문제점이 드러났다.

또한 시설장은 건강악화를 핑계로 시설을 자주 비우는 등 원장으로서 역할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된다.

● 전주양노원 (현재 46명 수용)

노인편의시설 (보행안전시설, 화장실 안전시설)과 목욕탕이 갖추어져 있지 않았다.

영양사가 없고 식단은 1년에 한 번 작성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환자에게 걸맞는 식단작성과 배식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46명의 수용자중 노인성치매 6명, 청각·시각장애 5명, 심장질환 4명, 고혈압 13명, 위장질환 6명, 정신분열 5명 등으로 대부분 치료가 요양이 필요한 환자로서 요양시설에 전원조치되거나 요양시설 수준에 맞는 기능보강을 해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져야 하나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 성예요양원 (현재 52명 수용)

물리치료실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건강관리에 전혀 기여할 수 없는 수준이어서 개선이 필요하다. 또 목욕탕에 남녀탕 구분이 없다. 영양사 없이 식단작성이 되고 있어 환자들에게 맞는 배식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안권 주평 **미래의 생존권이 흔들린다 : 국민연금 파동에 부쳐**
 윤찬영 (전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최근 보건복지부의 정책들이 줄줄이 대대적인 저항에 부딪쳐 상처를 입고 있다. 의료보험 통합, 국민연금 확대, 의약분업 등 어느 것 하나 매끄럽게 되는 것이 없다. 과거 전두환정권 때에는 김정래 당시 보사부 장관이 의료 보험 통합을 추진하려다 대통령으로부터 질책을 받고 국회에서 눈물을 흘리더니, 이번에는 김모임 복지부 장관이 연금제도 확대를 방만하게 추진하다가 국민적 저항에 부딪치자 대통령과 국회로부터 호된 질책을 받아 연일 뉴스에 등장하였다.

연금제도는 자본주의사회가 사망, 폐질, 노령 등의 사유로 노동력을 영구적으로 상실한 사람들에게 소득을 보장해 주기 위해 고안해 낸 사회보장제도이다. 연금제도는 장해를 당하지 않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노후의 생존을 보장해주는 중요한 제도인 것이다. 이러한 연금제도의 급여를 보면 기초부분과 비례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분배되는 공통적인 부분과 평소 기여한 만큼 받는 차등적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연금제도는 상호연대와 개인의 능력을 고려하여 노후 소득의 안정을 도모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연금제도와 같은 사회보험은 전국민의 의무적 가입을 전제로 한다. 그 이유는 공동체적 연대를 실현하고 사회적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함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사회보험제도는 완전고용을 전제로 하며 피용률 또한 높아야 가능하다. 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자영자의 비율이 높든가 실업률이 높으면 사회보험의 실시는 많은 문제와 갈등을 유발시키게 되어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실업률도 높고 자영자의 비율도 높은 현실에서 연금가입자를 자영자에게까지 확대시키려는 무리수를 두고 그것도 무책임한 행정편의주의로 대응하다가 큰 벼락을 만나게 된

이 또한 과거 박정희정권이 추진했던 것과 같은 계산된 내자동원의 방식이 아니었는지 의심스럽다.

것이다. 그러나 문제를 제기하는 일반 국민들도 소위 "합리적 무지" 상태를 보이고 있다. 다음과 같은 점들이다. <첫째> 연금제도의 가입을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가? 이것은 사회보장제도로써 연금제도의 본질적 의미를 폐기하는 것이다. 연금제도는 사회보험으로서 국민 모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공동체적 연대, 소득재분배, 위험분산, 노후생활보장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둘째> 소득을 줄여서 신고하여 보험료를 적게 내겠다? 연금은 의료보험과 달리 장기보험이며 기여에 비례해 노후에 받게 되기 때문에 고의로 소득을 축소 보고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셋째> 반환일시금을 왜 폐지하는가? 반환일시금은 연금제도의 취지상 불필요한 급여이며 있어서도 아니 된다. 실업을 당하게 되면 실업관련 사회보장제도를 통하여 급여를 받아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연금제도가 도입될 당시에는 실업관련 사회보장제도가 없어 임시방편으로 생긴 제도이다. 그러나 기왕에 이러한 급여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소급적용하여 수급권을 박탈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일반인들의 사회보장에 대한 의식수준이 낮은 가운데 정부는 그야말로 방만하게 제도의 확대 시행을 추진하여 사회보장의 역사를 대폭 후퇴시켜 버리게 되었다. 제대로 시행하기도 전에 이렇게 사회보장에 대하여 불만과 불신이 팽배한다면 앞으로 사회

보장제도의 도입과 개선은 몇 배의 노력이 필요할 지 모른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점은 정부가 국민들의 생존권에 대해서 책임의식이 희박하다는 점이다. 국민연금제도는 박정희정권 당시 '73년 내자동원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가 실패하였고, 전두환정권 말기에 야권 및 재야의 대통령 직선제 실시 요구에 대해 묵살하던 정권이 느닷없이 '86년 9월 1일 대국민 복지공약을 제시하면서 법이 제정되었고 실시는 '88년 노태우 정권에서 시작되었다. 김영삼정권은 날치기로 통과시킨 공공자금관리기금법으로 국민연금기금을 흡수하여 자의적으로 기금을 사용했다. 이에 참여연대에서 지난 '94년 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과정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법의 위헌성이 제기되어 '96년 2월 위헌법률심판제청이 이루어졌다. 그 해 10월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판결이 내려졌지만 국민연금기금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과 문제의식이 높아졌다.

그러므로 현 정권은 사회개혁 및 정치개혁 차원에서 국민연금문제를 다루어야 했고, 국민들에게 연금기금의 촉박을 밝혀 이해를 구해야 했다. 그리고 진지한 판단과 철저한 준비를 통해 모든 국민을 연금제도에 포섭시키는 노력을 해야 했다. 그런데도 일부 전문가와 관료들 사이에서만 진행시켜 국민들의 생활수준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점은 고려도 하지 않고 일사천리로 밀어부쳐 오늘날 시작도 되기 전에 중요한 사회보장제도인 국민연금제도의 파탄지경을 초래하게 된 것이다. 이 또한 과거 박정희정권이 추진했던 것과 같은 계산된 내자동원의 방식이 아니었는지 의심스럽다.

결론적으로 정부는 국민들의 현재적 생존권을 위한 실업대책과 미래적 생존권을 위한 연금제도에 대해 총체적이고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평화와인권
 PEACE & HUMAN RIGHTS WEEKLY NEWS

제 137 호
 1999년 3월 9일
 발행처: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발행인: 문규현 · 김승환
 편집인: 문민식

· 주소) [560-040]전주시 완산구 전동 77 대건신협 3층 · 전화) 0652-231-9331 · 팩스) 0652-231-9332
 · 통신ID) onespark(천.나.독두넷.진보넷) · E-mail : onespark@kor.inp.or.kr · Homepage : http://kor.inp.or.kr/onespark

재야인사들 여권 안내줘
법적 흠 없어도 '경력' '조사중' 이유

재야 인사들에 대해 정당한 이유없이 여권 발급을 미루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공안당국은 법적인 흠이 없는데도 과거 국가보안법 관련 혐의로 수사 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았거나 현재 조사중이라는 이유로 재야인사들에 대한 여권 발급을 미루거나 아예 내주지 않고 있다.

문정현 신부

지난달 24일 문정현 신부(59·익산 작은자매의집)는 전북 도청에 여권 발급을 신청했다. 그러나 이 신청서류가 다른 일반인의 서류와 마찬가지로 쉽게 처리될지는 알 수 없다. 여권 발급의 열쇠를 쥐고 있는 국가정보원(옛 안기부)이 문 신부의 과거 전력을 이유로 신원보증을 통보하지 않은 채 차일피일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문 신부는 이미 97년 기독교 성자인 이스라엘에 다녀왔고 지난해 선교 목적으로 북한에 다녀오기도 했다. 즉 최근 두 차례 여권을 발급받은 바 있다. 그러나 그때는 한 차례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단수여권(회용 여권)이었고 따라서 외국에 나갈 일이 있을 때면 매번 새로 여권을 신청하는 번거로움을 감수해야 했다. 즉 공안기관은 정부정책에 순응하지 않은 경력이 있는 재야인사들을 통제하고 길들이는 데 이들의 여권의 자유를 불모로 만들어 온 것이다. 문 신부는 지난 96년 6월 폴란드 바

르샤에서 북한대표를 만나 8·15민족공동행사 개최 문제를 논의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그 해 7월 검찰과 안기부로부터 조사를 받았다. 당시 사법부는 안기부가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그 뒤 안기부는 8월 문 신부를 한 차례 더 불러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이후 현재까지 문 신부는 같은 사건으로 기소를 당한 바가 없다.

문 신부는 98년 초에는 제2회 '인권영화제-군산'에서 제주 4.3항쟁을 다룬 다큐멘터리 레드헌트 상영을 이유로 경찰과 검찰조사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이 때도 문 신부는 기소되지 않았다.

한편 이 두 사건 조사를 맡고 있는 전주지검 군산지청 김용승 검사는 "공안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여권발급 업무는 국정원에 고유하므로 검찰도 정확한 미발급 이유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김 검사는 문 신부의 항의에 최근 <여행가능증명원>을 내줬으나 여권 발급과는 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광철 전주시민회 대표

지난달 여권 발급을 신청한 이광철씨(전주시민회 공동대표)도 19일만에 함경계 여권을 받아들었다. 이미 법적으로 무죄를 확정받은 사건에 대한 '경력' 때문에 여권발급신청서류가 전북지방경찰청 정보과에서 국가정보원으로 넘어간 채 아무런 소식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 씨가 이를 여러 차례 항의하고 사회문제로 삼을 움직임을 보이자 그때서야 국정원은 신원보증을 통보했다.

사무실 옮겼습니다

전화 : 0652-231-9331
 팩스 : 0652-231-9332
 주소 : [560-040]전주시 완산구 전동 77 대건신협 3층 약도

전북 평화와인권연대 (대건신협 3층)
 ※ 주차장 안쪽 계단을 이용하세요

‘직원선동, 불마’...악선전에 신상정보까지 빼내 감시

대우자동차판매(주) 군산 출고사무소, 군산 카캐리어 노조 노동자 출입통제

해고효력을 닦고 있는 노동자들을 용역계약을 맺은 회사가 출입을 통제해 말썽을 빚고 있다.

대우자동차판매(주) (대우자판) 군산 출고사무소는 지난 5일 회사 경비실에 협조공문을 보내 해고효력을 닦고 있는 <군산지역 카캐리어 노동조합> 위원장 오상수씨(34세) 등 6명을 출입통제할 것을 지시했다. 대우자판 측은 공문을 통해 “당사와 용역계약이 해지돼 업무와 무관하며 주위의 직원들을 선동하여 불미스러운 일을 자행하는 자들로 출입을 통제하라”고 지시했다.

대우자판은 출고된 자동차를 운송하는 업무를 대일·대호물류사와 용역을 체결해 맡겨왔으나 이 회사 노동자 8명이 정리해고되자 최근 경비용역회사를 통해 오상수씨 등 6명에 대한 출입을 통제해왔다. 대우자판 출고사무소 측은 회사 경비를 용역업체에 맡기고 경비대장에게 예비군대대장을 겸임시키고 있다.

대우자판 측이 작성해 보낸 공문 뒷면에는 이들 노조원 6명의 입사 당시 사진이 게시되고 사진 아래에는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돼 있어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을 빚고 있다.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대일·대호물류 입사 당시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용역업체 업체인 대우자판 측에 전달·보관되고 자신들도 모르게 이용되고 있는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이자 초상권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또 “대우자판 측이 ‘주위 직원들을 선동하여 불미스러운 일을 자행하는 자들’이라는 악선전으로 정당한 집회와 투쟁을 방해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한편, 같은 날 이들 6명을 포함해 모두 8명의 군산지역 카캐리어 노동조합 정리해고 노동자가 전주지방노동사무소로부터 복직판정을 받았다.



(→ 3면에서 이어짐) ▲공공근로 임금교섭을 위한 민간단체 교섭권 즉각 허용 ▲전북지역 건설일용직 노동자들의 올바른 실태파악으로 기능이 다양한 건설노동자의 실태파악 마련 ▲관공공사 건설현장에 8시간 노동시간 도입 ▲3,4단계로 이어지는 불법하도급을 근절해 일자리를 늘릴 것 등의 요구사항을 국민회의 전북도지부에 전달하기 위해 거리행진에 나섰다.

그러나 미리 연락을 받은 도지부는 모두 빠져나가고 없어

노동자들은 당사 앞에서 항의서한을 낭독하는 것으로 집회를 마무리했다. 항의서한은 오는 8일 고용실업대책전북도민운동본부의 공동대표 염경석씨와 전기원노조 위원장 정광수씨가 전달할 예정이다.

인권을 지키는 등대가 되어주십시오.

전북평화와인권연대의 자원활동가가 되시면 인권운동의 경험을 쌓고 인권학습 등을 통해 관련지식을 체득할 수 있으며, 어둡고 뒤떨린 사회에서 자신의 참된 자아를 찾아나가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평화와인권>은 독자여러분의 후원금으로 운영됩니다. 인권운동을 더 잘 하도록 도와주십시오.

구독문의: 0652-231-9331 / 예금주 문규현
후원계좌 · 국민은행 512-21-0065-982
우체국 402297-0062450
전북은행 535-21-0304454

[알림] 인권에 관련된 정보를 알려주십시오.

계획하고 계신 사업, 현장소식, 구속자들의 상황, 재판소식 등 인권에 관련된 정보를 평화와인권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평화와인권은 이를 통해 국내외 지역의 인권현실을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사와 동정]

■ 사회복지 수용시설 운영실태와 개혁을 위한
대공청회

- 때 : 3월 11일(목) 오후 2시
- 곳 : 전주시의회 회의장(의회청사 5층)

■ 노동열사 고(故) 박복실 추모미사

- 때 : 3월 11(목) 오후 7시
- 곳 : 익산 노동자의 집

■ 새만금 간척사업 전면재검토 촉구 집회

- 때 : 3월 13(토) 오후 2시
- 곳 : 전주 코아백화점 앞

“시설 나가면 부랑인”

전주시의회 특위

‘사회복지수용시설’ 조사 중간보고 ③

끝희 - <아동복지시설> 편

● 호성보육원

□ 회계처리상의 문제

시설에 지원되는 보조금의 집행내역을 연 1회에 한해 정산보고함으로써 시설운영비 집행상황과 복지재단 및 개인 후원자의 후원금 관리 상황이 불투명해 시설운영전반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다. 따라서 시설측에서는 매월말 예산집행상황을 시에 보고하고 후원내역을 기록하고 보존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시는 각 시설에서 매월말 보고되는 예산집행상황을 시설별로 공고해 시설운영 전반에 관한 투명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 사회복지시설 전문프로그램 운영상황

최초 시설입소에서부터 사회복귀까지 시설환경적응 및 소외감, 심리적 불안해소 등 사회적응에 관한 전문프로그램이 없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시설은 보육교사와 아동과 함께 숙식하면서 생활하는 스킴제도나 부적응 아동을 위한 자체 프로그램 등을 가져야 할 것이다.

□ 자립생활지원금 운영상황

18세 이상 아동이 고교졸업후 자립생활을 위한 취업기술 훈련 등에 지원되는 도비 90만원(99년도 계획)이 지원되나 현실적이지 못한 금액이다. 이것도 98년까지는 20만원밖에 지급되지 않았다. 시는 퇴소후 자활능력이 있을 때까지 일정기간 생활보조금을 지급하고, 직업알선 등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 보육시설 퇴소대상자 수용대책

영아 및 보육시설 원생 중 심신장애자나 연령초과자를 해당시설에 전원 또는 사회복지관을 해야하나 사실상 보호시설이 없고 사회적응능력이 없어 자립생활을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복지부는 보호 및 치료시설이 확보될 때까지 영아보육시설에서 계속 보호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 시설종사자 사기양양 대책 및 전문지식 함양

보육시설 종사자들은 격무로 인해 이직·퇴직율이 높아 평균 근속기간이 2~3년에 불과하며 이러한 잦은 교차교체

는 원생에게 간접적인 피해가 되고 있다. 원생들에 대해 일반 가정의 아동같이 안정적인 보호가 이뤄질 수 있도록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이 필요하다.

□ 사회복지법인 운영

매년 말 정기이사회를 개최하여 당해 연도 결산 및 다음 연도 예산과 시설운영계획을 의결해야 하나 이사회 구성이 회의소집시 참석이 어려운 타지역 거주자 또는 친인척 관계에 의해 구성되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매년 2월경에 이사회가 개최되어 1~2월은 무계획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사회는 책임관계 분명한 이사회를 구성하고 법인수익사업이나 재산관리에 투명성을 기해야 할 것이다. <끝>

“안 싸우면 희망없다”

도대 건설노동자 들고 일어나

건설일용직 노동자들이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서 들고 일어났다. 전북지역전기원노동조합(전기원 노조)과 전주시역 건설일용노동조합은 고용실업대책전북도민운동본부와 함께 지난 6일 오후 2시 전주 코아백화점 앞에서 ‘공공근로 임금삭감 반대 및 건설노동자 생존권사수 결의대회’를 열었다.

전북지역에서 일용직노동자의 집회로는 처음 열린 이날 집회에는 100여명의 노동자들이 참석하는 열의를 보였다.

전기원노조 위원장 정광수씨는 투쟁사를 통해 “IMF 이후 가장 타격을 받은 노동자가 바로 건설일용 노동자들인데도 건설노동자들은 4대 사회보장제도에서조차 완전히 소외되어 있는데, 98년 10월 1일 모든 노동자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겠다고 정부는 발표했지만 일용직 노동자의 경우 한 사업장에서 30일 이상 일해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해 결국 일용직 노동자에게는 고용보험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됐다”고 분노했다.

또 “일용직 노동자는 일자리가 없으면 당장 생존에 위협이 오는데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직능별 건설일용노동자에 대한 실태파악조차 하지 않고 없다”면서 지방자치단체를 규탄했다.

정위원장은 “이렇게 건설노동자들이 천대받고 있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단결하지 못했던 결과이기도 하다”는 자기고백과 함께 “싸우지 않으면 희망은 없으니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건설노동자들이 똘똘 뭉쳐 생존권을 지켜내자”고 호소했다.

한편 이날 집회에는 건설노동자의 자녀가 나와 아버지에게 드리는 편지를 낭독하고 이어 그의 아버지가 단상에 나와 결의문을 낭독해 보는이의 눈길을 끌었다.

노동자들은 ▲공공근로 임금삭감 철회 (2면에서 이어짐→)